

2021년 가을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연구논문】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측화? 지방정치의 실체와 작동
박영환 / 1
-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 · 허재영 / 37
- 한·중관계 정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장영덕 / 77
-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김대환 · 한상용 / 107
- 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지
논쟁과 미중 관계에의 함의 은진석 · 이정태 / 135
-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확장통화 심리도식치료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
권문선 · 최성진 / 167
- 교사의 청담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
: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년미 · 이명신 · 홍은솔 / 197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윤유라 · 이은주 / 229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박효은 · 정난희 · 조항 / 255

【연구경향】

-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활용한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신정환 · 박종규 / 279
-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 -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을 중심으로
김준석 · 구분상 · 최준영 / 309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차 례

【연구논문】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측화? 지방정치의 실제와 작동 박영환 / 1
-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허재영 / 37
- 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장영덕 / 77
-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 김대환·한상용 / 107
- 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논쟁과 미중 관계에의
함의 은진석·이정태 / 135
-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화상통화 심리도식치료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 권문선·최성진 / 167
-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난미·이명신·홍은솔 / 197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 윤유라·이은주 / 229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박효은·정난희·조 항 / 255
---	-------------------

【연구경향】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활용한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신창환·박중규 / 279
---	---------------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 -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을 중심으로	김준석·구본상·최준영 / 309
---	-------------------

『연구방법논총』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339
『연구방법논총』저술 윤리강령	346
『연구방법논총』편집 및 심사 규정	348
『연구방법논총』편집위원명단	352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 2021 Fall Vol.6, No. 3 |

- Local Politics Is Subjected to National Politics? Reality of Local Politics and How It Works
Young Hwan Park / 1
- The Determinants of U.S. Congress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Yoonshin Pyo · Jaeyoung Hur / 37
- Ideological Discrepancy in Media Coverage on ROK–China Controversy
: Comparative Analysis on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Deployment
Youngduk Jang / 77
- Changes i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Class Elevation in Korean Society
Daehwan Kim · Sangyong, Han / 107
- How does Science become Politics?
: An Implication of COVID–19's Origin Controversy on US–China Relations
Jinseok Eun · Jung Tae Lee / 135
- The Effect of Schema Therapy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Video Conferencing Schema Therapy Program Group –
Mun Sun Kwon · Seong Jin Choi / 167
- The Relations of Belief in a Just World, Depression among Teacher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Nanmee Yang · Myunghsin Lee · Eunsol Hong / 197
- Service Strategies and Policies of Librari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Youra Youn · Eun-Ju Lee / 229
- A Survey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Hyooun Park · Nan Hee Jung · Hang Jo / 255
-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hom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hanghwan Shin · Jungkyu Park / 279
- Explaining Whether and How to Vote : Confidence in Early Voting and Voting Method Selection
Junseok Kim · Bon Sang Koo · Jun Young Choi / 309



KYUNGPPOOK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

【연구논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측화? 지방정치의 실제와 작동*

박영환**

논문요약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실용성을 증시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구성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발시킨다. 선거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는 지역의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특징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의 본질은 정당과 이념을 증시하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경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 본 논문은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요인으로 정당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규모가 작은 공동체와 후보 선택에서 후보의 능력과 자질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지방정치, 중앙정치, 경영적 정치, 실존적 정치, 공동체 크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2243)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구성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발시킨다. 선거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는 지역의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특징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의 본질은 정당과 이념을 중시하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경영적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 본 논문은 역대 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1대 ~ 7대)를 활용하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1952년 이후부터 시작된 지방선거의 여정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잠시 중단되는 아픔도 경험하였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착근되어 일상으로서 지방정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나 언론에서의 지방정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냉혹하다. 한마디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방정치의 주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에게 이런 평가는 당혹스럽다.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는 지역사무와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며 지역 주민과 긴밀한 정치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적 반응성이 어떤 곳에서보다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였던 지방정치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그 자율성이 무시되고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체와 퇴행을 불러올 만큼 우리를 낙담시키고 있다. 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주의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재평가와 실체를 찾는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하부적 수준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규모에 주목을 한다. 공동체의 크기는 정치의 본질을 규정하며 이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본질이 지방정치의 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지역 하부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연관하여 토론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지방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개의 경쟁적인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주류적인 시각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가설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치는 독자성이 없는 존재로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치의 이념적 대립과 당파 간 경쟁이 지방정치에 그대로 재현되어 전국적인 쟁점이 지방의 이슈를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강신구 2014; 강원택 2010; 김진하 2010; 류재성 2010; 유성진 2014; 윤종빈 2019). 그 결과 지방정치는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중앙정치에 종속화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는 한국 정치문화의 중앙집중화 경향에서 잘 드러난다.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그의 역작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동질성이 응집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원자화된 단위들의 유동성 흐름을 조장시켰으며, 원자화된 개체들은 단 하나의 극점을 향해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형성해 중앙 집중의 현상을 낳는 것이다(헨더슨 2013). 즉 한국은 안정적인 영토의 경계선 위에 왕권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인종, 언어, 문화의 동질성과 보편적 가치 시스템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지방 세력의 성장을 배제한 농업국가로서 중앙집권적 지배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헨더슨 2013, 35). 지방세력 성장의 억제는 촌락과 왕권 사이의 중간매개집단의 결여로 인한 결과이었고, 한국 사회의 개인들은 국가권력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원자화된 개체로 남게 되었다(헨더슨 2013, 38). 원자화된 단위의 사회에서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 정책적 차이, 이념적 갈등, 계급적 대립 등으로 인한 균열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원자화된 개인들의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되어 사회의 모든 활동적 요소들이 오로지 중앙권력을 향해 휘몰아가는 소용돌이 현상만 나타난다는 것이다(헨더슨 2013, 657). 정리하면 한국 정치문화의 단일성, 동질성, 통일성과 중앙 집중화 경향이 지방적 수준에서 자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간집단의 결여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권력의 말살로 이어져 비경쟁적인 중앙관료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헨더슨의 이와 같은 논지는 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경쟁가설로 지방정치의 제한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가설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지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지방선거의 투표선택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행태, 지방선거에서 현직자의 높은 재선을 등은 중앙정치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지방정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예라는 것이다(윤종빈 2019; 장승진 2019; 지병근·차재권 2018).

기존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히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가설은 지방정치의 분석수준을 전국적 수준에서 권력과 통치의 속성으로 접근하여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정치의 의미를 탐색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지방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의 시도를 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정치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지방정치의 영향력과 자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에 입각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리버(J. Eric Oliver) 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올리버 외(2012)에 의하면 지역 고유성은 지방정치의 본질을 밝히는 주요 단서이다. 지역 고유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size)이다. 여기서 규모는 어떤 지역의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Oliver et al. 2012, 16).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역 고유성의 수준이 달라진다. 공동체의 규모가 작으면 구성원의 수도 적고 공동체의 권한 범위도 한정적이고 공동체 내 편향¹⁾도 낮다. 이런 특성들은 정치의 본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된다. 올리버 외에 따르면 공동체의 규모가 큰 곳에는 실존적(existential) 정치가, 반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곳에는 경영적(managerial) 정치가 나타난다.

실존적 정치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나가려는 개인의 의식이 정치의 기저를 형성한다. 이런 인간관 하에서 정치는 정체성의 경쟁을 펼 수밖에 없다(Oliver et al. 2012, 27). 따라서 실존적 정치에서는 국가의 근본적인 통치의 방향,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 공동체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런 논쟁은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한 것임이 틀림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양상이 실존적 정치의 대표적인 예이다(Oliver et al. 2012).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정체성과 이념의 경쟁이다. 각 후보 진영은 보다 바람직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통치 이념과 국정 원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는 후보를 지지하며 대통령 선거를 한층 뜨겁게 달군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는 어느 수준의 선거보다 격렬하게 각 진영 간 이념적 대결이 펼쳐지고 당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실존적 정치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적 정치는 개인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정치이다(Oliver et al. 2012). 일상생활의 정치에서는 실용성이 중요하다. 소규모의 지역에서 주요 이슈들은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이나 생활복지형 사안들이고 이런 이슈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은 지역 구성원들 간의 당파성 및 이념적 경쟁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지역 현안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강한 협력적 동기를 부여한다. 지역의 개발사업,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 교량 및 도로 건설, 주차장 시설

1) 편향은 지역 내 지방정부에 의해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편익과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을 의미한다(Oliver et al. 2012, 35).

확대, 공원 유치, 체육관 건립, 생활하수 처리 문제, 교통 문제 등은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현안들로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만든다. 경영적 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초 단위의 지방선거이다. 기초 단위의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들은 위에서 열거한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들이 주를 이루며, 지역의 대표자로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이런 현안이나 민원을 담은 공약들을 선거에 내세우며 경쟁한다. 지역민들은 후보자의 정체성, 이념, 당파성에 근거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적합한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

본 논문은 경영적 속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는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한다. 국가, 광역시, 도와 같은 규모가 큰 지역과 달리 읍면지역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실용성 위주의 생활정치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생활정치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방정치의 영역이다. 지방정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지방의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중앙정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치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소규모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의 현안과 각종 민원 해결에 우선권을 두고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의 주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후보의 이념이나 정당은 지방선거의 선택에서 후순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정당이나 이념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위의 가설 검증을 통해 정당이나 이념과 같은 중앙정치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지방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데이터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다. 역대 전국동시 지방선거(1995년 1회 ~ 2018년 7회)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피하고자 한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중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를 통해 확보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조사를 수행한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2. 분석모델과 변수측정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와 지방정치의 자율성의 관계에 주목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 선택의 요인에 대한 공동체의 규모의 영향력을 다음의 회귀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text{후보 선택 요인} = \text{공동체의 크기} + \text{정치적 변수들} + \text{인구사회적 변수들} \text{ ---식(1)}$$

식(1)에서 후보 선택 요인은 종속변수로 정당, 후보의 능력과 자질(도덕성),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가 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된다. 독립변수는 공동체의 크기로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광역시로 대별되는 이원변수이다(읍면지역 = 1, 중소도시+광역시 = 0).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거연구에서 후보 선택 요인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정치적 변수와 인구사회적 변수로 나누어

식(1)의 회귀분석 모델에 통제를 한다.

위의 회귀분석 모델에 기초하여 관련 변수들의 목록을 <표 1>에 정리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표 1>의 변수목록 중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인구사회적 변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에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목록이지만 정치적 변수는 위의 설문조사에 따라 각 선거별 회귀분석 모델에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 변수들의 설문문항들이 7개의 선거 설문조사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1>의 정치적 변수들은 후보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통계모형이라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의 목록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표 1> 각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기본목록

변수의 성격		변수명
종속변수		후보 선택 요인
독립변수		공동체의 크기
통제변수	정치적 변수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가깝게 느끼는 정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가 경제상황 평가
		이념 강도
	인구사회적 변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종속변수인 후보 선택 요인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중앙정치는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실존적 영역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지켜야 하는 명분을 두고 정당 간 경쟁과 이념적 대결이 치열하게

떨어지는 곳이 중앙정치이다. 후보 선택 요인 중 정당 요인은 바로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방정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경영적 정치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영적 정치는 명분이나 이념, 가치, 정체성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이다. 실용성은 현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념적 관점이나 정당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정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소규모 공동체의 현안 해결은 이념이나 당파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자질을 갖춘 대표자의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 선택 요인 중 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바로 지방정치의 속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공동체의 크기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정치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동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성원의 구성이나 선호가 동질적이고 공동체 내 편향성도 덜하다.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는 경영적 요소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곳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동질적인 인구구성과 선호의 무차별성, 낮은 편향으로 인해 정체성이나 가치, 이념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파적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상적 삶의 이슈를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이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는 경영적 측면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에 공동체의 크기는 그 규모에 따라 읍면지역, 중소도시, 광역시로 분류하고 작은 공동체의 영향력을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읍면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유형을 나누는 이원변수로 측정한다.

각 회귀분석 모델에서 기대하는 통제변수들, 그중에서도 정치적 변수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투표참여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이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이끈다면 후보 선택 요인과의 어떤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변수들과 독립변수의 관계도 생각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지방선거와 일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거관심과 정치관심을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유권자들이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의 존재 유무는 종속변수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가까운 정당이 있다고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는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한 국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국가적 수준에서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중앙정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의 관련성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국가 경제상황의 평가와 종속변수의 연관성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에서 논의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이슈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상황 평가와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 사이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념의 강도는 중앙정치와 바로 연결되는 변수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실존적 정치로서 중앙정치는 정파 간 이념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역이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선거관련 선행연구에서 통제모형에 통제하는 기본적인 변수들로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을 고려한다.

IV. 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어진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까지 양변인 분석을 실시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와 방향, 강도를 시계열적으로 조사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각각의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1. 교차분석

본 논문의 연구주제는 후보 선택 요인에 대한 공동체의 크기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중앙정치와 별도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자율성, 그리고 지방정치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비분석으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 관계의 유의미성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차분석 실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의 시계열적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시계열적 자료분석을 통해 교차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피하고자 한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에서 우선 순위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실용성을 앞세우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반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정체성을 중시하는 실존적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모가 큰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차분석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공동체 규모별 중앙정치의 속성을 내포한 정당요인, 그리고 지방정치의 속성을 내포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후보 선택 비율이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볼 것이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부록 <표 A-1> ~ <표 A-7>에 보고하고 있다.

<표 A-1>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²⁾ 먼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규모 중 정당을 후보 선택의 요인으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도시(25.6%)이고 다음으로 군읍면(21.3%), 마지막으

2)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문항인 후보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 동일한 설문문항과 동일한 응답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하나의 문항으로 해당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을 물어보고 있다.

로 대도시(19.2%)이다. 인물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도시(47.5%), 다음으로 중소도시(46.6%), 마지막으로 군읍면(44.5%)이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뽑은 지역은 대도시(22.8%), 다음으로 중소도시(19.9%), 군읍면(15.8%) 순이다. 인물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뽑은 지역은 군읍면(48.5%)이고, 다음으로 중소도시(48.1%), 대도시(36.1%) 순이다. 정리하면, 기초수준의 선거에서는 이론적 주장과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물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꼽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으로 꼽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 요인의 우선순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chi^2 = 24.6149$, $p=0.006$). 반면 광역수준의 선거의 결과는 복잡하다. 공동체의 규모와 정당 요인의 선택에서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공동체의 규모와 인물 선택과의 관계는 이론적 주장과 반대로 역비례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광역수준의 선거와 비교해서 기초수준의 선거가 선거의 규모상 더 지방적 수준에서 부합하는 선거이며, 그 결과 기초수준의 선거에서 전형적인 지방정치의 모습이 현저히 나타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

〈표 A-2〉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도 공동체 규모별 후보 선택 요인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주고 있다($\chi^2 = 35.8219$, $p=0.001$).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즉 군읍지역에서 중소도시, 대도시로 올라갈수록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뽑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각각 21.7%, 19.4%, 10.7%),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군읍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을 후보 선택으로 뽑는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다(각각 24.0%와 27.1%, 23.9%와 27.8%, 22.3%와 25.0%).³⁾

3)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규모별 후보 선택 요인으로 능력을 뽑은 빈도율을 자세히 보면 중소도시와 군읍지역이 각각 27%대로 동일하나 소수점 이하에서 0.7%의 미세한 차이로 중소도시의 빈도율이 약간 더 높다.

〈표 A-3〉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관련성을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읍면리<중소도시<대도시) 정당을 후보 선택으로 뽑는 비율이 가장 높다(15.2%<26.6%<33.0%). 한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고려한 지역은 51.2%의 읍면리이고, 다음으로 대도시가 40.5%, 중소도시가 37.0% 순이다.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의 능력/도덕성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모습을 띠지는 않지만 규모가 작은 읍면리에서 지방정치의 전형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chi^2 = 56.6364$, $p=0.000$)

〈표 A-4〉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4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도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규모별로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체 크기에 따라 고려하는 후보 선택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확인시켜주고 있다($\chi^2 = 38.5800$, $p=0.000$). 구체적으로 빈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당 선택 요인이 공동체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19.6%<38.7%<40.9%) 반면 지방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후보 능력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41.4%>25.5%>23.0%). 한편 도덕성도 후보의 자질을 나타내는 요인인데 도덕성 요인의 빈도율을 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 모두 7%대의 빈도율을 보이지만 소수점 이하에서 0.04%의 차이로 대도시가 약간 높은 빈도율을 보인다.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도덕성의 빈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성 요인의 경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빈도수가 각각 10개로 사례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A-5〉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5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크기에 따라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비적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체 규모별로 고려하는 후보 선택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확인시켜주고 있다($\chi^2 = 42.1400$, $p=0.000$). 공동체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 빈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치의 본질을 잘 대변하는 정당 선택요인이 공동체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12.6%<22.4%<31.0%). 반면 지방정치의 본질을 잘 대변하는 후보 능력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순서대로(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41.8%>27.3%>17.5%). 도덕성도 후보의 자질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도덕성 요인의 빈도율을 보면 중소도시에서 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읍면지역이 8.7%, 대도시가 8.0% 순으로 나타난다.

〈표 A-6〉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지 않은 교차분석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당을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읍면지역이며, 후보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후보 선택으로 가장 많이 고려한 지역은 중소도시였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 규모별로 후보 선택 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chi^2 = 2.1643$, $p=0.706$).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규모에 따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의 후보 선택 요인의 빈도율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36.5%, 중소도시에서 36%, 대도시에서 27.5%의 빈도율을 보임으로써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정치의 속성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 후보 선택에 있어 높은 고려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속성인 정당 요인은 공동체 규모별로 뚜렷한 선형적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정당 요인의 빈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두 번째 순위는 중소도시가 아니라 읍면지역에서 정당요인의 빈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chi^2 = 7.5498$, $p=0.110$).

교차분석의 마지막 결과가 <표 A-7>에 보고되고 있다. <표 A-7>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요인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7회 지방선거의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규모별로 정치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정당을 많이 고려하였다(대도시: 36.0%, 중소도시: 30.2%, 읍면지역 16.2%).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 요인으로 후보 능력을 많이 고려하였다(읍면지역: 43.2%, 중소도시: 26.1%, 대도시 18.8%). 카이제곱 검정결과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후보 선택을 고려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다른 후보 선택 요인으로 이념은 정당 요인과 함께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는 반대로 역비례적인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도덕성은 후보의 능력과 함께 지방정치의 속성을 보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교차분석 결과 역시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과 반대로 역비례적인 선형관계를 보고하고 있다(읍면지역 <중소도시<대도시). 그러나 이념과 도덕성의 낮은 사례 수는 통계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역대 지방선거에서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가설에서 주장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이 예측대로 강력히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공동체의 규모별에 따라 후보 선택의 고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대 7번의 동시지방선거 중 5번의 동시지방선거(2회, 3회, 4회, 5회, 7회)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일수록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2번의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 수준의 지방선거에서는 소규모 공동체와 후보의 자질 및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후보 선택의 요인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위해 선거상황에서 후보 선택과 관련한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계열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통계 분석모델을 통해서 설명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3개의 유형(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과 자질, 3=그 외 요인, 기준범주는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정당 요인과 후보의 능력/자질 요인에 대한 공동체 규모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데 있으므로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다(즉 그 외 요인에 관한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2〉는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인물, 즉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양(+)¹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하였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의 회귀계수는 양(+)²의 값을, 그리고 가까운 정당의 회귀계수는 음(-)³의 값을 가지는데, 이 두 정치적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반대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당 요인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기타 다른 통제 변수들 가운데 연령과 학력의 변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당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인물, 즉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적 방향대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제변수들 가운데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 가까운 정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후보 선택에 정당을 더 고려함을 의미한다.

〈표 3〉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이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록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더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와 가까운 정당의 회귀계수가 각각 양과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리고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을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는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인물,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적 방향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크기가 작은 지역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반대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5〉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과 방향이 가설의

내용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선거관심과 연령 변수인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6〉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가설의 내용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들 가운데 가까운 정당 변수만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후보 선택에 있어 더 고려한다.

〈표 7〉은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가운데 가까운 정당 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 국가 경제상황 평가 변수, 소득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후보 선택 시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범주를 정당 요인으로 놓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선택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 값은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까운 정당과 국가 경제상황 평가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는데, 가까운 정당이 있을수록, 그리고 국가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8〉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당 요인을 기준범주로 설정했을 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의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읍면지역의 회귀계수는 이론적 예측대로 양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후보 선택 시 정당 요인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이념 강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연령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한 이념을 갖고 있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후보 선택 시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정당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의 역대 지방선거의 회귀분석 모델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공동체의 규모와 후보 선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회와 7회의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5번의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으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소규모 공동체의 독립적이고 일관적인 강력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특히 시계열적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경영적 정치가 나타나는 소규모의 공동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지방정치에서 현저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하부적 수준에서는 중앙정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가 엄연히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표 2〉 다항 로지스틱 분석: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준범주: 정당 요인		기준범주: 정당 요인	
	인물	그 외 요인	인물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102(0.208)	0.035(0.220)	0.247(0.225)	-0.001(0.237)
광역 선거관심	0.272*(0.120)	-0.148(0.125)	-0.222(0.127)	-0.200(0.129)
기초 선거관심	-0.085(0.106)	0.156(0.115)	0.391****(0.112)	0.195(0.113)
정치관심	-0.084(0.103)	-0.178(0.110)	-0.021(0.108)	-0.085(0.112)

가까운 정당	-1.236***(0.205)	-1.372***(0.213)	-1.736***(0.245)	-2.161***(0.24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92(0.109)	0.188(0.119)	0.366***(0.116)	0.256*(0.120)
국가 경제상황 평가	-0.092(0.095)	-0.019(0.103)	-0.031(0.100)	0.024(0.104)
연령	0.168*(0.082)	-0.013(0.088)	0.087(0.086)	0.073(0.089)
여성	0.084(0.179)	0.338(0.191)	-0.144(0.188)	0.235(0.195)
학력	0.292*(0.141)	0.160(0.151)	-0.098(0.148)	-0.150(0.154)
소득	0.087(0.064)	0.056(0.068)	0.002(0.067)	0.061(0.070)
상수	-0.414(0.736)	0.821(0.776)	0.691(0.783)	1.600*(0.804)
사례수	1,050		1047	
Pseudo R ²	0.0507		0.0731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인물,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5=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매우 적다 ~ 5=매우 많다
가까운 정당	1=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 0=없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못한다 ~ 5=매우 잘한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많이 나빠졌다 ~ 5=많이 좋아졌다
연령	1=20대, 2=30대, 3=30대, 4=50대 이상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29만 원, 3=130-150만 원, 4=160-219만 원, 5=220만 원 이상

〈표 3〉 다항 로지스틱 분석: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921**	0.291	0.962**	0.308
광역 선거관심	-0.158	0.169	-0.307	0.184
기초 선거관심	0.314*	0.162	0.289	0.178
가까운 정당	-1.064***	0.218	-0.997***	0.234
이념 강도	-0.096	0.089	0.040	0.098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001	0.005	0.0004	0.006
연령	0.007	0.009	-0.006	0.010
여성	0.002	0.204	0.164	0.221
학력	0.119	0.137	0.137	0.151
소득	0.134	0.084	0.030	0.093
상수	0.284	0.878	0.415	0.968
사례수	774			
Pseudo R ²	0.0380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가까운 정당	어느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1=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0=없다
이념 강도	1=중도적이다 ~ 3=상당히 진보적/보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아주 불만족 ~ 100=아주 만족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초등학교 이하 2=중졸 이하, 3=고졸 이하, 4=대재 이상
소득	1=70만 원 미만, 2=7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99만 원, 5=300-399만 원, 6=400만 원 이상

〈표 4〉 다항 로지스틱 분석: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852***	0.215	0.595**	0.230
광역 선거관심	-0.285*	0.144	-0.336*	0.154
기초 선거관심	0.325**	0.139	0.123	0.149
연령	-0.002	0.007	-0.012	0.007
여성	-0.144	0.172	0.066	0.185
학력	-0.145	0.096	-0.156	0.105
소득	-0.004	0.036	-0.075	0.040
상수	0.671	0.564	1.770	0.608
사례수	774			
Pseudo R ²	0.0380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인물,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광역/기초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4=대졸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49만 원, 5=250-299만 원, 6=300-349만 원, 7=350-399만 원, 8=400-449만 원, 9=450-499만 원, 10=500만 원 이상

〈표 5〉 다항 로지스틱 분석: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164***	0.268	0.862**	0.285
선거관심	0.401**	0.153	-0.029	0.154
가까운 정당	-0.284	0.214	-0.153	0.218
이념 강도	-0.123	0.109	-0.066	0.1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030	0.148	0.215	0.152
연령	-0.024*	0.010	-0.023*	0.010
여성	0.280	0.206	0.373	0.210
학력	-0.346	0.188	0.029	0.199
소득	-0.009	0.045	0.027	0.046
상수	0.797	0.987	0.305	1.012
사례수	616			
Pseudo R ²	0.0457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1=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 3=매우 진보적/보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49만 원, 3=150-199만 원, 4=200-249만 원, 5=250-299만 원, 6=300-349만 원, 7=350-399만 원, 8=400-449만 원, 9=450-499만 원, 10=500만 원 이상

〈표 6〉 다항 로지스틱 분석: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379***	0.389	0.693	0.409
선거관심	0.075	0.163	0.171	0.162
정치관심	-0.150	0.172	-0.161	0.169
가까운 정당	-0.497*	0.218	-0.979***	0.212
이념 강도	-0.123	0.113	-0.167	0.1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31	0.138	0.155	0.136
국가 경제상황 평가	-0.139	0.156	0.070	0.151
연령	0.010	0.008	-0.018	0.008
여성	0.012	0.213	0.173	0.207
학력	-0.212	0.119	-0.198	0.116
소득	0.067	0.061	0.029	0.059
상수	0.769	0.856	1.980**	0.846
사례수	680			
Pseudo R ²	0.0501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전혀 관심이 없다 ~ 4=매우 관심이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1=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 3=매우 진보적/보수적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학, 4=4년대재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만 원 이상

〈표 7〉 다항 로지스틱 분석: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준범주: 정당 요인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 자질	그 외 요인	후보의 능력, 자질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0.041(0.311)	-0.492(0.387)	0.388(0.299)	-0.248(0.401)
선거관심	0.002(0.137)	0.515**(0.165)	0.146(0.136)	0.368*(0.170)
가까운 정당	-0.490**(0.189)	-1.014****(0.222)	-0.368*(0.188)	-1.101****(0.231)
이념 강도	0.071(0.052)	-0.174**(0.059)	-0.015(0.050)	-0.160**(0.06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287*(0.151)	0.395*(0.181)	-0.277(0.148)	0.244(0.187)
국가 경제상황 평가	-0.412**(0.169)	-0.522**(0.200)	-0.659****(0.169)	-0.507****(0.207)
연령	-0.001(0.008)	-0.014(0.010)	-0.006(0.008)	-0.015(0.010)
여성	-0.003(0.184)	0.057(0.219)	-0.292(0.183)	-0.012(0.228)
학력	0.106(0.106)	0.368**(0.126)	0.152(0.104)	0.259*(0.130)
소득	0.145*(0.067)	-0.108(0.084)	0.111(0.067)	-0.106(0.087)
상수	-0.195(0.834)	-0.988(1.010)	0.866(0.829)	0.013(1.045)
사례수	725		725	
Pseudo R ²	0.0661		0.0666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선거관심	1=전혀 없었다 ~ 4=매우 많았다
정치관심	1=전혀 관심이 없다 ~ 4=매우 관심이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0(진보)에서 10(보수)까지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1= 5, 2=(4,6), 3=(3,7), 4=(2,8), 5=(1,9), 6=1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중졸 이하, 2=고졸 이하, 3=전문대학 이하, 4=4 년제 대학 이상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만 원 이상

〈표 8〉 다항 로지스틱 분석: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범주: 정당 요인			
	후보의 능력과 자질		그 외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읍면지역	1.070*	0.466	0.079	0.512
정치관심	0.105	0.171	-0.398*	0.172
가까운 정당	0.013	0.220	-0.203	0.216
이념 강도	-0.114*	0.052	-0.043	0.05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535***	0.187	-0.170	0.189
국가 경제상황 평가	0.144	0.191	0.197	0.190
연령	-0.019*	0.010	-0.025***	0.009
여성	-0.042	0.216	-0.508*	0.219
학력	-0.147	0.126	-0.117	0.127
소득	0.086	0.062	-0.050	0.065
상수	2.534*	1.122	3.560***	1.117
사례수	605			
Pseudo R ²	0.0337			

***p<0.001, **p<0.01, *p<0.05

〈변수측정〉

변수명	측정방법
후보 선택 요인	1=정당, 2=후보의 능력, 도덕성, 3=그 외 기타
읍면지역	1=읍면지역, 0=그 외 지역
정치관심	1=전혀 없다 ~ 4=매우 많다
가까운 정당	1=있다, 0=없다
이념 강도	0(진보)에서 10(보수)까지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1= 5, 2=(4,6), 3=(3,7), 4=(2,8), 5=(1,9), 6=1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하고 있다 ~ 4=매우 잘하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 평가	1=나빠졌다 ~ 3=좋아졌다
연령	현재 나이
여성	1=여성, 0=남성
학력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전문대학교 재학/졸업, 5=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6=대학원 재학/졸업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199만 원, 3=200-299만 원, 4=300-399만 원, 5=400-499만 원, 6=500-599만 원, 7=600-699만 원, 8=700-799만 원, 9=800-899만 원, 10=900-999만 원, 11=1,000만 원 이상

V. 결론

정치의 본질은 공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정치는 정체성의 경쟁으로 정파 간의 극심한 경쟁과 이념적 대립이 펼쳐진다. 각 세력이나 정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은 각 집단의 정체성으로 인해 상호 이질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거승리를 위해 치열한 선거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선거에서는 명분과 원칙, 가치가 중요하다. 반면 지방적 수준, 특히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는 작동하는 정치는 구성원의 일상적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생활의 정치에서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며 정치 작동의 운영원리로 실용성이 중요해진다. 지역의 각종 현안(도로 및 다리 건설, 쓰레기 문제, 공원·체육시설·문화시설 건립, 주차장 문제, 세금 문제, 생활복지 등)에 직면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치는 경영적 측면의 문제이지 실존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념, 가치, 명분, 정체성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요소가 되며 공동체를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이론적 논리의 구성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모습을 상정하고 실제 선거에서 공동체의 규모가 후보 선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택 요인 중 유권자들이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고려한다면 자율적인 모습으로서의 지방정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속성을 구분하는 주 요인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인구적 구성이 동질적일 뿐만 아니라 선호구성도 동질적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 편향성도 덜할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정치는 가치나 정체성이 충돌하고 이념이 대립하는 경쟁의 정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삶은 구성원들에게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므로 일상적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곧 공동체의 현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정치인의 중요한 조건은 능력과 자질일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는 실용적 문제해결을 특징으로 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나는 영역이라 말 할 수 있고, 이런 경영적 정치의 모습은 지방정치의 본질과 유사하다. 지방정치는 지역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의 본질은 지방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시계열적 데이터(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통계분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가설을 지지하였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후보 선택에 있어 중앙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정당 요인보다 지방정치의 속성을 나타내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주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적 결과는 총 일곱 개의 회귀분석 모델 중 다섯 개의 회귀분석 모델에서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일반화된 경험적 결과는 우리에게 중앙정치의 예측화로 지방정치를 바라보고 이해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하여 지방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지방정치의 고유성에 주목을 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에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정치의 긍정적 역할을 가져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양극화 심화는 중앙정치의 과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진영 간 끊임없는 이념적 대립과 당파적 경쟁은 집단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앙정치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용성에 기반한 문제해결로써의 지방정치 관점은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정쟁과 정치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지역적 하부수준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고화를 이루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지방정치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조사 시 설문문항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설계

하여 지방정치의 본질과 고유성, 자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방정치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신구. 2014.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 대리전인가?” 『OUGHTOPIA』 제29권 2호: 65-93.
- 강원택. 2010.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대리전? 1998년 지방선거.” 『한국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 그레고리 핸더슨 저·이종삼·박해웅 옮김. 2013.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파주: 한울 아카데미.
-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 지방선거 분석: 서울시장 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5-32.
- 류재성. 2010. “제5회 영남지역 지방선거 결과 분석: 지역패권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의정논총』 제5권 2호: 189-223.
- 유성진. 2014.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한계와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5호: 97-117.
- 윤종빈. 201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 윤종빈·박지영 편. 『민주주의의 두 얼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유권자,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 서울: 푸른길, 12-40.
- 장승진. 2019. “한국 지방선거의 다층적 회고적 회고적 투표.”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1호: 5-28.
- 지병근·차재권. 2018. “유권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인식과 행태.”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1호: 135-163.
- Oliver, J. Eric, Shang E. Ha, and Zachary Callen. 2012. *Local Elections and Politics of Small-Scale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부록

〈표 A-1〉 교차분석: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정당	공약 청견	인물	주위 사람 권유	인연	별 생각 없이	합계
광역	대도시	99 (19.2)	146 (28.3)	245 (47.5)	21 (4.1)	2 (0.4)	3 (0.6)	516 (100)
	중소도 시	67 (25.6)	60 (22.9)	122 (46.6)	8 (3.1)	1 (0.4)	4 (1.5)	262 (100)
	군읍면	58 (21.3)	60 (22.1)	121 (44.5)	14 (5.2)	5 (1.8)	14 (5.2)	272 (100)
	합계	224 (21.3)	266 (25.3)	488 (46.5)	43 (4.1)	8 (0.8)	21 (2.0)	1,050 (100)
	카이 제곱 검정	$\chi^2 = 33.1828, p=0.000$						
기초	대도시	117 (22.8)	132 (25.8)	185 (36.1)	36 (7.0)	19 (3.7)	24 (4.7)	513 (100)
	중소도 시	52 (19.9)	60 (22.9)	126 (48.1)	10 (3.8)	6 (2.3)	8 (3.1)	262 (100)
	군읍면	43 (15.8)	56 (20.6)	132 (48.5)	20 (7.4)	14 (5.2)	7 (2.6)	272 (100)
	합계	212 (20.3)	248 (23.7)	443 (42.3)	66 (6.3)	39 (3.7)	39 (3.7)	1,047 (100)
	카이 제곱 검정	$\chi^2 = 24.6149, p=0.006$						

〈표 A-2〉 교차분석: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당	도덕성	능력	출신 지역	정책/정견	선거법 준수 여부	지역 발전 기대	기타	합계
대도시	99 (21.7)	102 (22.3)	114 (25.0)	15 (3.3)	40 (8.8)	1 (0.2)	66 (14.4)	20 (4.4)	457 (100)
중소도시	65 (19.4)	80 (23.9)	93 (27.8)	9 (2.7)	16 (4.8)	2 (0.6)	61 (18.2)	9 (2.7)	335 (100)
군읍지역	24 (10.7)	54 (24.0)	61 (27.1)	10 (4.4)	7 (3.1)	0 (0.0)	56 (24.9)	13 (5.8)	225 (100)
합계	188 (18.5)	236 (23.2)	268 (26.4)	34 (3.3)	63 (6.2)	3 (0.3)	183 (18.0)	42 (4.1)	1,017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35.8219, p=0.001$								

〈표 A-3〉 교차분석: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공약	정당	인물/능력 (도덕성)	출신 지역	정치 경력	개인적 연고	주위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48 (10.3)	153 (33.0)	188 (40.6)	5 (1.9)	20 (4.3)	2 (0.4)	32 (6.9)	16 (3.5)	464 (100)
중소도시	52 (16.5)	84 (26.6)	117 (37.0)	11 (3.5)	14 (4.4)	3 (1.0)	24 (7.6)	11 (3.5)	316 (100)
읍면리	30 (10.6)	43 (15.2)	145 (51.2)	4 (1.4)	14 (5.0)	9 (3.2)	20 (7.1)	18 (6.4)	283 (100)
합계	130 (12.2)	280 (26.3)	450 (42.3)	20 (1.9)	48 (4.5)	14 (1.3)	76 (7.2)	45 (4.2)	1,063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56.6364, p=0.000$								

〈표 A-4〉 교차분석: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 공약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도덕성	개인적 연고	주변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56 (19.2)	119 (40.9)	67 (23.0)	3 (1.0)	22 (7.6)	7 (2.4)	14 (4.8)	3 (1.0)	291 (100)
중소도시	35 (16.5)	82 (38.7)	54 (25.5)	3 (1.4)	10 (4.7)	1 (0.5)	26 (12.3)	1 (0.5)	212 (100)
읍면지역	23 (17.3)	26 (19.6)	55 (41.4)	2 (1.5)	10 (7.5)	3 (2.3)	13 (9.8)	1 (0.8)	133 (100)
합계	114 (17.9)	227 (35.7)	176 (27.7)	8 (1.3)	42 (6.6)	11 (1.7)	53 (8.3)	5 (0.8)	636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38.5800, p=0.000$								

〈표 A-5〉 교차분석: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 공약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도덕성	개인적 연고	주변의 평가	기타	합계
대도시	126 (34.5)	113 (31.0)	64 (17.5)	4 (1.1)	29 (8.0)	4 (1.1)	22 (6.0)	3 (0.8)	365 (100)
중소도시	100 (30.3)	74 (22.4)	90 (27.3)	10 (3.0)	32 (9.7)	7 (2.1)	15 (4.6)	2 (0.6)	330 (100)
읍면지역	26 (25.2)	13 (12.6)	43 (41.8)	2 (1.9)	9 (8.7)	3 (2.9)	6 (5.8)	1 (1.0)	103 (100)
합계	252 (31.6)	200 (25.1)	197 (24.7)	16 (2.0)	70 (8.8)	14 (1.8)	43 (5.4)	6 (0.8)	798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42.1400, p=0.000$								

〈표 A-6〉 교차분석: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단위: %)

		정책/공약	정당	후보의 능력, 자질, 도덕성	합계
광역	대도시	65 (19.0)	176 (51.5)	101 (29.5)	342 (100)
	중소도시	66 (20.3)	157 (48.3)	102 (31.4)	325 (100)
	읍면지역	11 (14.9)	42 (56.8)	21 (28.4)	74 (100)
	합계	142 (19.2)	375 (50.6)	224 (30.2)	741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2.1643, p=0.706$			
기초	대도시	58 (17.0)	190 (55.6)	94 (27.5)	342 (100)
	중소도시	57 (17.5)	151 (46.5)	117 (36.0)	325 (100)
	읍면지역	10 (13.5)	37 (50.0)	27 (36.5)	74 (100)
	합계	125 (16.9)	378 (51.0)	238 (32.1)	741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7.5498, p=0.110$			

〈표 A-7〉 교차분석: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위: %)

	정책/공약	정당	후보능력	이념	도덕성	출신지역	주변의 평가	합계
대도시	65 (22.3)	105 (36.0)	55 (18.8)	8 (2.7)	31 (10.6)	4 (1.4)	24 (8.2)	292 (100)
중소도시	69 (23.4)	89 (30.2)	77 (26.1)	14 (4.8)	20 (6.8)	0 (0.0)	26 (8.8)	295 (100)
읍면지역	7 (18.9)	6 (16.2)	16 (43.2)	2 (5.4)	2 (5.4)	2 (5.4)	2 (5.4)	37 (100)
합계	141 (22.6)	200 (32.1)	148 (23.7)	24 (3.9)	53 (8.5)	6 (1.0)	52 (8.3)	624 (100)
카이제곱 검정	$\chi^2 = 30.6964, p=0.002$							

Local Politics Is Subjected to National Politics? Reality of Local Politics and How It Works

Young Hwan Park*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ize and candidate selection, and, in doing so, supports the autonomy of local politics. In small-scale communities, the managerial politics that prioritizes practicality is remarkable. Politics in the small-scale community motivates citizens to solve problems of everyday life and encourages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On the ballot, voters in small-scale communities indicate their preference for candidate personality traits rather than political party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ir community problems. All these things relate to the nature of local politics that decentralizes political power to complet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hile local residents fix community problems on their own. In this respect, local politics with managerial aspects actually operates at the subnational level as distinct from national politics with emphasis on political party and ideology. Based on the theoretical arguments, the paper hypothesizes that voters who live in small communities are likely to prioritize more candidate personality traits than their political parties when selecting a candidate in the election. Using the 1st local election ~ the 7th local election surveys, the paper tests the hypothe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confirm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ll community and personal qualities and abilities of a candidate. Through the findings, the paper places an emphasis of the autonomy of local politics and discusses how efforts to revive local politics can bring abou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Keywords : Local Politics, National Politics, Managerial Politics,
Existential Politics, Community Size

투고일: 2021.09.29.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08.

* Instructor, Yeungnam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37>

【연구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표윤신*·허재영**

논문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웬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넣는 2차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2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법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북제재, 미국의회, 입법 결정요인, 2차 제재, 미중관계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수로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6년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 온건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조지 부시 후임인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부터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적용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 도발에 대한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붕괴할 때 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그 후임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북핵 도발에 대한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의 강경 기조를 선언하고,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맞보게 될 것"이라며 단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출범 1년 만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급선회 하며 최대압박 전략을 접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소형 핵탄두를 만들고 ICBM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9번째의 실질적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정치 제도적 특성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 중 하나다. 행정부의 북핵 온건 정책이 계속되면서 미국 의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온건적 태도로 이어지는 동안,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고, 행정부 단독의 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왔다.

대북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 제재는 행정부와 의회 권한 행사에 따른 절충적 결과로,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규정 등을 중심으로 복합적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송인호·박민 2019). 그동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별적 제재는 주로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져왔기에 대북제재에 있어서 입법부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행정부의 온건 전략 속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입법 활동에 나서면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 의회는 더욱 중요한 행위자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bill)들을 꾸준히 발의해왔고 이 중 3개의 법(law)을 통과시켰다.

2006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임에도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온건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부가 대북 온건 정책을 이어온 가운데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국 의회는 북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¹⁾ 미국 의회의 북한 제재 법안은 시기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웨이버 북핵 제재법(S.1790)' 총 3건 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8건의 법안과 달리 3건의 법안이 통과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3개의 법안 통과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요인은 북한의 도발 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법안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 총 4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제재와 대화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법안 제정에 미치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대외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훑아봄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더욱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1) 미국 의회는 법안(bill)외에도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을 제출한다. 이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결의안과 단순결의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합동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을 갖지만 해당 기간 북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동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바 없기에 법안(bill)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II. 미국 의회 대북제재 법안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회의 법안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크게 발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들과 통과 결정요인을 다루는 연구들로 나뉜다. 후술 하겠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대북제재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법안의 통과 결정요인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안을 만드는 의원의 특성 같은 행위자 요인에 집중하는 연구와, 법안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는 연구로 양분된다.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의원들의 소속 정당, 소속 지역구와 상임위 등의 개별적 특성, 이념 등을 살펴본다(Hibbing 1991). 반면 법안의 정책 내용이 법안 통과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정책의 내용과 성격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과 암묵적 합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정하용 2017).

본 연구 역시 대북제재 통과 결정요인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대북제재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만큼 법안 특성으로는 해당 제재가 북한만을 제재하는 1차 제재인지, 제3국을 제재하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인지가 특성을 나누는 가장 큰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미국 시민에 대한 적대 행위 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target)와 교역 등을 할 경우 부과하는 간접 제재를 의미한다.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2차 제재는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Meyer 2009). 이 글에서 1차 제재는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경우이며,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제재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차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제재의 부과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2차 제재의 원인은 더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USA Patriot Act)의 제311조에 근거해 2차 제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북 2차 제재의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제재 파괴자들을 제재의 동참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

도 존재한다(서동찬 2018). 그러나 미국의 대북 2차 제재의 경우 효과성이 없어 보이는 영세 금융기관 위주로 제재가 부과되었다. 임종식과 구갑우(2019)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을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기(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라고 설명한다. 실제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2차 제재의 확대 언급으로 겁을 주면서 북한 비핵화는 물론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2차 제재 법안에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같이 대북 2차제재 대상국과 미국 간의 대외 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결정요인에서 행위자 요인을 보는 연구들은 크게 의원의 정당 당파성, 전문성 및 지역구 등의 개별적 특성, 이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파성을 보는 연구들은 즉 소속 정당의 변수가 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의 발의 법안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야당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진만 2006). 즉 입법과정에서의 당파성은 의회와 견제 대상인 행정부의 관계라는 맥락으로 나타난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못지않게 지역구가 중요한 법안 통과 결정 요인이 된다. 같은 당 의원이라도 해당 지역의 산업 분포, 이민자 분포 등이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FTA 통과 과정에서 양국의 의회 법안 통과 과정을 살펴 본 결과, 한국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가장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지역구가 주요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우 2005). 또한 미국은 한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오래 소속되어 있는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은 물론 입안 과정에 있어서 동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서정건·정진민 2015). 따라서 입법 과정을 끌고 나가는 대표 발의자의 이 같은 개별적 특성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안의 특성 요인 중 제재가 1차 제재인지 2차 제재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외 관계를 법안 통과 결정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자 요인으로는 의원의 소속 정당의 당파성을 바탕으로 의회와 행정부

의 관계, 그리고 발의자 개별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1〉 미국의회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구분

법안 특성 요인	행위자 요인
1. 북한의 도발 여부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당파성)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의원들의 이념도 법안 통과에 있어 주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다(Entman 1983; Eileen 2001).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있어서 소속정당에 따른 투표를 하고 정당이 곧 정책에 대한 이념을 나타내는 양극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NOMINATE’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W-NOMINATE’란 본회의에서 유사한 표결 경향을 보이는 국회의원들끼리 분류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192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의회에서의 표결을 ‘W-NOMINATE’로 분석한 연구는 의원들이 개인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기 보다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집단 투표를 하는 경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Nathan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미국 의회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의 이념을 따로 살펴보기 보다는 정당이 곧 표결에서 개인의 이념을 대표한다고 보고 별도로 이념 요인을 살펴보지는 않는다.

1. 북한의 도발 여부

그동안 제재관련 연구는 제재의 효율성을 논하는 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제재의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특정국가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또는 행동의 변화를 피하기 위한 ‘처벌’로 여겨진다.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국제법적 부합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제재 자체가 적법성과 관련 없이 국제적 처벌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지만 공통점은 특정국가의 잘못된 행동(wrongdoing)이 선행된데 대한 조치라는 점이다(김부찬 2013; Nossal 1989). 제재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이 같은 전제하에 국제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국(sender)이 피제재국(target)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인지, 피제재국에 보복을 하려는 것인지 등으로 제재의 의도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Hafbauer et al 1990; Pape 1997).

제재의 형성 원인에 있어서 특정국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상대국의 보복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양적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엔리코 등의 연구(Enrico et al 2017)는 제재 대상국의 도발정도가 높을수록 제재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유엔 제재사례에 대한 이들의 비교 연구는 북한, 이란, 리비아 등 각 국가의 도발 정도에 따라 유엔 제재가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들은 역사적 이유에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고, 인권 문제나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해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는 합법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제재의 목적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유엔 안보리 역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보 도발에 대한 조치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²⁾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R. 4011)을 제정한 이후 관련법을 연장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재 역시 지속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북한의 안보 도발 분야로 다루는 제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으며 2017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성공 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 더해질 때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제재의 강도를 더해왔다. 유엔은 북한의 수출입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역시 더욱 강화해왔다(임수호 2019). 즉 북한의 핵도발이 강화될수록 유엔의 대북제재 역시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대북제재의 실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단순히 유엔

2)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재를 보완 또는 확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민태은 등 2020, 44-47). 그러나 통념대로 미국 의회가 유엔 제재 방향에 발맞춰 가는 보조적 역할로 입법을 발의한다면, 왜 유엔과 달리 미국 의회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일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전통적인 1차 제재는 피제재국(target)의 국제적 규범 위반과 이에 대한 제재국(sender)의 제재 부과라는 양자 관계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강화를 위해 피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제재가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2차 제재 부과는 북한의 규범 위반이라는 변수 외에 2차 객체(secondary target)라는 외부 변수의 존재가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대북제재를 움직이는 또 다른 변수로 꼽혀왔다. 2018년 기준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은 95.8%로, 2014년도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이후 5년 연속 90%를 웃돌았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미국은 2016년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홍상산업개발공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2017년 미국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전면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한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2차 제재가 역동적인 미중관계 속에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는 북한보다는 중국 은행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2017년 단둥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 역시 중국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단둥은행은 중국 내 5개의 지점을 가진 영세한 은행으로, 이 제재 역시 미국이 향후 중국 대형은행에까지 제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다(임종식·구갑우 2019).

실제 미국은 중국 대형은행으로 2차 제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

년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북핵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를 단서로 삼았지만, 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중무역 분쟁의 해결인 만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심인성 2017).

2차 제재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미중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밀접한 경제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통해 이들의 제재 동참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대북 2차 제재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2차 제재의 근거가 되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르면 2차 제재는 특정한 행위를 실행하였거나 그 실행행위와 관련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한 '우려(혐의)'가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임종식·구갑우 2019). 본 연구는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될 경우 2차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통과 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미중 또는 미러 관계가 개선 국면일 때는 2차 제재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미국 의회는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후 검토나 감시를 담당해왔다. 외교와 관련한 권한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는 때때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온건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책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의회가 독자적으로 제재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역할이 강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대해 의회가 사상 첫 대북제재 법안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H.R.757)'을 통과시키며 반발한 것도 의회 역할 강화의 일례다. 당시 대통령은 민주당인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인 분점 정부를 이뤘다는 점은 행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법안 발의를 더 활발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 상황에서 법안 발의와 표결의 교착상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분점정부 상황은 이 같은 통념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거대 야당이 발의한 외교 법안에 대해 대체로 협조해왔다. 나라 안팎의 정치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다(Tama 2020).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가 갖는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이다(Farhang&Miranda 2016). 이처럼 행위자 요인 측면에서 의원의 당파성은 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파성이라는 행위자 요인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행정부의 대북 온건 정책에 대한 의회의 대북제재 통과 결정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bill sponsorship)에서 시작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토의와 의결로 마무리 되는데, 법안(bill)이 법이 되는지(becoming law)의 핵심은 마지막 절차인 상원과 하원의 호명투표(roll-call vote)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³⁾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로 법안 투표에 당파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각 법안이 어느 정도의 경합점에서 통과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미국 의회는 점차 의원 개인의 이념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소속 정당이 같은 표결 성향을 보이는 집단 투표의 양극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슈만큼은 호명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찬성 표결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의회에서 정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지만 유독 북한문제 만큼은 초당파적(bipartisan) 합의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다(황태희 등 2017).

이처럼 초당파적인 이슈인 대북제재 법안에 있어서만큼은 발의자인 의원의 지역구 특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왔다.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3) 미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usa.gov/how-laws-are-made>

반(反)카스트로 성향의 유권자 성향을 의식해 강력한 쿠바 제재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Fisk 2000). 그러나 쿠바로 달러 송금이 허용되면서 쿠바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쿠바계 유권자들이 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이 입장이 의회를 통해 법제화 되면서, 쿠바 제재가 점차 완화되며 2014년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김종혁 등 2018).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에서 지역구 특성을 핵심적 요인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본 연구는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지에도 집중할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참가함으로써 발의자의 전문성과 영향력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고찰할 것이다. 미국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의원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오래 소속되어 장기간 전문성을 키워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상임위원장 여부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서정건·정진민 2015).

Ⅲ. 미국 의회에서의 대북제재 법안 활동

1. 대북제재 법안 발의 현황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해 온건 정책으로 돌아선 200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모두 41건의 북한의 안보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 되었다. 연도별로 법안 발의 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색깔이 되어 진 칸은 북한이 핵실험 등 강력한 도발을 감행한 해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007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핵실험이 진행된 해의 대북제재 법안 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4차와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에는 법안 발의 수가 단 1건에 그치고, 북한의 도발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2019년 법안 발의 수는 8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 법안 발의 사이에 큰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표 2〉 연도별 미국 의회 대북제재 법안 발의 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발의 수	2	1	8	1	1	0	5	1	4	1	7	2	8	41

총 41건의 법안 중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23건,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18건이다(그림 1 참조). 이 중 4건의 법안이 상원 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실패했고, 3건의 법안(bill)만이 법(law)으로 통과됐다. 34건의 법은 발의(introduce)된 이후 줄곧 계류됐다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발의 법안 목록은 〈부록-1〉 참조).

[그림 1] 대북제재 법안 처리 결과

계류 뒤 폐기 34건 (83%)	상/하원 통과 뒤 폐기 4건(10%)	법제화 3건(7%)
----------------------	----------------------------	---------------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법안 발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어도 제재 법안이 발의 된 때도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 의회가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상하원을 넘나들며 재발의 된 경우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의된 것이 오토 워म्비어(Otto Warmbier)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워म्비어는 북한에서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귀국 엿새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한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 제목에 오토 워म्비어의 이름을 넣은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총 5차례 발의된다(2017년 S.1591; 2017년 H.R.3898; 2019년 S.667; 2019년 S.1790; 2019년 H.R.4084).

북한이 특정 정치적 선제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북미 간의 외교를 금지 또는 격하 시키는 북한 외교적 불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은 하원에서만 총 4차례 발의됐다(2009년 H.R.1980; 2010년 H.R.5350; 2013년 H.R.673; 2015년 H.R.204). 대통령의 북미 회담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2018년 S.3124; 2019년 S.1658; 2019년 H.R.2949)과 대북제재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2013년 H.R.1771; 2014년 S.3012; 2015년 S.1747), 효과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2017년 H.R.4027; 2017년 H.R.4027; 2019년 S.2050)은 총 3번 씩 발의됐다.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To prohibit lifting of United States sanctions imposed with respect to North Korea, 2018년 H.R.6054; 2019년 H.R.1369), 북한 제재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2009년 S.837; 2009년 H.R.3423)도 각각 2번 씩 발의 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북제재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실제 41건의 법안 중 공화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은 30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초당적 공동발의가 이뤄진 경우는 총 27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41개의 법안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법은 총 3건에 그친다. 2015년 발의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H.R.757)과 2017년 발의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H.R.3364), 2020년 국방수권법 중 오토웹버러 북핵 제재 법안(S.1790)이다. 3개의 법이 다른 법안들과 달리 어떤 맥락을 거쳐 통과됐는지 다음 절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북제재 관련 통과 법안

- 1)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도 채 안된 2016년 1월 12일 미국 의회는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하 H.R.757)'을 통과시킨다. H.R.757은 공화당 소속인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당시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5년 2월 5일 하원에서 발의된 이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다.

H.R.757은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개인, 단체까지 제재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북한과 불법무기는 물론 사치품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⁴⁾ 이처럼 포괄적 대북제재인 H.R.757은 제재 대상에 필수적 지정 대상자와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해 일정 범위의 제재 대상자는 대통령이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Collin 2016). 이와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주요 제재 대상으로 상정한다.

2)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H.R.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미국 의회의 두 번째 대북제재 법안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H.R.3364)'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에서 발의됐다. H.R.3364는 화성-14형 발사 20일 만인 2017년 7월 24일 발의됐으며, 신속한 표결 과정을 거쳐 2017년 8월 2일 통과됐다. H.R.3364 역시 H.R.757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3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도 하원 422명 중 반대는 3표, 상원 100명 중 반대는 2표뿐으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H.R.3364를 북한 단독 제재 법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H.R.3364는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라는 이름처럼 북한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까지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법안 제3편에서만 대북제재 내용

4) 미국 의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gov/>)

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 된 계기가 화성-14형 발사인 만큼 이 법안은 북한의 핵 활동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은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 제재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필수적·재량적 지정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대리계좌를 금지했으며, 제재를 어기는 국가에 대외원조를 제한하는 등 2차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다.⁵⁾

H.R.3364는 북한의 첫 ICBM 발사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주요 타겟은 러시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통과된 2017년 8월 당시는 트럼프의 러시아스캔들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걷던 시기이기도하기 때문이다.

3)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웬비어 북핵 제재법

(S.179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인 청년 오토 웬비어는 2016년 북한 방문 도중 체제 선전물 절도죄 혐의로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감금과 고문 등의 학대를 받았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으나 귀국 6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오토 웬비어 사망 직후부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을 규탄하기 위한 이른바 '오토 웬비어 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다. 2019년 11월 6일 발의, 12월 20일 통과된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 웬비어 북핵 제재법(이하 S.1790)'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5번째 '오토 웬비어 법'으로 '오토 웬비어 법'이 발의되기 시작한 지 2년만에 법제화 된 것이다.

S.1790은 앞서 발의된 오토 웬비어 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2차 제재다. 제재 대상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대리지불계좌 혹은 차명계좌 개설 등이 제한된다. 이 법은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단독 발의했다.

5) 미국 의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gov/>)

IV. 법률 통과 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북한의 도발,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지역구 특성이라는 4가지 요인이 대북제재 관련 법안의 통과와 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한 3개 법안의 통과에 4가지의 요인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법안 통과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도발 여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된 것은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H.R.3364)' 한 건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7월 24일 이를 규탄하는 H.R.3364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며 8월 2일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화성-14형은 북한의 첫 ICBM으로 북한의 핵기술 개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ICBM이 있어야 핵탄두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사정권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북한은 화성-14형 발사의 성공은 "민족사적 대경사"이자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7·4혁명"이라며 화성-14형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도 했는데 이는 ICBM 발사의 성공이 핵보유국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노동신문 2020). 무엇보다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화성-14형은 미국인들의 큰 우려를 낳았다.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하 H.R. 757)'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 2월 5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공동발의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을 진행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2016년 1월 12일 미국 의회가 H.R.757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 법은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위력은 앞선 3차 핵실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북한이 3년 만에 진행한 핵실험이자 첫 수소탄 시험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일으켰다.

미국 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마다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표 3 참조).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발의된 15개의 법안 중 법이 통과된 것은 H.R.3364 한 건에 그친다. H.R.757은 북한의 도발이 발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계류된 법률을 통과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통과 결정요인으로서는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법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북한 주요 도발	발의 법안	발의 날짜	처리결과
2차 핵실험 (2009.05.25.)	2010년도 국방수권법안 (S.1390)	2009.07.02.	상원통과 뒤 폐기
	북한 책임 법안 (S.1416)	2009.07.08.	계류 뒤 폐기
	북한 제재 법안 (H.R.3423)	2009.07.30.	계류 뒤 폐기
3차 핵실험 (2013.02.12.)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673)	2013.02.13.	계류 뒤 폐기
	북한 핵확산 및 이전 금지 법안 (S.298)	2013.02.13.	상원통과 뒤 폐기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 (H.R.893)	2013.02.28.	계류 뒤 폐기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2013.04.26.	하원통과 뒤 폐기
5차 핵실험 (2016.09.09.)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 법안 (H.R.6281)	2016.09.28.	계류 뒤 폐기
화성-14형 1차 발사 (2017.07.04.)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 (S.1562)	2017.07.13.	계류 뒤 폐기
	북한 자금 경로 추적 법안 (H.R.3261)	2017.07.14.	계류 뒤 폐기

	오토웬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1591)	2017.07.19.	계류 뒤 폐기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 (H.R.3364)	2017.07.24.	법률 통과 (2017.08.02.)
6차 핵실험 (2017.09.03.)	오토웬비어 북핵 제재법 (H.R.3898)	2017.10.02	계류 뒤 폐기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1901)	2017.10.02	계류 뒤 폐기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H.R.4027)	2017.10.11.	계류 뒤 폐기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 웬비어 북핵 제재법(이하 S.1790)'은 법안 발의와 통과 시점 모두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대북제재 법안 통과와 필요조건으로는 볼 수 있으나 충분조건으로는 볼 수 없다.

2.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대외적 갈등 발생 시 대북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활용해 갈등 당사국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R.757과 S.1790은 중국을, H.R.3364는 러시아를 주요 제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H.R.757은 무기와 상관없는 북한 광물 및 금속 거래까지 의무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송용창 2016). H.R.3364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가 원인이 됐지만, 제재 대상에 북한 뿐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로 여겨진다. S.1790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의 영세 은행을 특정했던 2차 제재와 달리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대형은행을 공략하기 제재로 해석된다(조의준 2019).

미 의회 사상 초유의 북한 제재만을 위한 법 H.R.757은 법안이 발의된 다음 해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물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통과 기류를 다시 이끌었지만, 미중관계 역시 기폭제로 작동했다(Haggard 2020). 2016년 당시의 미중관계는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까지 날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려 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준삼 2016). 더군다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연일 한미 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중관계는 긴장을 더해가고 있었다(박세영 2016). 즉, H.R.757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사건이 강력한 촉매제가 됐지만, 미중관계 악화 속에 2차 제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첫 대북제재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H.R.3364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를 규탄하며 나온 대북제재 법안이지만 입법 과정 당시 러시아가 미국 국내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 직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의 승리를 도왔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스캔들 관련 수사를 방해하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러시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 H.R.3364는 트럼프에 보내는 의회의 경고이기도 했다. 후술하겠지만 3번째 결정 요인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법안 통과와 주요 결정요인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된 것은 트럼프 외교정책의 첫 번째 패배로 꼽힌다(Böller 2020). 트럼프는 H.R.3364에 서명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로부터 나온 결함 있는 법안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방해하고 미국의 파트너, 친구, 동맹국들을 위한 노력에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질 않길 바란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⁶⁾ 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 법안 H.R.3364의 통과 과정의 이면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가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S.1790은 앞서 발의된 오토 웹버 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S.1790 통과 전까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6)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

중국의 단둥은행만을 대상으로 했다. 단둥은행은 영세한 규모의 지방 은행으로 미국이 실질적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S.1790으로 미국은 중국 교통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대북 은행거래제한법을 위반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은행"이라고 밝힌바 있다(백나리 2019). S.1790이 통과된 2019년 6월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로 양국은 서로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보복관세'를 붙이기도 한 때이다(강성웅 2019).

반면 미국이 2차 제재 대상인 제3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거나, 관계가 좋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법안 통과에 부정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2017년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은 2017년 4월 미국 마라라고와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두 차례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중무역의 해법을 모색하려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가 포함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미중관계 또는 미러관계의 악화가 대북제재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급진적인 제재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통과되기 어렵다. '2017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이하 S.1562)'이 대표적 예다. 이 법안은 H.R.3364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로 2017년 7월 13일 발의됐지만, 상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북한의 조력자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단둥 차츰금속과 산둥 국제무역, 셔먼 시앙위 등 중국의 대북수입업체 10곳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강경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법은 공화당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공화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법안 발의 당시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

에 선택을 요구했다(곽명일 2017). 2017년 당시 미중 양국은 무역 분쟁을 겪었지만, 4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답방하는 등 미국 대외정책 방향은 분쟁을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쪽이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지나친 2차 제재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 3건(H.R.757, H.R.3364, S.1790) 모두 2차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고,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대외관계가 통과에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반면,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도발은 제재 통과에의 필요조건으로 밖에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의 법적 특성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여부 보다는 미중 또는 미러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H.R.757은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화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 투표 과정에서도 하원에서는 420명 중 2명의 반대표만 나왔고, 상원에서는 96명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미국 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 247석 대 민주당 188석, 상원은 공화당 54석 대 민주당 44석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분점정부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북한의 도발에 무시로 일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H.R.757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에드워드 로이스 위원장은 H.R.757이 통과되자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파적인 좌절감을 보여준다"며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철환 2016).

H.R.3364가 만들어 진 시점의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은 H.R.757이 만들어진 때와는 매우 상이하다. 우선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행정부의 교체가 이뤄졌다. 트럼프는 임기 초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입법부도 제115대 상·하원으로 교체되었는데 상원은 공화당 52명 대 민주당 46명, 하원은 공화당 241명 대 민주당 194명으로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단점정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언뜻 보면 의회의 대북제재 통과도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H.R.3364의 통과 과정은 앞서 설명한 미국의 대외 관계와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데 의회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 법을 통과 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트럼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S.1790은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님이 단독 발의했다. 제임스 인호프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발의된 ‘오토 웨이버 법안’들은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Chria Van Hollan)의원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공화당 앤디 바(Andy Barr)의원이 2017년 발의했는데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나간 가운데 초당적 발의에도 번번이 계류됐던 법안이 어떻게 친 트럼프 성향 상원 군사위원장의 단독 발의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이 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녹아있는 법이다. 비록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이 단독 발의했지만, 주한미군의 현행 규모 유지 방안이 들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축소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보면 민주당에 한발 양보한 법안인 셈이다. 따라서 웨이버 법을 국방수권법이라는 큰 틀 안에 일종의 하위 옵션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일괄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의 반대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주요 요인이다. 2013년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제재 강화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공화당 102명, 민주당 45명의 의원과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법안의 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상원에서 민주당은 53석, 공화당은 45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법안 통과 촉구에도 민주당 상원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제재

안이 북한과의 협상을 가로막고, 중국 정부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권 2014).

행정부에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법안과 달리, 행정부의 행동에 제동을 걸거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통과 과정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기 더욱 어렵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발의된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과, 대북정책 감독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위주로 발의됐으나,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계류된 사례들이다. 북미 간 인권 논의 없이는 제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북제재 철회 금지법안(이하 H.R.6094)'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하루 만인 2018년 6월 13일 발의됐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자 1년 뒤인 2019년 6월 20일 브렌단 보일 의원(Brendan Boyle)은 같은 내용의 법을 H.R.1369라는 이름으로 재발의 했다. 현재까지도 이 법은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하며 표류 중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Robert Menendez)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2018 대북정책 감독법(이하 S.314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위급 북미대화 이후 15일 이내 결과 브리핑은 물론 정기적인 브리핑과 청문회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미 합의가 도출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 합의문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과 북미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⁷⁾ S.3142는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해 1년 뒤 S.1658이라는 법안으로 재발의 됐으나 역시 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동함을 볼 수 있다. H.R.757은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 대북 정책에 대한 공화당 다수 의회의 견제였으며, H.R.3364는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경고였다. 또한 S.1790은 대북제재 뿐 아니라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 많은 정책 옵션들이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발 씩 물러났기에 통과가 가능했다.

7)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

4. 발의자 개별적 특성

미 하원에서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던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 Royce)의원은 북한 제재와 관련한 법안을 총 3건 발의했는데 이 중 2건이 법으로 만들어졌고(H.R.757, H.R.3364) 1건은 하원을 통과했다('2014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앞서 이란과의 거래를 막는 강력한 법안(H.R.6297)을 만드는 등 강경 제재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플러튼(Fullerton)시인데 이 지역은 인구 20%가 한국 출신일 정도로 한국계 유권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미국 한인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강경한 만큼 로이스 의원이 강력한 대북제재 법을 만들게 된 데는 이러한 유권자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이 제재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구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발의한 3개의 법이 모두 하원의 문턱을 넘고 2개의 법은 상원까지 통과해 법이 된 데에는 외교위원장이라는 그의 직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통과된 3개의 대북제재 법 중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건 외에 나머지 1건(S.1790) 역시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았던 제임스 인호프(James M. Inhofe) 의원이 발의했다. 제임스 인호프 의원의 지역구는 오클라호마로 한인의 비중이 뛰어나게 많진 않다. 그러나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상원 공동의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이제교 2014).

〈표 4〉 법안 발의 의원 명단

이름	상하원	정당	지역구	발의 수	처리 결과
Ros-Lehtinen, Ileana (외교위원장)	하원	공화당	플로리다	8	1건 하원통과
Menendez, Robert (외교위원장)	상원	민주당	뉴저지	5	1건 상원통과

Gardner, Cory (군사위원장)	상원	공화당	콜로라도	4	-
Royce, Edward R. (외교위원장)	하원	공화당	캘리포니아	3	2건 법률통과, 1건 하원통과
Sam Brownback	상원	공화당	켄자스	2	-
Van Hollen, Chris	상원	민주당	매릴랜드	2	-
James M. Inhofe (군사위원장)	상원	공화당	오클라호마	2	1건 법률통과
Sherman, Brad	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2	-
Barr, Andy	하원	공화당	켄터키	2	-
Boyle, Brendan F.	하원	민주당	펜실베이니아	2	-
Carl Levin (군사위원장)	상원	민주당	미시간	1	1건 상원통과
Russell D. Feingold	상원	민주당	위스콘신	1	-
Trent Franks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McMahon, Michael E.	하원	민주당	뉴욕	1	-
Gosar, Paul A.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Salmon, Matt	하원	공화당	아리조나	1	-
Torres, Norma J.	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	1	-
Wagner, Ann	하원	공화당	미주리	1	-
Engel, Eliot L.	하원	공화당	뉴욕	1	-
Riggleman, Denver	하원	공화당	버지니아	1	-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법이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한 경우도 모두 대표발의자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다. 2011년 하원을 통과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H.R.2105)’은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일레나-로스 레티넨(Ros-Lehtinen, Ileana) 의원이 발의했으며, 2009년 상원을 통과한 ‘2010 국방수권법안(S.1390)’은 칼 레빈(Carl Levin) 당시 상원 군사위원장이, 2013년 상원을 통과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S.298)’은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로버트 메넨데즈(Menendez, Robert)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요인에 발의자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는 것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결정요인(북한의 도발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발의자 개별특성)이 미국의회의 대북제재 법 통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미국 의회 통과 대북제재 법과 법안 통과 결정요인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H.R.757 (2015년 2월 5일 발의, 2016년 1월 1일 통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H.R.3365 (2017년 7월 24일 발의, 2018년 8월 2일 통과)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월비어 복핵 제재법 S.1790 (2019년 6월 11일 발의, 2019년 12월 18일 통과)
북한 도발 여부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화성-14형 발사 (2017년 7월 4일)	-
2차제재 대상국과의 관계	중국, 한반도 사드배치 불만 및 대북제재 소극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미중 무역분쟁으로 상호 보복관세 25%까지 부여
의회-행정부 관계	오바마-공화당 분점정부, 의회의 대북온건정책 반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회의 견제	대북제재-한미방위비 등 여야의 합의 결과
발의자 개별적 특성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한인 다수 플러튼 지역구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코리아코커스 소속

4가지 결정요인 중 북한의 도발여부만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H.R.757은 1년째 계류 중이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통과됐고

H.R.3364는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발의 및 통과가 신속히 이뤄졌지만, S.1790은 북한의 안보 도발과는 무관하게 발의 및 통과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 법 모두 북한 외의 제3의 대상국을 포함하는 2차 제재인데,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법안 통과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 H.R.757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한반도 사드배치로 미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통과됐고, H.R.3364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미러관계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포함하는 S.1790의 통과는 격화된 미중무역 분쟁의 양상 속에 가능했다.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H.R.757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다수 의회의 분점 정부 속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견제로 발의 및 통과됐으며,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한 H.R.3364는 러시아 스캔들의 원인 제공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견제 성격이 강하다. S.1790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제재 문제에서 한발씩 양보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세 법 모두 외교, 군사 상임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이들이 한인 밀집 지역구를 맡거나 코리아 코카서스 소속이라는 점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과 비교해 불패 발의자의 전문성, 영향력 등이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의 도발 여부,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의 대외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인 중 북한의 도발이라는 요인 외에 나머지 3개의 요인은 3개의 대북제재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등 2차 제재 대상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보다 대북제재에 더 주효하게 작용했다.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웨이버 북핵 제재법(S.1790)은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의 정점에 닿은 시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통과된 측면이 크다.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은 러시아 스캔들이 터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반대로 미중관계 등 미국의 대외관계는 미국이 2차 제재 대상인 제3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을 하려하는 때 법안의 계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중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 시기 중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도 크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는 단순히 행정부의 관여정책에 대한 견제로만 쓰이지는 않았지만, H.R. 3364는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견제, S.1790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법안 합의에서 통과됐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도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발의자의 지역구 특성과 상임위원장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일 경우 법의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는 향후 대북제재 법의 통과를 예측할 때 참고해 보자 하다.

그동안 대북제재 연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행정명령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재들이 행정명령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에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한다(Hatipoglu 2014). 또한 본 연구는 제재 대상의 도발이 심화될수록 제재가 강화된다는 통념과 달리,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요인 외에 미국의 대외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대표 발의자의 개별적 특성이 법안 통과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안을 예측할 때 이 같은 다양한 결정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시기 북한

의 도발 정도와 관계없이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이 수년째 거듭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보다는 미중 관계가 대북제재 법 통과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의회와 행정부 관계의 기류를 고려해야 한다. 2017년 월비어 사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월비어 법이 신속히 발의되게 했다는 분석이 있다(김연호 2017). 미국 의회의 기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만을 설득하는 관여 정책은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대북제재 법 통과에 있어서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는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이들과의 네트워크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미국 행정부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부록

〈부록-1〉 대북제재 발의 법안 목록

발의날짜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07.02.08.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S.527)	비확산 법에 북한 포함	-	Russell D. Feingold (공화당)	공화당 1명
2007.09.25.	북한 대테러 비확산 법안 (H.R.3650)	대통령의 대북제재 해제를 어렵게 함	-	Ros-Lehti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43명
2008.06.29.	북한 대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 법안 (H.R.6420)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우라늄 농축 신고 및 다른나라 핵 지원 신고 요구	북핵신고 (2008.06)	Sherman, Brad (민주당)	공화당 6명
2009.01.13.	핵확산 방지를 통한 안보 법안 (H.R. 485)	핵, WMD 확산국가에 더 강력한 제재 규정	-	Ros-Lehtinen, Ileana (공화당)	-
2009.04.20.	북한 제재 법안 (S.837)	북한 대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Brownback, Sam (공화당)	공화당 7명
2009.04.21.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1980)	납북 일본인과 한국인 전쟁포로 석방 전까지 북미 외교 중단	-	Ros-Lehti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23명, 민주당 1명
2009.05.06.	국제 우라늄 추출과 가공 통제 법안 (H.R.2290)	국제사회의 대 북한, 이란, 시리아 핵개발 연료 및 기술 제공 금지	北 외무성 핵개발 성명 (2009.04)	Sherman, Brad (민주당)	공화당 2명
2009.06.12.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의 조국 방어 법안 (H.R.2845)	북한을 주요 미사일 확산국으로 지목	-	Trent Franks (공화당)	공화당 9명, 민주당 1명
2009.07.02.	2010년도 국방수권법안 (S.1390)	국방수권법 내 대북제재 내용 대폭 추가	2차 핵실험 (2009.05)	Carl Levin (민주당)	-

발의일자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09.07.08.	북한 책임 법안 (S.1416)	북한을 국제테러행위국으로 지정	2차 핵실험 (2009.05)	Brownba ck, Sam (공화당)	공화당 3명
2009.07.30.	북한 제재 법안 (H.R.3423)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 대북제재 의무화	2차 핵실험 (2009.05)	McMaho n, Michael E. (민주당)	공화당 1명
2010.05.20.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5350)	북한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8명
2011.06.0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H.R.2105)	해당국과 무기 거래 시 금융제재	-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43명, 민주당 3명
2013.02.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673)	북한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북미 외교 금지	3차 핵실험 (2013.02.)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21명
2013.02.13.	북한 핵확산 및 이전 금지 법안 (S.298)	유엔 회원국의 군사 기술 북한 이전 금지 및 대북거래 감시.	3차 핵실험 (2013.02.)	Menende z, Robert (민주당)	공화당 33명, 민주당 6명
2013.02.28.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 (H.R.893)	WMD 확산 관여한 개인, 국가 강력 제재	3차 핵실험 (2013.02.)	Ros-Lehti 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14명, 민주당 1명
2013.04.26.	대북제재 강화 법안 (H.R.1771)	북한과 불법 거래 시 금융 계좌 폐쇄 등	3차 핵실험 (2013.02.)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102명, 민주당 45명
2013.09.05.	해외원조 제한·투명 법안 (H.R.1922)	미국 모든 정부기관의 해당국가 원조 금지	-	Gosar, Paul A. (공화당)	공화당 3명
2014.12.12.	대북제재 강화 법안 (S.3012)	북한과 불법 거래 시 금융 계좌 폐쇄 등	-	Menende z, Robert (공화당)	-

발의일자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15.01.08.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안 (H.R.204)	북한의 대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소니픽쳐스 해킹 (2015.01)	Ros-Lehtinen, Ileana (공화당)	공화당 19명, 민주당 1명
2015.02.05.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 (H.R.757)	북한 불법행위 조장하는 개인과 등에 포괄적 대북제재	-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23명, 민주당 13명
2015.09.07.	대북제재 강화 법안 (S.1747)	북한 지원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 동결	-	Menendez, Robert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
2015.10.0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S.2144)	북한 광물 및 금속 거래까지 제재 의무화	-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18명
2016.09.28.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 법안 (H.R.6281)	북한 중앙은행과 핵 관련 기관을 대통령이 의무적 제재	5차 핵실험 (2016.09)	Salmon, Matt (공화당)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
2017.07.13.	북한 조력자 책임 법안 (S.1562)	북한 조력자 (중국 10대 대북수입업체)에 금융제재	화성-14 발사 (2017.07)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2017.07.14.	북한 자금 경로 추적 법안 (H.R.3261)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수익조달 관련 평가서 발간	화성-14 발사 (2017.07)	Torres, Norma J.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2017.07.19.	오토웹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1591)	대북 금융제재 강화	화성-14 발사 (2017.07)	Van Hollen, Chris (민주당)	공화당 9명, 민주당 6명
2017.07.24.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 법안 (H.R.3364)	대북제재 대상 확대 및 대리계좌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 등	화성-14 발사 (2017.07)	Royce, Edward R. (공화당)	공화당 2명, 민주당 3명
2017.10.02	오토웹비어 북핵 제재법 (H.R.3898)	대북 금융제재 강화	6차 핵실험 (2017.09)	Barr, Andy (공화당)	공화당 9명, 민주당 9명
2017.10.02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1901)	대북제재에 비협조국과 외교관계 격하	6차 핵실험 (2017.09)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6명, 민주당 1명

발의일자	법안명	내용	제재배경	대표발의자	공동발의
2017.10.11.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H.R.4027)	대북제재 대상을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까지 확대	6차 핵실험 (2017.09)	Wagner, Ann (공화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8.06.13.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 (H.R.6094)	제재철회를 위해서는 북미간 인권문제 논의 필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06)	Boyle, Brendan F. (민주당)	공화당 1명
2018.06.26.	대북 정책 감독 법안 (S.3142)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30일마다 의회 보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8.06)	Menendez, Robert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2명
2019.03.05.	오토웹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S.667)	대통령 의무지정 제재 대상자 추가	-	Van Hollen, Chris (민주당)	공화당 2명, 민주당 1명
2019.05.23.	대북정책 감독 법안 (S.1658)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의회 보고 의무화	-	Menendez, Robert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9.05.23.	대북정책 감독 법안 (H.R.2949)	대통령의 북미간 협상 내용 의회 보고 의무화	-	Engel, Eliot L. (민주당)	공화당 1명, 민주당 2명
2019.06.11.	2020 국방수권법 중 오토웹비어 북핵제재 법안 (S.1790)	대북 금융제재 강화	-	James M. Inhofe (공화당)	-
2019.06.26.	대북제재 철회 금지 법안 (H.R.1369)	제재철회를 위해서는 북미간 인권문제 논의 필수	-	Boyle, Brendan F. (민주당)	공화당 1명
2019.06.28.	효과적 외교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S.2050)	세컨더리 보이콧 및 제3자 제재	-	Gardner, Cory (공화당)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2019.07.26.	오토웹비어 북핵 제재법 (H.R.4084)	대북 금융제재 강화	-	Barr, Andy (공화당)	공화당 2명
2019.09.17.	북한 은행 업무 감독 법안 (H.R.4366)	대북제재 대상자에게 금융 면허 180마다 갱신 의무화	-	Raggieman Denver (공화당)	-

참 고 문 헌

- 강성웅. 2019. “미중 관세폭탄 터졌다...최고 25% 징수 개시.”『YTN』(6월 1일).
https://www.ytn.co.kr/_ln/0104_201906010022452182 (검색일 2021년 7월 13일).
- 곽명일. 2017. “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 『연합 뉴스』(7월 14일, 검색일 2021년 7월 13일).
- 김부찬. 2013. “국제법상 제재 (制裁)의 개념과 변천.”『 국제법평론』 38호: 1-35.
- 김연호. 2017.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시각.” 『세종정책브리핑』. 2017-19호: 1-21.
- 김영권. 2014. “미 의회서 탄력 받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 『VOA Korea』 (3월 28일, 검색일 2021년 7월 29일).
- 김종혁·정재완·장윤희·유광호·김효은. 2018. “미국의 경제제재 (sanctions program) 완화 사례 분석.” 『KIEP 기초자료』18-26호: 1-32.
- 노동신문. “사실: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진 그 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가속화하자.” 『노동신문』(7월 4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201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민태은·황태희·정진문. 2020.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KINU 연구총서』20-07호: 1-198.
- 박세영. 2016. ““韓, 사드·대북제재 제멋대로 해선 안돼”... 도 넘는 中” 『문화일보』(1월 27일, 검색일 2021년 7월 12일).
- 백나리. 2019. “美상원의원들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연합뉴스』 (12월 19일, 검색일 2021년 7월 15일).
- 서동찬. 2018.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건·정진민. 2015.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OUGHTOPIA』 30권 2호: 247-277.

- 송용창. 2016. “미국, 중국 기업 제재 카드 만지작… 한일도 독자 제재 검토.” 『한국일보』 (1월 28일, 검색일 2021년 7월 7일).
- 송인호·박민. 2019. “미국 대북제재법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법학논총』 제43권 4호: 191-224.
- 심인성. 2017. “美백악관, 세컨더리보이콧 질문에 “미중정상회담의 초기 의제.” 『연합뉴스』(4월 6일, 검색일 2021년 6월 5일).
- 정하용. 2017. “정부 제출 입법과 의원 발의 입법의 정책 영역 분석: 19 대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16권 2호: 73-100.
- 이제교. 2014. “美 중간선거 두 달 앞… ‘코리아 코커스’ 운명은…” 『문화일보』(9월 21일, 검색일 2021년 8월 1일).
- 이준삼. 2016. “시진핑 “美中은 신형대국관계…상호존중해야” 대북압박 ‘불쾌감.’” 『연합뉴스』 (1월 28일, 검색일 2021년 7월 10일).
- 이현우. 2005.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표결요인 비교: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경우.” 『국제정치논총』45권 3호: 105-126.
- 임수호. 2019.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제 35권 제1: 127-156.
- 임종식·구갑우. 2019.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통일정책연구』제 28권: 229-251.
- 조의준. 2019. “美상원 '北과 거래은행 제재 의무화' 법안 통과.” 『조선일보』 (6월 29일, 검색일 2021년 7월 10일).
- 조진만. 2005. “정치체계의 특성과 의원의 법안 발의: 31 개 민주국가 의회에 대한 교차분석.” 『의정연구』제19권: 161-193.
- 조철환. 2016. “美상원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법안 처리… 중압박 더해.” 『한국일보』(2월 11일, 검색일 2021년 7월 15일).
- 황태희·서정건·전아영. 2017. “미국 경제제재 분석: 효과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4호: 191-216.
- Böller, Florian. and Lukas D. Herr. 2020. “From Washington without

love: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making and US-Russian relations under president Trump.” *Contemporary Politics* 26(1): 17-37.

Canen, Nathan J., Chad Kendall, and Francesco Trebbi. 2021. “Political Parties as Drivers of US Polarization: 1927-201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8296: 1-74.

Carisch, Enrico., Loraine Rickard-Martin, and Shawna R. Meister. 2017. “Back to the Future: The Non-Proliferation Cases of Iran, North Korea and R2P Sanctions on Libya.” in *The Evolution of UN Sanctions: Form a Tool of Warfare to a Tool of Peace, Security and Human Rights*. New York: Springer.

Collins, Lisa. 2016. “Critical Questions: What Does New Sanctions Legislation on North Korea Mean?” (검색일: 2021.08.25.).

Entman, Robert M. 1983. “The impact of ideology on legislative behavior and public policy in the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45(1): 163-182.

Farhang, Sean, and Miranda Yaver. 2016. “Divided government and the fragmentation of American la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2): 401-417.

Fisk, Daniel W. 2000. “Economic sanctions: The Cuba embargo revisited.” in *Sanctions as economic statecraft* London: Macmillan.

Haggard, Stephan. 2016. “The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6.” (검색일:2021.07.06.).

Tama, Jordan. 2020. “Forcing the President's Hand: How the US Congress Shapes Foreign Policy through Sanctions Legislation.” *Foreign Policy Analysis* 16(3): 397-416.

Hatipoglu, Emre. 2014. “A Story of Institutional Misfit: Congress and

- US Economic Sanc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10(4): 431-445.
- Hibbing, John R. 1991. “Contours of the Modern Congressional care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2): 405-428.
- Hufbauer, Gary Clyde,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t. 1990.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New York: Peterson Institute.
- Meyer, Jeffrey A. 2009 “Second Thoughts on Secondary Sanc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3): 905-968.
- Nossal, Kim Richard. 1989.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punish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2): 301-322
- Pape, Robert. 1997.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22(2): 90-136.
- Scully, Eileen. 2001. *Bargaining with the State from Af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인터넷자료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
- 미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usa.gov/how-laws-are-made>
- 유엔 홈페이지 <https://www.un.org/>

The Determinants of U.S. Congress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Yoonshin Pyo*·Jaeyoung Hur**

ABSTRACT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will strengthen or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we have considered the administration as the most important agent in the U.S. decis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the U.S. Congress has been showing off its importance as the main ag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making and passing law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Congress has been steadily proposed bills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ever, the only 3 bills became laws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H.R.757)',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H.R.3364)' an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S.1790)'.

What was the determinants of the passage of these three laws among the many bills proposed? This study examines four determinants of the U.S. Congress's North Korea sanctions legislation by dividing it into bill characteristic factors and actor factors.

The three passed laws contained secondary sanctions that impos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ir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had a greater impact on the passage of these laws than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presiden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ssage of the bill, and it was found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as effective i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of the bill was th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or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is study proposes to look at three-dimens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rimary factor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n predicting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Ph.D. Studen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eywords :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U.S. Congress, legislation determinants, secondary boycott, U.S.-China relationship

투고일: 2021.10.01.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12.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77>

【연구논문】

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장영덕*

논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양태를 추적·고찰한다. 그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면서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차별적인 보도양태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동북공정 이슈는 보수·진보 세력 모두 공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언론 보도의 극명한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럼에도 반복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반사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였고, 진보언론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온건한 논조를 나타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차이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진영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결집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였으며,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주제어: 한중관계, 언론의 정파성, 동북공정, 사드, 국내정치적 요인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축이라고 한다면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의 무게 중심은 한·중관계로 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 상국이자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에게 안보적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중 양국이 서로 경쟁관계로 들어 갈 경우 한국의 외교 정향에 애로점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반도가 미·중 세력 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균형점에 위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향배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한국이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중적인 외교 혹은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바란다(연합뉴스 21/03/18).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관계의 밀착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중 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적 현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양국 간 갈등 이슈가 언론에 의해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프레임하고 보도 횟수를 조절하는가에 따라 대중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그리고 언론은 무엇보다 정치지형과 정치담론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파성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의 관점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 양태도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보도 양태의 차이와 관련한 국내 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를 추적, 고찰한다.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는 대표적인 갈등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 안보의 두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사안이 발생한 약 10년 정도의 시차를 통해 변화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대표적인 보혁 언론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관련 기사를 분석한다. 언론의 정파성

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 레벤더스키(Levendusky 2013)는 정파적 메시지는 정치성이 강한 양극단의 시청자들을 더욱 극화시킨다고 지적하였고, 델라비냐와 캐플런(DellaVigna & Kaplan 2007)은 정파성이 강한 미디어의 메시지는 잠재적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동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손영준(2004)은 보수언론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강화하였지만 진보언론 독자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강해진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사설 분석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분석한 홍주현·김경희(2017)의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적 성향이 정권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파적 성향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이·반현(2012)의 연구도 언론의 정파성과 보도 양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특정 이슈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보혁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언론의 정파성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희교 2004; 손영준 2004; 김재한 2009; 홍주현 외 2017; 권호천 2017; 조박 외 2018 등). 하지만 (1) 단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양태를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단편적인 분석이라는 점, (2)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론학 방법론 안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언론의 보도 양태 차이가 국내의 정치적 맥락과 입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분석한다. 이는 언론학 관점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다는 보완적 의미가 있다.

분석의 순서로는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쟁점을 조사한다. 이어서 우선 두 언론 사이에서 두 갈등 어젠다에 대한 보도 양태가 차별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의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그러한 편차를 유발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뤄진 정량적 분석 보다는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차별성의 정치맥락적 구조를 고찰한다.

II. 동북공정의 이슈화와 비판적 논조

1. 동북공정의 대두와 쟁점

2003년 6월 24일, 중국의 광명일보(光明日报)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논하다(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라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논설은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였다. 사실 동북공정은 2003년 갑자기 등장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2001년 6월, 창춘(长春)에서 ‘동북강역역사와 현황연구사업 좌담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동북변강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马大正 2003). 이 좌담회를 바탕으로 2002년 2월 정식 발족한 프로젝트가 바로 ‘동북공정’이다. 사실 2002년 이전에도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 움직임이 있었다. 처음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킨 진위푸(金毓黻)의 『동북통사(东北通史)』, 고구려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귀모뤄(郭沫若)의 『중국사고(中国史稿)』 등이 대표적이다(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1999). 중국 내 고구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이 때를 기점으로 중국 내에는 고구려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고구려 연구가 확산되었다(付百臣 2009).

동북공정의 쟁점은 고구려 역사의 귀속문제에 있으며, 이는 고구려 정권과 영역의 귀속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 정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양샤오취엔(杨昭全)과 쑤위메이(孙玉梅)는 중국 학계의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杨昭全 외 1993). (1) 고구려는 중국 한(汉)나라 때부터 당(唐)나라 때까지 중원 왕조가 관할한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2) 한반도의 고대 국가이다. (3)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점으로 이전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천도 이후는 한반도의 고대국가라는 견해이다. 둘째, 고구려 영역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학계에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 고구려의 영역은 오래된 고조선의 영토이다. 고조선 또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역은 원래 중국에 속한다. (2) 고구려는 고조선의 ‘제후국(侯国)’으로 고조선의 영역에 속하며, 고조선은 현재 한반도의 고대국가이다. (3) 고구려는 중국 혼강(浑江) 유역의

고(古)고이(高夷) 족 중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민족공동체이다. 고고이족은 서주(西周) 시기 이미 주나라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北土) 경내에 있었고, 전국시대 말기 연나라의 요동군(辽东郡)에 귀속되었다는 견해이다(刘子敏 1996). 리우즈민(刘子敏)은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의 영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와 인식은 동북공정으로 계승되었고, 동북공정은 한·중 갈등, 특히 역사문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2. 한·중 양국의 인식과 입장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간 쟁점은 고구려 정권과 고구려 영역에 대한 귀속문제로 압축된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왕조의 지방정권, 소수민족 정권으로 공식화했으며,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학술활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김현숙(2016)에 따르면 2007년 동북공정이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2015년까지 중국에서는 고구려사 관련 학위 논문이 박사 14편, 석사 44편이 발표되었고, 학술저널의 경우 9년 동안 4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의 성격을 철저히 학술활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고구려 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²⁾ 관련 학술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변강학포럼(中国边疆学论坛)’과 ‘중국변강연구청년학자포럼(中国边疆研究青年学者论坛)’이 대표적이다. 이들 포럼은 동북, 서북, 서남 등 변강지역을 주제로 하는데 고구려는 동북 변강에 속하며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포럼 이외에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고구려 관련 저서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언론의 행태에서

1) 2016년 이후에도 석·박사 학위논문(2016년: 12편, 2017년: 8편, 2018년: 15편, 2019년: 9편, 2020년: 11편)은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2) 2017년 동북아연구재단(2017)에서는 2007년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도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동북공정(혹은 동북변강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라는 명칭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报)에서 ‘동북공정’을 포함한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한국 언론이 앞다투어 동북공정에 대하여 각종 비판 기사를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언급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비공개 발언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적어도 공개된 자료에서 전현직 지도자가 동북공정을 언급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지도자였던 후진타오(胡锦涛) 역시 동북공정에 대해 어떠한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철저히 학술헌동의 틀 안에서 동북공정을 인식했다면 한국은 정부, 언론,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크게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 개괄할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한편,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중국의 정치적 침탈행위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첫째, 학계는 학술대회를 통해 동북공정을 비판하였다. 고구려 및 발해 연구자 중심의 한국고대사학회는 2003년 11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만 큰 규모의 관련 학술대회를 세 차례 열었다. 관련 논문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목에 ‘동북공정’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면 학위논문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편(석사: 21편, 박사: 1편)이, 일반논문의 경우 129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다수의 논문이 중국 동북공정의 실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³⁾

둘째, 민간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역사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고구려역사 찾기를 ‘제2의 나당전쟁, 중국과의 역사전쟁’으로 규정하였다(한겨레 03/12/15).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media.daum.net)은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공인받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3)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1년 7월 21일).

(www.prkorea.com)는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우리 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홍사단, 3·1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는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시민운동을 추진하였다.

셋째, 외교부 등 정부의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양국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⁴⁾ 이에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주장환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공정으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보였는데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 이 등재되도록 노력한 것과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대응을 위해 정부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 여야의원 25명이 중국의 역사왜곡 증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북아역사특위를 상임위로 운영한 것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2003년 7월과 9월, 중앙일보와 신동아가 동북공정을 처음 소개한 이후 한국의 주요 언론은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도의 내용은 주로 동북공정에 관한 소개와 함께 국내에서 진행되던 반(反)동북공정 소식, 역사문제, 정부의 대응, 이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쟁 등이었다. 이에 반해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적 문제, 즉 고구려사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 정파성과 관계없이 많은 언론이 반동북공정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북공정은 중요한 역사문제로서 한국의 민족 감정과 결부되었고, 이는

4)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일: 2021년 7월 31일).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동북공정 보도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정부 대응에 대한 반응이다. 먼저 조선일보는 학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한 고구려재단 등을 보도하며 정부의 대응이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 정부를 비판하였다. 예컨대 “‘중국고구려史’에 속수무책인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은 “민족의 근거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 역사조차 지켜내지 못해서야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였고(조선일보 04/08/02), “‘中 고구려史 왜곡’ 정부는 뭐하나”라는 일반 기사에서도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기다리기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였다(조선일보 04/08/04).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대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06/09/08).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인식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조선일보 06/09/08). 반면 한겨레의 논조는 보다 온건하고 중립적이다. 학계의 비판적 대응을 증점적으로 보도한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한겨레 보도의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다(백선기 외 2009). 한겨레는 동북공정은 학술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합리화 하였다(한겨레 06/09/08). 또한 정부의 대응에 혼선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인터뷰와 정부는 2004년 있었던 한·중 외교차관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비공식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대응 노력과 함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하였다(한겨레 06/09/07). 뿐만 아니라 2006년 ASEM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溫家宝) 총리에게 표명한 유감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총리의 말을 보도함으로써 대통령의 노력을 부각하였다(한겨레 06/09/10). 물론 한겨레 역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성 기사를 보도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낮췄다(한겨레 04/07/18).

둘째,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고구려

사를 중국사로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를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작’으로 규정한다. “중국이 고구려사에 열 올리는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조선족이 사는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03/12/06). 조선일보의 논조는 “‘고구려사 방위군’ 만들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앞선 사설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다 강경하다(조선일보 04/01/09). 이 같은 사설은 국내 중국위협론을 조장하는 한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유명 학자들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사침략’, ‘역사제국주의’ 등으로 규정하거나 ‘역사전쟁’이라 칭하며 과거 중국이 일으킨 무력 분쟁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선일보 03/12/09; 조선일보 03/12/22). 이처럼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강경 인식, 나아가 군사적 위협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한다. 반면 한겨레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조선일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예컨대 한겨레는 “중국의 고구려사 찬탈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결국 공격이 아닌 최선의 방어, 곧 공세적 민족주의에는 공세적 민족주의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소위 ‘동북공정’에는 일면 공세적이면서, 일면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한겨레 04/02/04). 또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역사’와 ‘영토’를 매개로 한 민족주의 열기의 분출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중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였다(한겨레 04/01/27).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가까워진 두 나라 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느냐를 가늠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동북공정이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물이라고 인식하였다(한겨레 04/07/21).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정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반면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반대하였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논조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희교 2004).

Ⅲ. 사드문제의 쟁점과 차별적 보도 프레임

1. 사드 배치의 배경과 과정

2014년 6월 3일, 주한 미군사령부의 스캐패로티(Curtis Scaparrotti) 사령관은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 중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세계일보 14/06/03). 스캐패로티의 발언 이후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이지만 중국은 사드를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위협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중국 국방부장 창완첸(常万全)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아주경제 15/02/04). 이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계획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2015년 2월,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도입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같은 해 3월, 청와대 역시 한국 정부는 사드에 대하여 ‘3불정책(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문제가 재점화 된다. 특히 제4차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위하여 사드 배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일보 16/01/13). 이 발언은 한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동아일보 16/01/21).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다. 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한·미군사력의 방어성

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세계일보 17/07/08). 이에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운용될 AN/TPY-2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의 전략지역을 포괄하며,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⁵⁾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문 열병식 참석으로 당시 언론은 한·중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침체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

2. 한·중 양국의 입장과 인식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에 가입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힌다.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로부터 MD 참여 압력을 강하게 받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부담스러워 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남북관계 경색,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 MD의 기술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MD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변화한다. 특히 친미성향이 강했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간 한·미동맹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한·미동맹 복원’을 대외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안팎에 MD 참여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많았고, 미국 역시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MD 참여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던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환경과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MD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동아일보 07/12/26),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미국의 MD

5) 中国外交部. “2016年9月2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394082.shtml(검색일: 2021년 7월 21일).

체계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세계일보 11/04/15).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졌다. 2014년 11월, 주한 중국대사 추귀홍(邱国洪)을 비롯하여, 2015년 2월, 창완첸 국방부장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불정책’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보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뉴스 14/07/20).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3불정책’과 ‘배치 가능성’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연합뉴스 16/07/08). 2017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6/01/13).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진보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변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 16/07/13). 이에 한·중관계 회복과 사드 배치 철회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미국의 요청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이 정부 차원의 한한령(限韓令)을 내리자 문재인 정부는 ‘3NO 원칙’ 즉, (1)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2) 미국 MD 편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3)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한겨레 17/11/01).

반대로 중국은 사드 배치 공식화 이전부터 사드가 거론될 때마다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4년 11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연합뉴스 14/11/26), 2016년 1월,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연합뉴스 16/01/13)”며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2016년 4월에는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정상에게 직접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호히(firmly)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문화일보 16/04/01).

중국의 반대는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더욱 거세졌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사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세계일보 16/07/08).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의도에 이용되는 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6/07/10). 왕이 부장은 8월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한·중관계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경한 논조의 발언을 이어갔다(한겨레 16/08/24). 중국의 언론들도 사드 반대 기사를 보도하였다. 중국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반대 기사를 발표했고(人民日报 16/07/09), 논조가 특히 강경한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7월 8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한국은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环球时报 17/07/09). 사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도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발표한 바 있다(环球时报 16/02/16).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자 ‘전략적 균형’의 훼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이기현 2018). 또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한·미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이는 대중국 포위, 견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AN/TRY-2 레이더의 탐지 활동이 지린성(吉林省)과 저장성(浙江省)에 배치된 동평(DP)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한다.

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약 두 달 간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447건, 965건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중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각각 235건과 413건이었다. 두 언론의 기사 양만 보더라도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사드는 국내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배제된 대부분의 기사는 사드를 둘러싼 국내 정치와 관련한 기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관계와 사드, 국내 정치적 관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연구도 일부 존재하며, 이들 연구는 정파성이 다른 언론의 보도 양태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권호천 2017; 홍용락 2017; 조박·최낙진 2018).⁶⁾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중국,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본다.

첫째, 사드 배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긍정적 입장을 한겨레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권호천(2017)은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미군의 핵우산 전략에 대해 찬성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사드는 한·미 군 시설과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항만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軍)이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작전적 선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16/12/29; 16/12/19).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6) 권호천(2017)은 정파성에 따른 두 신문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조선일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관점에서 안보와 자주적 국가 방위 프레임에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무자국 프레임과 무계획적인 도입 결정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무책임 프레임을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홍용락(2017)의 분석 역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상이한 관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관점을, 진보언론은 반대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박, 최낙진(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12/22).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한국이 MD에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성주에서의 반대 시위 등 보도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닌 미국 각지에서 진행된 사드 반대 집회를 크게 보도하였고, 기술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사들을 보도하였다(한겨레 16/10/23; 16/10/03). 특히 성주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강경한 입장을 한겨레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취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은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전문가 다이쉬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응할 수단은 장거리 로켓포 및 단거리 미사일 배치 강화 등으로 적지 않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주원후이는 ‘한국은 사드 배치로 미국을 위한 장기판의 말(馬)이 됐다’며 ‘중국인들의 배신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등 중국이 한국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6/07/15). 보수언론의 반중정서 자극은 곧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반면 한겨레는 북한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등장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한·중관계 개선을 주장하였다(한겨레 17/08/02). 예컨대 한겨레는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중국 쪽이 사드 배치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중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였다(한겨레 16/08/11).

Ⅳ. 갈등 이슈 차별성의 정치적 요인

1. 동북공정 보도의 정치적 요인

동북공정은 민족 감정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동북공정 자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극단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모두 ‘또 다른 침략행위’, ‘민족 말살 기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동북공정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06/09/0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대응과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정파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 중국인식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중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통일부 2003).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였다(통일부 2008).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도 빠르게 발전하였다(주장환 200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한·미동맹이 소원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연설에서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부 감축, 용산기지 이전, 전작권 환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강조하였다.⁷⁾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네오콘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과연 한·미 공조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기도 하였다(류호국 2017).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7) 대통령기록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 연설”, “제88주년 3·1절 기념사”, “제57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등. <https://www.pa.go.kr/portal/search/base/search.do>(검색일: 2021년 7월 25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반미정서가 팽배하였다. 이에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 시대의 한·미관계를 벼랑 끝에 선 위기로 표현하였다(박태균 2007).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북핵을 자초하면서 미국의 철수를 구체화한 장본인”이라고 표현하였다(조선일보 07/03/12). 동아일보는 “한·미관계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한·미관계의 위기를 진단했다(동아일보 06/12/08). 군사분야 외에 동맹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중앙일보 03/01/08).

〈표 1〉 동북공정 당시 정당에 따른 대북 및 대외정책과 언론의 보도 양태

	진보		보수	
	열린우리당	한겨레	한나라당	조선일보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포용정책 지지	대북강경책	포용정책 반대
대외정책	한·중관계 증시	중국에 대해 온건한 보도	한·미동맹 강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보도

한·미동맹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은 참여정부의 대미인식과 대북정책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동북공정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이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담론구조는 ‘동북공정 - 중국위협론 - 자주국방을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백선거 외 2009). 즉, 조선일보는 동북공정 보도를 통해 반중정서를 조성하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상대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당위성을 돋보이게 한다. 임기환(2006)이 지적한 것처럼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보다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까지 제기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는 독자들의 반중 정서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다면 반대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황지환 2011). 참여정부 시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된다. 2004년 4월,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당선자(130명) 워크숍에서 진행된 대외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로 중국(63%)을 꼽았다(김희교 2004). 노무현 대통령 또한 2003년 7월, 첫 방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⁸⁾ 이런 측면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진보언론의 논조가 상대적으로 온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진보언론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조선일보보다 비판적이다(김재한 2009).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과 친중 성격의 대중정책 또한 진보언론의 논조에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한계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이창현 2008). 그리고 중국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였다. 참여정부 시기 한·중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이 중국의 역할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동북공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차분하고 내실 있게 대응해야 하며, 외교계·학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오마이뉴스 04/08/09). 진보언론의 입장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증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8)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일: 2021년 7월 22일).

2. 사드 배치 보도의 정치적 요인

사드로 인한 정부 간 외교적 마찰은 양국 국민의 상호 반감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정부가 여러 제재를 가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보수진영과 반대하는 진보진영 간 이념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고, 각 진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중관계 악화라는 국제관계 문제를 국내정치 문제로 환원시켰다. 보수진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반중정서의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였고, 진보진영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중관계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즉, 사드를 둘러싸고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논리와 공격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당과 국민 간 분열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이현경 2015). 최영미·곽태환(2016)은 사드를 둘러싼 쟁점이 한·중관계 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더 집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세계일보 16/08/29).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였다.⁹⁾ 새누리당은 2016년 8월 30일, 사드의 국내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보수진영과 대립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¹⁰⁾

9) 미래통합당. “한미, 사드(THAAD) 배치 결정 관련[김현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http://www.peoplepower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918484(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0)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

또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성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곧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¹⁾ 한·중관계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대중 외교가 실패했다고 논평하였다.¹²⁾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에는 원론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냐로 국론이 양분된 채 정작 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재정 2015).

이처럼 정파성에 따른 정치적 입장은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찬성과 한·미동맹의 당위성 및 강화를 강조하였다.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권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최영미·곽태환 2016), 한·미동맹의 강화는 안보 이슈를 통해 정치적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보수진영에서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 진행된 한·미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³⁾ 따라서 조선일보는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찬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양승현 2016).

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1)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민정수석 지키겠다고 특별감찰관 잘라내는 청와대의 행태는 누워서 침 뱉기다 외 1건.”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452>(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2) 더불어민주당. “[논평]사드 배치, 탄핵 정권에서 더 이상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2501?st=title&keyword=%EC%82%AC%EB%93%9C&page=39>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3) 외교부. “2016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2379(검색일: 2021년 6월 30일).

〈표 2〉 주요 정당의 사드 배치 입장과 대외정책 및 언론의 보도 양태

	진보		보수	
	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새누리당	조선일보
사드배치 입장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대외정책	중국의 역할론 강조	한·중관계 악화 경계	한·미동맹 강화	반중정서 확산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조선일보가 반중정서 확산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인용한 사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중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고, 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 사례와 무력시위 등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반중정서 조장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대 한국 제재를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반중정서 확산에 기여하였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논조의 기사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진보인사인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조선일보 등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였다고 주장하였다(프레스리안 19/03/12). 반대로 진보언론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서 시민 사회의 반대 입장을 정치화한 것처럼 한겨레는 정부와 성주 시민 간 갈등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였다(이승엽 외 2017). 한겨레는 또한 대표적인 반(反)사드 시민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사드 반대 요구와 주장을 소개하면서 집권 여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하였다. 당시 ‘평통사’는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우선 역내 국가 간 외교가 실종되고 군사 정치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모든 방면의 교류와 협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¹⁴⁾ 진보언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선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http://www.spark946.org/notice/comment?tpf=board/view&board_code=6&code=23836(검색일: 2021년 7월 21일).

론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고,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16/08/12).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 바 있다.¹⁵⁾ 이러한 입장은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노선이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보수언론과 반대되는 입장, 즉 반중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중관계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2016년 2월, 추귀홍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프레스인 16/02/24). 이 사례를 보면 중국 또한 진보 언론을 이용해 반중정서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당시 진보언론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보진영을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섰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며 진보진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조선일보 16/08/04). 이 사실을 통해서도 사드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은 사회의 각 조직에 고유한 의미 부여 방식이

15)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15일).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프레임(frame)’이라고 명명했다. 토크만(Tuchman 1978)의 지적처럼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작진의 틀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공되어 재생산된 것이다. 기틀린(Gitlin 1980) 역시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 매체의 뉴스는 생산 과정에서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 거치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재해석된다. 그리고 프레임링을 통해 재생산된 뉴스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건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보도 양태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존재 양식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한·중 간 대표적인 마찰 요인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언론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은 특정 사안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 고유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상호작용 한다.

먼저 동북공정 이슈는 민족 감정과 결부된 역사문제이며,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에 동북공정 보도에서 정파성에 따른 극명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 양태에 차이를 발생시킨 국내 정치적 이유는 당시 진보정권이었던 참여정부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대북정책과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라는 대외정책을 핵심 노선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04년 팽배했던 반미정서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복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 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이익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강경한 논조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반중정서를 자극하기 충분한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었으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과 친중국 성격의 대중정책에는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행위자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대중인식이 중국의 역할론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진보언론의 논조가 온건했던 이유는 동북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증정서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갈등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한미동맹의 당위성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정권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고,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반 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일보가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진보언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한 보도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하다.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수언론이 한·중관계 악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진보언론은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언론은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반증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중관계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한·중관계의 좋고 나쁨은 한·중 간 발생하는 이슈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중관계라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동북공정이 양국 간 문제라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연루된 좀 더 입체적 성격의 문제이다. 국내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념의

편차에 따라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민감한 한·중 양국관계의 쟁점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의 이해타산에 의한 국내 정치 역학은 보혁 언론의 입장으로 수렴되고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이슈의 전선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노정한다.

참고문헌

- 권대열·김봉기. 2006. “중국 속셈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감싸기만…” 『조선일보』 (9월 8일).
- 김민철·이하원. 2006. “中 역사왜곡… 정부 미온적 대처.” 『조선일보』 (9월 8일).
- 김재한. 2009.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권 2호: 140-161.
- 김지윤 외. 2017.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인의 사드(THAAD) 인식.” 『이슈브리프』 2017년 1월.
- 김현숙.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호: 31-61.
- 김희교. 2004. “한국 언론의 동북공정 보도 비판.” 『역사비평』 69호: 35-61.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7.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 분석과 비판 2007-2015』 서울: 역사공간.
- 류호국. 2017. “역대정부(진보/보수)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군사논단』 91권: 172-210.
- 문현숙. 2016. “보수언론, 사드 관련 특정 견해 압박.” 『한겨레』 (8월 12일).
- 박병수. 2016. “사드, 기만탄 가려낼 능력 없어…북 미사일에 무용지물.” 『한겨레』 (10월 3일).
- 박원철. 2004. “[시론] ‘고구려史 방위군’ 만들어야.” 『조선일보』 (1월 9일).
- 박찬수. 2017. “[박찬수 칼럼] 북핵과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 『한겨레』 (8월 2일).
- 박태균. 2007. “한미관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비평』 여름호: 77-99.
- 백선거·김강석. 2009. “동북공정 보도와 담론 및 이데올로기: 기호네트워크 분석 방법(SNA)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12월
- 서재정. 2015.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위협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2호: 414-440.

- 손영준. 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40-266.
- 신승근. 2006. “중 총리 “동북공정 조처 취하겠다.” 『한겨레』 (9월 10일).
- 안수찬. 2004. “(1) 중 패권주의 다시 깨어난다.” 『한겨레』 (7월 19일).
- 양상훈. 2016. “[양상훈 칼럼] 한·미 동맹 없었어도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조선일보』 (12월 29일).
- 양승현. 2016. “한국 사드 배치와 동아시아 여론 동향 분석: 한, 중 및 대만·홍콩 신문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2권: 261-292
- 오영환. 2003. “[재조명 한·미 동맹 50년] 下 군사이의 분야로 동맹 폭 넓혀야.” 『중앙일보』 (1월 8일).
- 유강문. 2004. “‘동북공정’ 동북아 신뢰구축 ‘발목’.” 『한겨레』 (7월 21일).
- 이상수. 2006. “다시 불붙은 ‘동북공정’… 한국정부 대응은 적절했다.” 『한겨레』 (9월 8일).
- 이승엽·강원석. 2017. “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과 언론의 소통 방안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드 배치’ 관련 칼럼과 사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권 2호: 169-195.
- 이원덕. 2004. “한·중·일의 민족주의 열풍.” 『한겨레』 (1월 27일).
- 이창현. 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정보 연구』 11권 1호: 73-97.
- 이철호. 2016. ““사드 배치는 동북아 평화 저해”…미국 곳곳서 사드 반대 집회 열려.” 『한겨레』 (10월 23일).
- 이하원·유석재. 2004. “‘中 고구려사 왜곡’ 정부는 뭐하나.” 『조선일보』 (4월 8일).
- 이현경. 201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방안 모색: 자극·반응의 극대화.” 『통일전략』 15권 2호: 159-180.
- 임기환. 2006.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역사학계의 대응: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사림』 26호: 1-22.
- 조의준. 2016. “트럼프 정부도 “사드배치 옳다.” 『조선일보』 (12월 22일).

- 주장환. 2008.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 중국정책 - 양방향 정책의 관점에서” 『중국학』 제30집: 431-468.
- 최경운. 2016.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 『조선일보』 (7월 15일).
- 최영미·곽태환. 2016.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3호: 57-87.
- 최익림. 2006. “정부 ‘동북공정’ 대응 혼선.” 『한겨레』 (9월 7일).
- 통일부. 2003. 『통일백서』.
- 통일부. 2008. 『통일백서』.
- 홍주현·김경희. 2017.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7권 3호: 162-177.
- 황지환. 2017.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3권 2호: 3-32.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endusky, M. 2013.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3): 611-623.
- DellaVigna, S., and E. Kaplan, 2007. “The Fox News effect: Media bias and vot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1187-1234.
-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付百臣. 2009. “改革开放以来中国高句丽史研究述评.” 『东北史地』 2期: 10-16.
- 刘子敏. 1996. 『高句丽历史研究』.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 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1999. 『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究会-论文集』.

通化: 通化师范学院照排印刷中心.

马大正. 2003. 『中国东北边疆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杨昭全·孙玉梅. 1993. 『中朝边界史』.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东北工程办公室 编. 2004. 『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作』. 内部参考.

Ideological Discrepancy in Media Coverage on ROK-China Controversy: Comparative Analysis on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Deployment

Youngduk Jang*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n media's coverage on issues related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installment.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media's divergent angle stemming from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aims at understanding the role played by media and its framing in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ino-ROK relations. The findings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Chosun Ilbo strongly condemned China's Northeast Project, while depicting it from security and political perspective. Its censorious tone is deemed as an attempt to rally conservatives by reinforcing anti-China sentiment. By contrast, The Hankyoreh, albeit also critical, took a relatively moderate stance toward the project. The moderate stance is perhaps because of the fact that China's role is especially decisive in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has a close linkage with inter-Korean cooperation, a core issue of a policy line of liberalist camp. With regard to the THAAD deployment, Chosun Ilbo endorsed the installment of the THAAD and criticized China's opposition and economic retaliation. The newspaper, supporting to strengthen U.S.-ROK alliance, encouraged anti-China sentiment in order to accomplish conservative camp's political end. On the contrary, The Hankyoreh strongly denounc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ndeavor to foster public sentiment favorable to mending fences with China in order to accomplish liberalist camp's political goal of inter-Korean cooperation.

Keywords : Sino-ROK Relations, Media Partisanship, Northeast History Project, THAAD, Domestic Political Factors

투고일: 2021.09.07. 심사일: 2021.11.05. 게재확정일: 2021.11.16.

* Research Professor, Inha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07>

【연구논문】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김대환**·한상용***

논문요약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가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분상승 가능성과 국민 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사회경제적 지위, 신분상승,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소득계층

*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저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I.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계층체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혼합한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Baker, 2014). 사회적 지위는 주로 직업, 교육수준 등에 의해 평가되고 경제적 지위는 주로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자산 등에 의해 평가된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건강, 언어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Adler et al 1994; Seeman and Crimmins 2001; Anderson and Brion 2014).

효용(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의사결정 원리를 규명하는 대표적인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한다(Azizi et al 2017).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1조 6,463달러로 세계 12위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동 시기에 한국은 전 세계 153개의 평가 대상국 중 행복수준이 61위에 머물렀다(UN 2020).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행복의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구재선·서은국 2011).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본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평가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시기적 변화를 최근 정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에 대한 실증분석을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활용된 모형과 자료를 기술한다. 제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논의하고, 제 V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은 상당수가 행복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행복도를 연구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사회경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재우 2019; 윤인진·김상돈 2008).

또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식 간 격차가 행복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연경·이승종 2017). 이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들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Diener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행복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12; Boyce et al 2010; Clark et al 2008; Luttermer 2005).

하지만 Easterlin (1974)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GDP가 증가하더라도 행복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Easterlin의 역설'이라고도 일컫는데, 이후 동 역설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Hagerty et al 2003). 이는 경제학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행복)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추가로 증가할 때 효용의 증가 정도는 점차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증가에 효용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실증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직업, 교육수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구교준 외 2014; Zhou 2014).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모두 현재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행복수준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재의 신분²⁾(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신분의 상승 자체가 아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kici and Koydemir(2016)는 영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소득, 연령, 나이, 교육 수준 등이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지만 동일한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개인, 나아가 국가 전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미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승 기대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Lee and Baek(201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비록 현재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에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수록 개인의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계층사다리를 위한 지출을 통해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 나아가 국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행복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전적 의미로 ‘신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나, 표현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등의 표현을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 ‘신분상승’이라고 통용되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술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아마도 가용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만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닌 특정 도시 또는 계층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것에 한정된다. Ekici and Koydemir(2016)은 동 주제와 관련하여 패널자료(panel data)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과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떠한 추세를 보여 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러한 흐름이 국민 전체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첫째,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식 1)을 패널자료(panel data)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한 패널자료가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에 비해 우월하다(Green, 2003).

$$Class_{it} = Year_t' \alpha + X_{it}' \beta + u_{it} \quad (\text{식 1})$$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Class_{it}$ 은 개인 i 가 t 기에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의미한다. $Year'_t$ 는 연도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의 벡터(vector)이며 α 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신분상승 가능성 지표를 보여주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의 벡터다.

X'_{it} 는 $Year'_t$ 를 제외하고 종속변수 $Class_{it}$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회귀계수의 벡터다. 마지막으로 u_{it}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오차항은 전통적인 오차항(ϵ_{it}) 외에도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인 c_i 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고정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별 특성을 의미한다.

$$u_{it} = c_i + \epsilon_{it} \tag{식 2}$$

만약 개인고정효과가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추정계수(estimated coefficient)에 편의(bias)가 발생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고정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적합하며, 반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적합하다(Wooldridge, 2010).

고정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는 Hausman 테스트로 검정(Hausman, 1978)할 수 있는데, 검정 결과 모든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p < 0.05$),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주요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차분방식을 이용해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게 된다(Green, 2003). 참고로,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고 (식 1)처럼 연도별 영향(시간고정효과)을 직접 통제하는 모형을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즉, $Year_t$ 의 추정계수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 개인고정효과를 배제한 상황에서 국내 성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를 보여주게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식 3)을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최근 두 번의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Class_{it} = \gamma PreviousRegime_t + \delta CurrentRegime_t + X'_{it}\beta + u_{it} \quad (\text{식 3})$$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2013~2019년이므로 동 기간에 이전 정부(2013~2016)와 현 정부(2017~현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PreviousRegime*은 이전 정부, 그리고 *CurrentRegime*은 현 정부를 의미하며, 이때 기준 시기(reference time)은 2013년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γ 는 2013년과 비교한 과거 정부(2014~2016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δ 는 2013년과 비교한 현 정부(2017~2019년) 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하는 하나의 더미변수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³⁾, 과거 정부의 3년, 현 정부의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식 3)처럼 설정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는 (식 4)를 활용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였다.

$$Class_{it} = Year'_t\alpha + \eta LowClass_{it} + LowClass_{it} * Year'_t\theta + X'_{it}\beta + u_{it} \quad (\text{식 4})$$

$$i = 1, 2, \dots, N, \quad t = 2013, 2014, \dots, 2019$$

*LowClass_{it}*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며, η 는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과 저소득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⁴⁾. *LowClass_{it} * Year'_t*

3) 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식 3)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식 4)처럼 계층을 구분하였다.

는 저소득층과 연도변수의 교호작용변수 벡터로 시기가 변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추이 차이를 보여준다. (식 4)에서 소득계층은 가구소득으로 구분한 변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1) 및 (식 3)의 X_{it} 에서 가구소득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⁵⁾

넷째, 본 연구는 (식 5)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LowClass_{it}$ 을 고소득층을 의미하는 $HighClass_{it}$ 로 교체하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Class_{it} = Year'_t\alpha + \eta HighClass_{it} + HighClass_{it} * Year'_t\theta + X'_{it}\beta + u_{it} \tag{식 5}$$

$$i = 1, 2, \dots, N, t = 2013, 2014, \dots, 2019$$

(식 5)의 분석 방식과 해석 방식 모두 (식 4)와 동일하다. 참고로, (식 1)~(식 5)에서 동일한 변수더라도 통제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표기의 편의상 동일한 그리스 문자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 분석 자료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종속변수 $Class_{it}$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수록 숫자 1, 2, 3, 4를 부여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순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의 사용이 적합한데, 실증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usman 테스트의 결과로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검증되어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 다만,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은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나 변동성이 낮은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

5) 유사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rishna, 1975).

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로도 분석하였다(Cameron and Trivedi 2005).

또한 순위로짓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계수는 그 자체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산비(Odds Ratio : OR)로 전환하였다. 승산비는 아래 (식6)과 같이 계산되었다.

$$OR = e^{\text{estimated coefficients}} \quad (\text{식 } 6)$$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2013~2019년)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또는 패널조사(longitudinal survey)다⁶⁾.

국내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다양한 패널자료가 가용하나, 한국노동패널은 국내 패널자료 중 가장 먼저 구축된 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집하였으며, 특히 표본수도 충분해 결과의 일반화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각 개인을 대상으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매년 질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현재 2019년에 조사한 22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표본을 최근 7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상승에 대한 설문은 8차 때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7차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 둘째, 시기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활용이 중요한데, 특히 분석기간 동안 동일한 대상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완벽히 동일한 대상을 유지하면서 설문한 균형패널자

6)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대한 기초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li.re.kr>).

료(balance panel data)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분석 대상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일 경우 중도에 사망하거나 중도에 신규 편입된 표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확대할수록 관측수는 증가하지만 표본수가 감소하여 한 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포괄할 수 있는 2013~2019년 데이터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한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61,838개의 관측수(매년 8,834명의 표본)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_____님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계량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만약 동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1을,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 2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면 3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4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종속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순위적인 의미를 지닌다.

〈표 1〉은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이름과 정의를 보여준다. 설명변수로는 분석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도별 더미변수, 소득계층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들이 활용되었다. 소득계층의 분류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이 활용되는데, 중위소득의 25%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였다.

X_{it}^j 에는 연령대, 성별, 학력수준, 혼인상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특성 변수가 포함된다. 가구특성에는 연간 가구소득과 자산이 포함되는데,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로그값으로 전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특히 가구소득은 개인소득으로 전환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소득으로 전환하였다(식 7 참조). 이는 동일한 가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소득수준 또는 생활수준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가구원수의 제공근이 활용되는 이유는 가구원들이 의식주를 공용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text{균등화소득} = \frac{\text{연간 총 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quad (\text{식 7})$$

패널자료는 횡단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성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 가치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과정에서 20대, 여성, 고졸미만, 미혼, 무직과 같은 그룹변수들의 경우, 2013년이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활용되었다.

〈표 1〉 변수 이름 및 정의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종속변수	신분상승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 1, “별로 그렇지 않다”면 2, “대체로 그렇다”면 3, “매우 그렇다”면 4
계층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1, 아니면 0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초과면 1, 아니면 0
나이	20대	나이가 20대면 1, 아니면 0
	30대	나이가 30대면 1, 아니면 0
	40대	나이가 40대면 1, 아니면 0
	50대	나이가 50대면 1, 아니면 0
	60대	나이가 60대면 1, 아니면 0
	70세 이상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1, 아니면 0
성별	여성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학력수준	고졸미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고졸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대졸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혼인상태	미혼	결혼을 한적이 없으면 1, 아니면 0
	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으면 1, 아니면 0
	무배우자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없으면 1, 아니면 0
노동시장 참여 형태	무직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1, 아니면 0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이면 1, 아니면 0
	자영업자	자영업자이면 1, 아니면 0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건강이 아주 안좋다”면 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면 2, “보통이다”면 3, “건강한 편이다”면 4, “아주 건강하다”면 5

가구 특성	로그(가구소득)	균등화소득(단위 : 만원)의 로그값
	로그(자산)	가구자산(단위 : 만원)의 로그값
연도	2013년	2013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4년	2014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5년	2015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6년	2016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7년	2017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8년	2018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9년	2019년 설문자료이면 1, 아니면 0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기술통계를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저소득층, 고소득층) 수치들도 보여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평균값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하여 통계적 유의성도 표시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2013~2019년 동안 한국인들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4점 만점 중 2.5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층은 2.66점으로 저소득층의 2.48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2.89세였는데, 저소득층은 65.92세로 고소득층 47.34세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이는 한국이 OECD 국가와 빈곤율이 큰 차이가 없으나 노인계층의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한 김대환 외(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성별 비율을 고려 시, 양쪽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OECD 국가 중 한국은 성별 소득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OECD, 2021) 경제활동이 여전히 남성 중심인 한국의 성역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의 최근 자료⁷⁾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 차이가 평균 12.8%인데, 한국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학력수준 차이도 매우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저소득층이 61%이고 고소득층은 11%인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저소득층이 13%이고 고소득층은 52%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자나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높고,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았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무직자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근로자가 많았는데 특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도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큰데, 1~5점으로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전체 샘플의 경우 3.4점, 저소득층은 2.94점, 고소득층은 3.69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도 좋다고 평가하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계층 간 소득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간 동안 평균 균등화소득이 2,501만원인 반면 저소득층은 482만원, 고소득층은 4,970만원으로 무려 10.3배의 차이를 보였다. 기술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평균 가구원수가 1.98명으로 고소득층의 3.76명보다 절반 정도이며, 균등화소득 이전의 가구소득은 각각 659만원, 9,360만원으로 그 차이가 14.2배로 확대된다. 반면, 두 소득계층 간 자산의 차이는 3.5배로 소득차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구분	전체 샘플		저소득층		고소득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분상승	2.52***	0.66	2.48	0.71	2.66	0.59
저소득층	0.26***	0.44	1.00	0.00	0.00	0.00
고소득층	0.25***	0.43	0.00	0.00	1.00	0.00
연령	52.89***	15.22	65.92	14.45	47.34	11.42
20대	0.05***	0.21	0.03	0.16	0.07	0.26
30대	0.17***	0.38	0.05	0.21	0.18	0.38
40대	0.23***	0.42	0.07	0.25	0.32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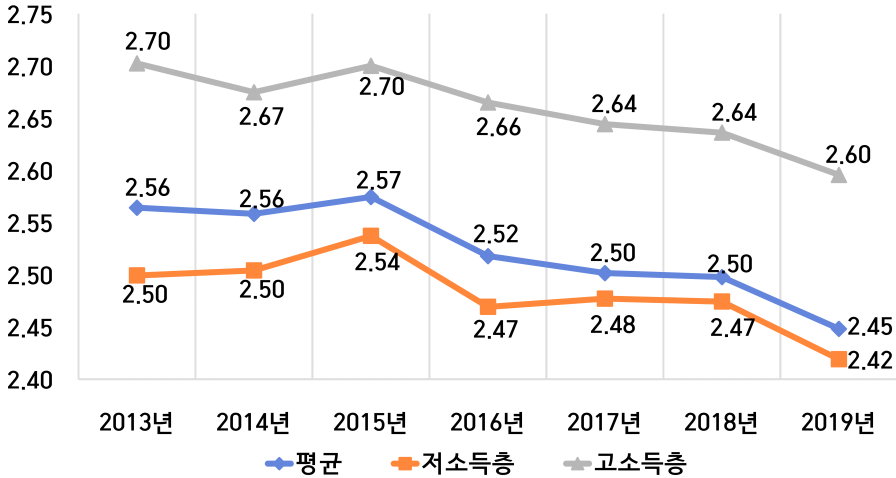
7) OECD가 2016~2019년 자료를 집계하여 2021년에 발표한 수치를 활용하였다.

50대	0.21***	0.41	0.10	0.30	0.31	0.46
60대	0.17***	0.38	0.28	0.45	0.10	0.30
70세 이상	0.17***	0.37	0.48	0.50	0.03	0.16
여성	0.53***	0.50	0.59	0.49	0.52	0.50
남성	0.47***	0.50	0.41	0.49	0.48	0.50
고졸미만	0.30***	0.46	0.61	0.49	0.11	0.31
고졸	0.36***	0.48	0.26	0.44	0.37	0.48
대졸	0.34***	0.47	0.13	0.34	0.52	0.50
미혼	0.10***	0.30	0.08	0.27	0.10	0.30
배우자	0.76***	0.43	0.59	0.49	0.87	0.34
무배우자	0.14***	0.35	0.34	0.47	0.03	0.18
무직	0.35***	0.48	0.60	0.49	0.22	0.42
임금근로자	0.44***	0.50	0.22	0.42	0.53	0.50
자영업자	0.21***	0.41	0.14	0.35	0.20	0.40
건강상태	3.40***	0.77	2.94	0.86	3.69	0.60
로그(가구소득)	7.02***	2.22	4.33	2.97	8.43	0.35
가구소득	2501.01***	2259.46	481.96	488.77	4969.60	2971.64
로그(자산)	6.43***	3.38	4.75	3.80	8.12	2.45
자산	7656.41***	23164.51	4428.01	12978.89	15352.33	38472.61
2013년	0.14	0.35	0.15	0.35	0.14	0.35
2014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5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6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7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8년	0.14	0.35	0.14	0.35	0.14	0.35
2019년	0.14	0.35	0.14	0.35	0.14	0.35
관측 수	61,838		15,786		15,364	

주: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평가한 값을 연도별로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3개의 그래프가 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소득층은 2015년 한 해에만 증가할 뿐 지속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저소득층은 2016년도와 2019년도에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한 반면 다른 해에는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3〉은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Hausman 검증 결과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도 동 모형에 집중한다. 또한 해석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위해 추정계수가 아닌 승산비(OR)를 활용한다. 〈표 3〉은 본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결과는 2013~2015년 동안 한국인들이 평가한 신분상승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크게 감소한다.

추정계수를 고려할 때 2013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0.83배로 감소하고, 2017년도에는 0.76배, 2018년도에는 0.75배, 2019년도에는 무려 0.61배로 감소한다. 승산비를 역산해보면 2019년도에 비해 과거 2013~2015년도에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1.64배나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에 비해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에서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모형 모두에서 건강상태, 소득, 자산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의 정도 역시 매우 컸다. 특히 건강상태의 영향이 컸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건강상태를 1~5점으로 평가할 때 건강상태가 한 단위 개선될 때마다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1.41배나 증가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신분상승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는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 성별 효과를 고려할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오히려 신분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1.19배 신분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8***	0.03	0.92	-0.03	0.04	0.97
2015년	-0.05*	0.03	0.95	0.04	0.04	1.04
2016년	-0.26***	0.03	0.77	-0.19***	0.04	0.83

2017년	-0.37***	0.03	0.69	-0.27***	0.04	0.76
2018년	-0.40***	0.03	0.67	-0.28***	0.04	0.75
2019년	-0.57***	0.03	0.57	-0.49***	0.04	0.61
30대	-0.34***	0.05	0.71	-0.14	0.11	0.87
40대	-0.41***	0.05	0.67	-0.25*	0.14	0.78
50대	-0.31***	0.05	0.74	-0.23	0.16	0.79
60대	0.03	0.05	1.03	-0.32*	0.18	0.72
70세 이상	0.59***	0.06	1.81	-0.23	0.20	0.79
고졸	-0.02	0.02	0.98	0.76	0.55	2.14
대졸	0.24***	0.03	1.27	0.40	0.56	1.49
배우자	0.25***	0.03	1.28	0.24*	0.14	1.28
무배우자	0.13***	0.04	1.14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5***	0.02	0.86	-0.09	0.05	0.92
자영업자	-0.01	0.02	0.99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가구소득)	0.02***	0.00	1.02	0.02**	0.01	1.02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아래 <표 4>는 연도별이 아닌 정권별로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초에 비해 전 정부(2014~3016년)때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계수를 고려 시, 2013년에 비해 전 정부에서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0.77배로 감소한 뒤에 현 정부에서는 무려 0.64배로 더 크게 감소했다. 승산비를 역산하면 현 정부 때보다 국민들이 과거 2013년도에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1.56배나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분석결과와는 추정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 등이 <표 3>의 결과와 대동소이하여 세부적인 해석과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표 4〉 정권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2016년	-0.38***	0.03	0.69	-0.26***	0.04	0.77
2017년 이후	-0.56***	0.03	0.57	-0.44***	0.05	0.64
30대	-0.34***	0.06	0.71	-0.29**	0.13	0.74
40대	-0.42***	0.07	0.66	-0.45***	0.16	0.64
50대	-0.33***	0.07	0.72	-0.51***	0.20	0.60
60대	-0.02	0.07	0.98	-0.64***	0.23	0.53
70세 이상	0.55***	0.08	1.73	-0.60**	0.26	0.55
고졸	-0.05	0.03	0.96	0.86	0.68	2.37
대졸	0.22***	0.04	1.25	0.43	0.70	1.54
배우자	0.34***	0.05	1.40	0.26*	0.16	1.30
무배우자	0.18***	0.06	1.20	0.34	0.21	1.41
임금근로자	-0.14***	0.03	0.87	-0.15***	0.06	0.86
자영업자	0.04	0.04	1.04	0.12	0.09	1.13
건강상태	0.49***	0.02	1.63	0.37***	0.03	1.44
로그(가구소득)	0.01	0.01	1.01	0.01	0.01	1.01
로그(자산)	0.09***	0.00	1.09	0.04***	0.01	1.04
남성	-0.19***	0.02	0.83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3. 소득계층별 그리고 시기별 신분상승에 대한 변화

〈표 5〉는 연도더미변수와 소득계층(저소득층)의 교호작용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 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3~2015년 동안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변화가 없었고, 2016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에는 0.59배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의 추정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상 소득자들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변화가 아닌 2013~2019년 동안 신분상승에 대한 가능성 평가가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변수는 시기별로 소득계층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에는 유독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2017년도에는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이며, 당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저소득자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작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처럼 저소득층과 다른 계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표 5〉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저소득층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10***	0.04	0.90	-0.06	0.04	0.94
2015년	-0.08**	0.04	0.92	0.00	0.04	1.00
2016년	-0.28***	0.04	0.76	-0.21***	0.05	0.81
2017년	-0.40***	0.04	0.67	-0.32***	0.05	0.73
2018년	-0.42***	0.04	0.65	-0.31***	0.05	0.73
2019년	-0.58***	0.04	0.56	-0.52***	0.05	0.59
저소득	-0.19***	0.05	0.83	-0.30***	0.07	0.74
2014년*저소득	0.07	0.07	1.07	0.09	0.08	1.09
2015년*저소득	0.11	0.07	1.12	0.15*	0.09	1.16
2016년*저소득	0.05	0.07	1.05	0.05	0.08	1.05
2017년*저소득	0.12**	0.07	1.13	0.17**	0.09	1.19
2018년*저소득	0.08	0.07	1.08	0.10	0.09	1.11
2019년*저소득	0.04	0.07	1.04	0.10	0.09	1.11
30대	-0.34***	0.05	0.71	-0.15	0.11	0.86

40대	-0.40***	0.05	0.67	-0.25*	0.14	0.78
50대	-0.30***	0.05	0.74	-0.23	0.16	0.79
60대	0.06	0.06	1.06	-0.31*	0.18	0.73
70세 이상	0.62***	0.06	1.86	-0.23	0.20	0.80
고졸	-0.03	0.02	0.97	0.76	0.54	2.14
대졸	0.24***	0.03	1.27	0.41	0.56	1.50
배우자	0.23***	0.03	1.26	0.23	0.14	1.26
무배우자	0.12***	0.04	1.13	0.23	0.19	1.26
임금근로자	-0.14***	0.02	0.87	-0.09*	0.05	0.92
자영업자	0.00	0.02	1.00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1	0.35***	0.02	1.41
로그(자산)	0.09***	0.00	1.09	0.03***	0.00	1.03
남성	-0.17***	0.02	0.84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식 4)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의 교호작용 변수는 다른 소득계층 대비 저소득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득계층 별 평가차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기준그룹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산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소득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두 그룹의 평가가 상쇄될 수 있다. 이에 아래의 <표 6>은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교체하여 (식 5)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신분상승에 대한 평가 추이는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에 비해 신분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 시,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도에는 고소득층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럽지만, 2013~2014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고소득층과 다른 소득계층 간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 4)를 분석한 <표 5>와 (식 5)를 분석한 <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득계층별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으로만 변동된 것이 관측되었을뿐 2013~2015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16년부터 부정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매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표 3>의 결과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소득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평가 : 고소득층

구분	모델1			모델2		
	순위로짓확률효과모형			순위로짓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추정계수	표준오차	OR
2014년	-0.06*	0.03	0.94	0.01	0.04	1.01
2015년	-0.04	0.04	0.96	0.07	0.04	1.07
2016년	-0.26***	0.03	0.77	-0.17***	0.04	0.84
2017년	-0.37***	0.03	0.69	-0.25***	0.04	0.78
2018년	-0.41***	0.03	0.66	-0.28***	0.05	0.76
2019년	-0.58***	0.04	0.56	-0.49***	0.05	0.61
고소득	0.43***	0.05	1.54	0.25***	0.08	1.28
2014년*고소득	-0.08	0.07	0.92	-0.18**	0.09	0.84
2015년*고소득	-0.01	0.07	0.99	-0.12	0.09	0.89
2016년*고소득	0.03	0.07	1.03	-0.07	0.09	0.93
2017년*고소득	0.04	0.07	1.04	-0.08	0.09	0.92
2018년*고소득	0.08	0.07	1.08	0.01	0.09	1.01
2019년*고소득	0.09	0.07	1.09	0.00	0.10	1.00
30대	-0.25***	0.05	0.78	-0.14	0.11	0.87
40대	-0.36***	0.05	0.70	-0.25*	0.14	0.78
50대	-0.29***	0.05	0.75	-0.24	0.16	0.79
60대	0.11**	0.05	1.12	-0.32*	0.18	0.73
70세 이상	0.65***	0.06	1.92	-0.22	0.20	0.80
고졸	-0.05**	0.02	0.95	0.78	0.56	2.18
대졸	0.16***	0.03	1.17	0.39	0.58	1.48
배우자	0.20***	0.03	1.22	0.24	0.15	1.27
무배우자	0.11***	0.04	1.12	0.24	0.19	1.27
임금근로자	-0.16***	0.02	0.85	-0.08*	0.05	0.92

자영업자	-0.02	0.02	0.98	0.02	0.07	1.02
건강상태	0.47***	0.01	1.60	0.34***	0.02	1.40
로그(자산)	0.08***	0.00	1.08	0.03***	0.00	1.03
남성	-0.16***	0.02	0.85			

- 주: 1. 모델1, 모델2 모두 Prob > F = 0.000.
 2. 관측수 : 61,838(모델1, 모델2).
 3. *, **, ***는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V.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는 개인, 나이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경제규모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수준도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개선되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UN 2020).

궁극적으로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만큼 과연 한국인들은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2013~2019)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 정도를 최근 정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추세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평가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평가 점수보다도 그러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인데,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지속적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전 정부보다는 현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최근으로 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악화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국민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는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해 국민들이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행복도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신분상승 가능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여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8권 2호: 317-339.
- 구재선·서은국. 2011.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27-52.
- 김대환·이봉주·류건식. 2017.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보험학회지』 제110권: 1-29.
-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행정논총』 제57권 4호: 97-127.
- 윤인진·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21권 2호: 153-185.
- 이연경·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5권 1호: 1-39.
- Adler, N. E., T. Boyce, M. A. Chesney, S. Cohen, S. Folkman, R. L. Kahn, and S. L. Syme.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challenge of the gradient.” *American Psychologist* 49(1): 15-24.
- Anderson, C., M. W. Kraus, A. D. Galinsky, and D. Keltner. 2012. “The local-leader effect: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7): 764-771.
- Anderson, C. and S. Brion. 2014. “Perspectives on power in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67-97.
- Azizi, M., F. Mohamadian, M. Ghajarieah, and A. Direkvand-Moghadam. 2017.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socio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 on individual happiness: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11(6): VC01-VC04.

- Baker E. H. 2014. "Socioeconomic status, defini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2210-2214
- Boyce, C. J., G. D. Brwon, and S. C. Moore.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 Cameron, A. C. and P. K. Tivedi. 2005.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lark, A. E., P. Frijters, and M. A.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Easterline,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Cambridge, Academic Press.
- Ekici, K. and S. Koydemir. 2016. "Income expectation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British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 539-552.
- Greene, W. H. 2003.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USA.
- Hagerty, M., and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ausman, J.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6): 1251-1271.
- Kraus, M. W. and D. Keltner. 2008.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1): 99-106.
- Krishna, K. T. 1975. "Multicollinearity in regression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7(3): 365~366.

- Luttermer, E.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Seeman, T. E., and E. Crimmins, E. 2001. "Social environment effects on health and aging: integrating epidemiologic and demographic approaches and perspectiv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ociety* 954(1): 88-117.
- Wooldridge, J.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nd Edition. The MIT Press.
- OECD. 2021.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accessed July 3, 2021).
- UN. 2020. "World happiness report."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0/WHR20.pdf>.
- Zhou, W. 2014. "Determinants of Korean happiness: a cross-sectional analysis." In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edited by Sung Wa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hanges in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Class Elevation in Korean Society

Daehwan Kim*·Sangyong, Han**

ABSTRACT

It is known that a hopeful evaluation of whether socioeconomic status can be improved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of a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s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long-ter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an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is not as high as 2.52 out of 4, and more importantly, our evidence shows that the expectation gradually gets worse. In particular, we find that Koreans are much more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ocioeconomic status under the current regime than the previous regime. In addition, the results of subdivided analyses by income class provide evidence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gradually deteriorates in all classes, not in specific classes. For future research,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find out why Koreans negative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why it is getting worse in recent years as well 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the level of happiness.

Keywords : Socioeconomic Status, Social Class Elevation,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Ordered Logit Random Effect Model, Income Class

투고일: 2021.09.02.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19.

* Professor, Dong-A University

** Research Fellow,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35>

【연구논문】

**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논쟁과 미중 관계에의 함의**

은진석*·이정태**

— 논문요약 —

믿음이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바, 정치는 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이러한 믿음의 생산이 매우 오래된 정치 전략임을 시사한다.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세간의 논쟁은 팬데믹 사태 이래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두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강한 증거의 부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재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논쟁은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상 과학의 위상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이며, 국가가 패권과 같은 특정한 위신을 얻기 위해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성을 보인다.

코로나 논쟁이 지니는 과학적·정치적 담론으로서 성격은 논쟁을 주도하는 미·중의 이해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탐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논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고찰한다.

주제어: 코로나 진원지, 미·중관계, 패권,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연구지원팀, 주저자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사실과 장치의 구축은 집단적 과정이다(Latour 2016, 65).”

인간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기도 한다. 세상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산재하며, 그 해답에 대한 갈구는 때때로 그럴듯한 음모론의 탄생을 야기한다. 코로나는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인류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신뢰다. 특정한 인종에 대한 혐오가 대두되었으며, 코로나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믿음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바, 정치는 의도적으로 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정당화할 구실로 통킹만(Gulf of Tonkin)에서의 무력 충돌을 연출한 바 있다(Flanagan 2009, 112-118). ‘전쟁은 기만을 그 근본에 둔다(兵者 詭道也)’는 손자병법의 경구는 속임수와 믿음의 인위적 조작과 같은 전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세간의 논쟁은 팬데믹 사태 이래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했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두 개의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연 기원설이 그중 하나요, 연구소 유출설이 또 다른 하나다. 이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쟁은 믿음을 두고 벌이는 갈등의 형태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의 근원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관계 수립 경쟁으로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과 정치 사이에 모종의 동맹이 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코로나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은 소수설에 불과한 특정 논리 또는 믿음을 다수가 신봉하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만드는 ‘퍼즐풀이(puzzle-solving)’ 과정이며,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리의 지지자들과 맺은 관계를 요한다. 패권(hegemony) 경쟁 또한 패권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승인하는 다수의 지지자들과 맺어진 관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퍼즐 풀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다. 즉 정상 과학과 패권은 동료 집단 및 다양한 비인간적 요인들과 맺은 우호적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관계 확보 경쟁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동 이론이 지니는 과학의 사회학으로서의 성격과 국제정치 분석 수단으로서 역할은 과학과 정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관계 경쟁의 동학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바이러스, 연구소, 동물, 인간과 맺은 관계를 통해 전개되며 정상과학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코로나 진원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청중 국가들과 바이러스, 연구소 등과의 관계를 통해 전개되는데 두 차원의 경쟁이 바이러스와 연구소라는 공통의 접점을 지니는 바, 과학과 정치 사이에는 모종의 동맹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백신을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삼는 등 최근 보건 영역을 전략 경쟁의 무대로 택한 바 있으며(은진석 외 2021a), 디지털 기술의 차원에서도 경쟁을 벌이는 등(김상배 2021), 과학과 정치의 동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특정한 목적 달성에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논쟁에 내재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II.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양상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의 기원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미국의 행정부 수장이었던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로 지칭하는 트윗을 올리며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Viala-Gaudefroy et al. 2021). 나아가 트럼프는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Singh et al., 2020). ‘연구소 유출설(lab-leak hypothesis)’이라 불리는 논리는 이렇게 시작되

었다.

이러한 주장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주로 과학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비롯한 의료 및 과학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문제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Calisher et al. 2020).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대비가 목적이어야 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성명의 핵심이다. 논쟁은 WHO의 우한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식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한을 방문한 WHO 조사팀에게 특정 정보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인 태도가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신빙성 논란을 심화시킨 것이다(Bloom et al. 2021; BBC 2021a). 이 과정에서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시각은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로 양분되었다. 전자는 과학계에 의해, 후자는 주로 언론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코로나의 기원이 어디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두 가설은 모두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름의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 기원설의 경우 바이러스의 변이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증적 접근을,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인물과 조직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어떤 사건의 인과를 제시하고, 독자들을 설득함으로써 특정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에 있어 흔히 제기되는 오해 중 하나는 과학적 발견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실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의 상당 부분은 특정한 조건이나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왜곡의 가능성을 언제나 함유하고 있어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세간의 논쟁이 국제정치의 최대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정치적 목적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단락에서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는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두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에 내재된 논증의 방식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먼저 코로나 자연 기원설의 논리를 살펴본다. 해당 논리는 주로 역학 조사의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연구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 중 현재까지 신빙성이 있고 공개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초 우한을 방문한 WHO 조사팀이 발간한 조사 보고서가 사실상 유일하다.

WHO 보고서는 WHO 소속의 의료 전문가, 국제 연구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HO 중국 사무소 및 현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진행한 역학 조사와 자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WHO 2021).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 측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28일의 조사 기간 중 14일 간의 격리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14일이다. 격리 기간 중에는 중국 측 조사진과의 화상 회의를 통한 브리핑과 질의 응답을 통해 중국측이 수집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WHO 2021, 13). 보고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와 그 가능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WHO 2021, 9).¹⁾

〈표 1〉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WHO의 분석

연번	전파 시나리오	가능성
1	동물-인간 직접 전파	보통(possible) ~ 높음(likely)
2	중간 매개를 통한 전파	높음(likely) ~ 매우 높음(very likely)
3	냉장식품 운송과정에서의 전파	보통(possible)
4	연구소 유출(사고)	극히 낮음(extremely unlikely)

먼저 확산 경로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을 살펴보면 우한 외의 지역의 경우 바이러스의 본격적 확산이 시작된 기간에 사망자 추이 등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1) WHO(2021, 82)의 자료를 저자가 발췌 및 정리

않는다. 우한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감염 사례는 2019년 12월 8일의 남성으로, 우한 팬데믹의 주요 확산 경로로 지목받은 화난 시장(Huanan market)에 노출되었던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WHO 2021, 44). 한편 이보다 일주일 앞선 12월 1일에 미약한 호흡기 증세를 보인 62세 남성의 경우 12월 2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전술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화난 시장을 방문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인물의 아내는 이 시장과 밀접히 접촉한(close contact) 이력이 있으며, 12월 26일 코로나 증세로 입원하였고,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WHO 2021, 46).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보고서는 화난 시장이 코로나의 확산 및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조사팀에게 제공된 시간이 '제한적(limited)'인 관계로 심도있는 조사가 어려웠으므로 향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권고하였다(WHO 2021, 47).

이어서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을 살펴보자. 연구진은 코로나의 가장 근접한 선조가 생성된 시기를 2019년 12월 11일로 추정한다(WHO 2021, 79). 오차 범위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 까지로 신뢰도는 95퍼센트이다. 보고서는 타 국가들에서 발견된 코로나 유사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표2), 이들을 근거로 코로나의 확산이 우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표 2〉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코로나 의심사례²⁾

사례	확진체	확진경로	지역	확진시기
A	하수구 채집물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이태리 북부	12월 중순
B	소아	홍역의심증세를 보여 인두 도말(throat swab)체에 대한 PCR 검사 시행	이태리 북부	12월 초순
C	25세 여성	2019년 11월 수집한 피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한 PCR 검사(음성), 혈청검사(양성)	이태리 북부	2020년 6월

2) WHO(2021, 82)의 자료를 저자가 발췌 및 정리

D	미상의 환자	객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구강 인후에서 채집한 샘플에 대한 RT-PCR 검사(양성), 별도의 혈청 검사에서 다량의 중화항체 발견	프랑스	2019. 12. 27
E	하수구 채집물	RT-PCR 검사	브라질	2019. 11. 27
F	헌혈 샘플	7,389개의 헌혈 샘플 보존체에 대하여 행한 혈청 검사에서 106개 샘플이 양성 반응	미국	헌혈샘플 수집기간 (2019.12.13 ~ 2020.1.17)

보고서는 바이러스의 매개에 대하여 천산갑, 멧돼지 등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WHO 2021, 58-92). 이 점이 자연 기원설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WHO 보고서는 바이러스의 인간과 동물, 또는 매개동물을 경유한 확산 가능성에 기반을 둔 자연 기원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파된 명확한 경로나 근원지를 규명해 내지 못함으로써 인과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의 논리를 살펴본다. 본 주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의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평가함에 따라 관련 논쟁이 재점화되었다(Ray 2021). 당국은 해당 논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결과 도출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소 유출설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고문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논리를 살펴볼 것이다. 두 기고문은 각각 미국의 작가인 베이커(Nicholson Baker)와 과학 분야의 저널리스트인 웨이드(Nicholas Wade)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자연 기원설이 주로 통계나 진단 결과와 같은 실증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의 주장은 주로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는 해석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2021년 1월 4일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베이커(Baker 2021)는 자신이 저술한 책에 등장하는 미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Baseless Project)와 개발 과정에 있었던 바이러스 유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바이러스의 인위적 조작과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몇 차례의 유출 사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그는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퓨린 분절 부위(furin cleavage site)가 이상할 만큼 완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당 부위는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자연의 산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를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옌리명(Li-Meng Yan) 박사가 제기한 의혹과 맥을 같이한다(Yan et al. 2020a; Yan et al. 2020b). 그러나 이들의 논문이 과학계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임순현 2020), 그리고 논문 발표 당시 이들이 소속기관으로 적시한 법치사회 & 법치재단(Rule of Law Society & Rule of Law Foundation)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³⁾

베이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공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코로나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 내 바이러스 연구소 중 최고 등급의 안전설비를 갖춘 연구소인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연구소가 1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구 인력과 숙련도 면에서 문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바릭(Ralph Baric)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슨정리(Shi Zhengli) 박사 사이에 존재하였던 협력관계를 지적한다. 이들이 공저자로 네이처(Nature)지에 게재한 논문은 2015년을 전후하여 이들 사이에 바이러스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Menachery et al. 2015). 또한 베이커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의 주요 인사인 다스작(Peter Daszak)이 슨정리의 연구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단체는 미국의 존슨앤드존슨(Johnson and Johnson)사 및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협력관계에 있다.⁴⁾ 마지막으로 베이커는 2012년에 있었던 중국 광부들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다. 해당

3) <https://rolfoundation.org/en/#section-mission> 참조(검색일: 2021.06.22.)

4) <https://www.ecohealthalliance.org/partners>(검색일: 2021.08.19)

사건은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중국에서 발간된 석사 학위 논문과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있다(Rahalkar et al. 2020).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RaTG13”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광부들의 죽음이 RaTG13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정리 박사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당 연구와 베이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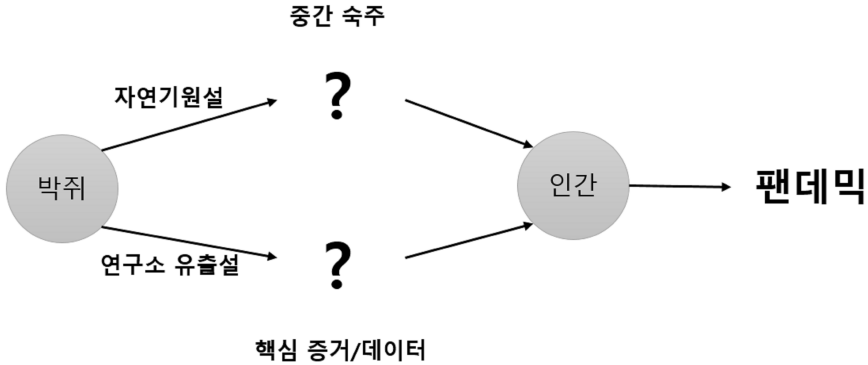
연구소 유출설을 다루는 또 다른 주장으로는 2021년 5월 5일 웨이드(Wade 2021)가 핵과학자 게시판(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글이 있다. 웨이드는 코로나 자연 기원설에 대한 주장을 정치적 주장이라 일축하며, 바이러스의 감염유발 기제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조작하여 인간에 대한 감염 능력을 부여하는 기능 획득 실험(Gain of Function Experiment)이 과거에도 존재해 왔음을 제시하였다. 웨이드의 논리는 앞서 소개한 베이커의 논리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전개된다. 이외에 그는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자금을 지원했던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미국 국립 알레르기 & 감염병 연구소(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우한 연구소의 실험에 가해진 제약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위험한 연구’들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NIAID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파우치(Anthony Fauci)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웨이드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만큼이나 미국 또한 NIH와 NIAID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26일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 모두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The White House 2021). 이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미국은 먼저 중국에 대한 의혹 제기예 앞서 과거 자국이 행했던 세균 실험과 관련한 의혹과 2019년 12월 미국 내 채취된 혈액 검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서 드러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소 유출설에 내재된 의미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한편으로 중국은 해당 논쟁을 과거 미국에 제기되었던 의혹을 통해 희석하거나 자국에 제기된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두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주로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선조들과는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가 인간에 대한 감염 능력을 갖게 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한 추가 기제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은 이러한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며, 무관해 보인 사건과 대상들 사이의 관계 수립을 통해 나름의 논리 구조를 생성해 냈다. 이들은 그 기제로 각각 중간 숙주와 인위적 조작을 주장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의 핵심을 이루어야 할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논리는 자연 기원설의 경우 중간 숙주에 대한 증명의 부재를,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이를 증명할 핵심 데이터의 부재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하는 논리를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먼저 그러한 근거를 지지해 줄 우군을 확보하여 자신의 논리를 일관성과 공신력을 지니는 사회적 실재로 만들 필요에 처하게 된다. 이들이 제기한 다양한 요소들 - 감염인, 천산갑, 연구소, 스텔리 박사 등 - 은 모두 핵심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생성해내기 위해 동원된 우군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코로나 진원지 논리의 한계



두 논리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바, 증명을 기다리는 가설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검증하는 작업은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우군들과 지지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과정은 관계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나 해석적 접근을 동원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수집·선정과 관련한 환경의 조작이나 주관의 개입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원인과 더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III.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의미와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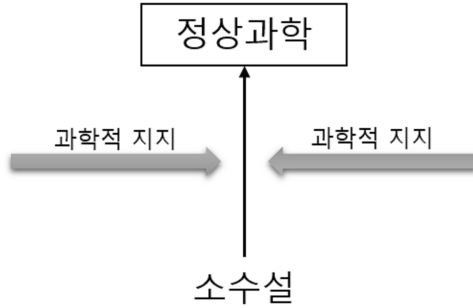
과학이란 보이지 않는 실재(reality)에 대한 끊임없는 여정이다. 과학자는 보이지 않는 실재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찾아간다. 예를 들어 미지의 행성에 대한 관찰은 행성에 실제 가지 않더라도 그것의 존재와 성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설과 설명, 대항 설명이 경쟁을 통해 수립되고 규명된다. 가설은 행성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를 통해 실증되며, 이를 통해 발견된 실재는 그 행성의 형성 과정이나 미래의 운명과 같은 새로운 실재에 대한 탐구를 촉발하기도 한다.

어떤 행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는 필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 관찰 수단이 부재한 현실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학은 실재의 발견이 아닌 현상을 매개로 하는 추적의 형태를 보이며, 그것을 하나의 정설이나 다수설로 인정받는 작업은 청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쿤(Kuhn 2013)에 따르면 과학은 풀지 못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지자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소수설에 불과했던 의견이나 관점은 점차 다수가 지지하는 정상 과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정상 과학이 되기 위한 경쟁은 지지 관계 확보 경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논리에 대한 지지 관계는 점차 늘어나고 중첩되어 의미의 망을 이루며, 시간이 흐르며 공고화와 조정을 거쳐 '요새화'된다(Latour 2016, 95-130). 정상 과학이란 이렇게 체계화된 의미의 망이 외부로부터 난공불락의 지위를 획득하여 상식 또는 당연시되는 지식으로 수용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경쟁에는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인간 지지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장을 사실로 만들어 주는 비인간적 요소들과 맺는 관계가 개입할 수 있다(Latour 2016, 189-202). 예를 들어 현재 이루어지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에서 자연 기원설을 사실로 만들어 줄 관계는 코로나가 인간에게 감염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야기한 중간 숙주와의 관계가 될 것이며, 연구소 유출설의 경우 연구소 내의 데이터와 그것들을 해석함으로써 얻어진 사실들 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는 비인간적 요인이 과학적 논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Latour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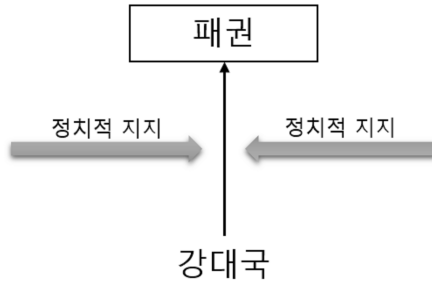
정상 과학이라는 지위는 집단적 믿음을 생성하여 특정한 패러다임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는 원천이며, 그 결과 패러다임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취해야 할 '당연한' 관점이 된다. 정상 과학이 지니는 이와 같은 성격은 패권이라는 지위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림 2] 정상과학의 출현 기제



패권이 구축되는 과정 또한 관계 확보 경쟁으로서의 성격을 보인다. 패권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산물이며, 주변국의 승인을 통해 얻어지는 상징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은진석 외 2020; Nexon et al. 2018, 669; Linklater 2019, 938-939). 이에 패권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은 주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로 명나라의 정화가 행했던 원정사업과 미·소 사이의 달 탐사 경쟁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무역과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벌였던 패권 상징의 획득 작업이다(Musgrave et al. 2018). 은진석 외(2020)는 최근 미·중 사이에서 벌어진 무역 전쟁에도 패권 상징을 두고 벌이는 경쟁으로서 성격이 관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대국들은 주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경우에 따라 국제적 제도의 수립에 기여하거나 규범적 사고틀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변국과 지지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Keohane 1986; Ikenberry 2001; Lake 2009, 45-62). 패권은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정 강대국을 지지하고, 그러한 지지 관계가 장기적으로 내면화된 결과 지지자들에 의해 ‘당연시’되는 지위이며, 이는 현상에 대한 ‘당연한’ 관점으로서 정상 과학이 지닌 성격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또한 패권 경쟁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정화의 무역선과 달 탐사선 등과 같은 비인간적 요인의 포섭을 수반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정상 과학이 되기 위한 여정과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

[그림 3] 패권의 출현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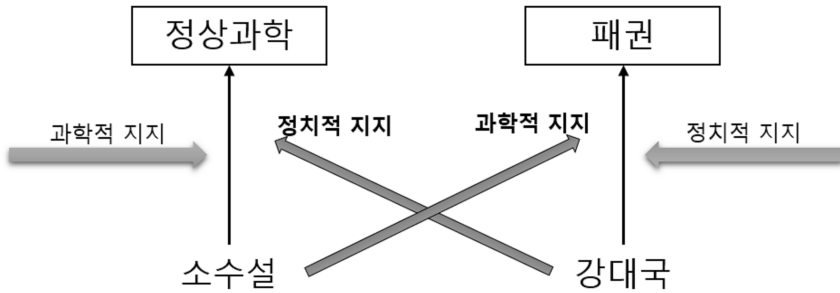


과학과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확보 경쟁으로서의 공통된 성격은 과학과 정치 사이에 모종의 동맹 관계가 성립되기 쉽도록 한다(Latour 1988; Latour 2018). 앞서 제시한 코로나의 진원지에 대한 논리들은 과학적 담론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원지’라는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발견 과정을 과학적 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특정한 담론이나 관점, 또는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이다. 때때로 과학자는 스스로의 이익을 탐닉하는 과정에서 학계에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다. 과학은 가치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지만, 특정한 이익이 개입한 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정상 과학으로의 이행을 위한 관계 수립 과정에는 실험과 검증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기술 사회학의 일종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과학에 내재된 사회적 성격을 환기함으로써 과학과 정치 사이의 동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Latour 1988). 과학 기술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Wolfe 2017, 83-110).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이다(Callon 1986). 자동차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과학의 산물이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과 자동차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은 비단 과학의 힘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예산의 분배자이자 법규 제정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과학에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세수 증대나 산업 발전과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전쟁이나 경제적 생산수단의 변화를 일으켜 이에 성공한 국가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제고한다. 이러한 관계를 정치와 과학 사이의 동맹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사례는 프랑스의 백신에서(Latour 1988), 냉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Wolfe 2017). 양자는 서로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적 효과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상대방의 이익에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도 있다.

[그림 4] 과학과 정치의 동맹



본 연구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이 지니는 과학과 정치의 양가적 속성을 감안하여, 이를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이란 사회학에서 유래한 네트워크의 주요 개념들을 국제정치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이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Bueger et al. 2014; Walters 2002; 김상배 2008; 2011; 2014; 홍민 2013; 은진석 2019). 네트워크 국제정치론은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이들을 메타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행할 것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과학적·정치적 고찰에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적합성을 지닌다. 첫째, 동 이론이 과학과 정치를 매우 밀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정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수립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 라투어는 학자 초기 시절 권력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바 있으며 (Harman 2014), 이는 과학과 지식의 수립 과정에 내장된 정치적 속성에 대한 동료 학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Latour 1988, 3-7; Law 1992, 386-389; Barry 2013, 414; 홍성욱 2010, 30-31). 이와 같은 성격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과학과 정치를 접목한 분석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동 이론이 취하고 있는 행위 주체에 대한 관점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 국가, 사물, 동물 등 다양한 대상에게 동등한 행위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과 정치라는 이질적 대상을 동일선상에 두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이론이 제시하는 행위소(actant) 개념은 행위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따르면 국가나 인간과 같이 우리가 단일 행위자로 이해해 온 대상은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로 묶여 만들어진 행위하는 구조에 해당한다(Latour 2005, 54; 2009, 343-358; 은진석 외 2021a, 128-129). 따라서 국가, 패권, 정상 과학과 같은 다양한 대상은 모두 다수의 행위소들이 관계를 맺은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서 행위소이며, 관계를 통해 정체성과 의미를 얻게 되는 한편, 그러한 관계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타자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셋째,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분석 방법 때문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행위소를 주체의 반열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연구가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맹이를 행위의 주체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돌맹이의 행위 능력은 돌부리를 견어찬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돌맹이를 행위 주체로 만드는 것은 그것과 인간 사이에 발로 차는 행위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이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할을 번역(translation)이라 명명하였다(Callon 1986, 24-28; Latour 1988, 160). 번역은 관계의 단절이나 연결, 변형과 공고화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도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며(은진석 외 2021b), 그것이 지니는 성격을 감안할 때 정상과학과 패권의 수립 조건으로 관계를 제시한 본

연구의 효과적인 분석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식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이다. 동 이론은 기성 지식이 지니는 ‘당연한 것’으로서의 지위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을 주장한다. 본 이론이 제시한 개념인 블랙박스(black box)는 내부를 볼 수 없는 암상자를 의미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Callon 1986, 28-33; 홍성욱 2010; Latour 2016, 15). 이로 인해 블랙박스는 의심받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 정상 과학과 패권은 당연시 되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블랙박스가 실현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블랙박스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의무 통과 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무 통과 지점이란 번역을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할 지점을 의미하며, 맥락상 번역을 불가능케 하는 대상을 지칭한다(Callon 1986, 26-27; Bueger et al. 2014, 38-40).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의무 통과 지점은 블랙박스의 유지나 행위소의 단일성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동 지점이 블랙박스의 해체를 야기하는 ‘적대적’ 번역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 통과 지점은 새로운 행위소의 출현이나 이를 우회하기 위한 번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파훼될 수 있으며, 블랙박스 또는 행위소의 해체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렇다. 행위소는 새로운 행위소, 또는 블랙박스의 형성을 위해 번역을 행한다. 번역 과정에는 새로운 관계의 수립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변형은 이전에 존재하던 블랙박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블랙박스와 행위소가 해체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때 의무 통과 지점의 장악과 생성은 그러한 과정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국제정치를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만든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중 사이의 경쟁에도 이러한 역학이 관찰된다. 중국의 부상과 뒤이은 일련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중국과 세계를 잇는 번역 작업의 일환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구축한 패권 질서, 즉 블랙박스에 변화의 압력을 가했

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행하는 번역에 대항하는 번역을 행하는 한편 의무 통과 지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백신, 반도체와 같은 과학·기술 영역의 행위소들이 연루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 진원지 논쟁은 미·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 경쟁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살펴보는 작업은 과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 미·중 관계의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V. 코로나 진원지 논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미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코로나 진원지에 관한 논쟁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진행 중인 관계 확보 경쟁의 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번역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의무 통과 지점의 여하에 따라 블랙박스의 형성·유지·해체에 기여한다. 냉전시기 이래 미국이 동북아와 서유럽에 위치한 행위소들과 맺은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냉전의 종식,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약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구축한 블랙박스 또한 점차 투명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이 지니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공공재 공급자로서 미국이 지니는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라 불리는 행위소의 생성과 더불어 이를 매개로 하는 일대일로를 추진하였다. 이를 역내 국가들과 지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번역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는 등, 자국과 미국의 정체성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일어난 코로나 사태를 백신 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은진석 외 2021a). 이는 최근 미국이 백신을 공공재로 전환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다. 중국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재 공급자로서 중국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 부정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수립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해온 블랙박스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게 있어 중국이 행하고 있는 번역 작업은 미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블랙박스와 이를 보호하는 의무 통과 지점인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Callahan 2018, 756-759).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번역을 차단하는 의무 통과 지점을 보강하고, 수년간 중국이 구축해온 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 진원지 논쟁을 활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연구소 유출설이라 불리는 의미의 망과 동맹을 뺏었다. 연구소 유출설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중립적 태도를 표방하지만, 해당 담론이 지지자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 행위소가 되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한다. 또한 미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번역 작업의 매개로 삼는데, 그 세부 내용과 전략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와 중국 사이에 인지 관계를 맺어주고, 이를 공고화하여 중국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블랙박스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코로나 진원지 논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은 반복될수록 무의식적 인지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레이코프(Lakoff 2012)는 인간의 뉴런이 특정한 이미지나 은유, 또는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후에도 이러한 인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⁵⁾ 이 관계는 사실과 무관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코로나’라는 용어에 대입하는 단어로 ‘중국’을 무의식 중에 자리 잡도록 한다. 이는 코로나와 중국, 그리고 담론에 노출된 개인 사이에 공고화된 관계를 형성하여 ‘코로나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블랙박스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후술할 중국에 대한 적대적 번역이 야기하는 효과를 증폭시킨다.

둘째, 중국의 국내 관계 해체를 위한 번역 작업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중국은 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을 경고한 의사인 리원량(李文亮)에 대하여 언론 통제를 가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대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코로나에 감염된 리원량의 죽음이 알려지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증가하였다(BBC 2021b).

5)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뉴런 징발(neural recruitment)’이라는 기제이다. 해당 기제가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레이코프(Lakoff 2012)의 연구를 참조.

홍콩의 미디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리원량 사태가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의 권리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Ma et al. 2020). 따라서 리원량은 그와 맺는 관계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소이며, 미국은 연구소 유출설을 매개로 이러한 관계를 선취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의 자유와 같은 중국 내 인권 담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당국과 대중 사이 관계의 맥락에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인권 문제가 빈번하게 회자되는 지역들, 이를테면 신장, 티벳, 홍콩, 대만과 같은 지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소 유출설은 중국 내 정부와 대중 사이에 형성된 지지 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번역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내정 개입 불가론을 약화시키기 위한 번역 작업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국내 문제에 대한 국외 개입을 차단해 왔다. 이를 소위 내정 개입 불가론이라 부를 수 있는데, 점차 블랙박스 되어왔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내정 개입 불가 문제를 당연시하는 관점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일당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중국은 코로나 문제 또한 내정 문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개입이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 왔다. 연구소 유출설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내정 개입 불가론의 블랙박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번역 작업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실제 데이터 공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향후 중국의 또 다른 '내정 문제'들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구축한 내정 개입 불가론의 블랙박스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이 지속해서 개입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이를 냉전 시기부터 중국에 입혀진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블랙박스 유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중국이 추구해온 우호적 관계수립 작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작업이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로 관계의 범위를 제약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 결과 연구소 유출설은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번역 전략을 방해하는 의무 통과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협의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등과 연계될 경우 강력한 차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영국 및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작업이 지니는 함의를 보다 심대하게 할 것이다(조은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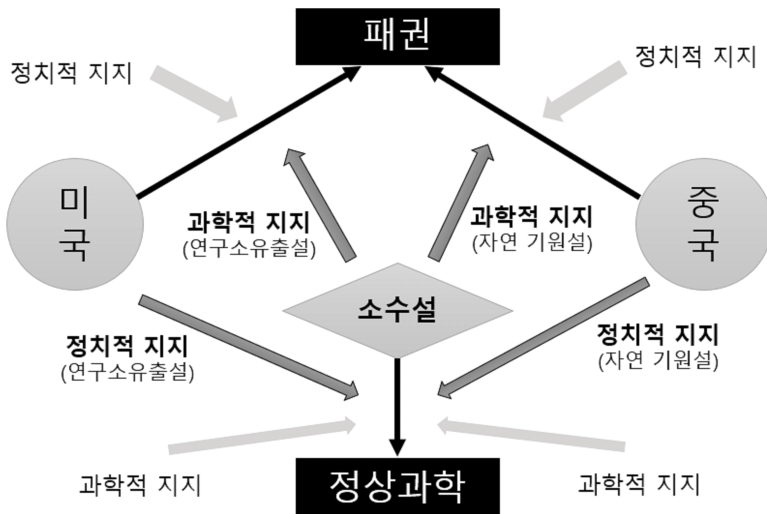
한편 상기와 같은 미국의 번역 시도에 대한한 의무 통과 지점의 구축을 위하여, 중국은 자연 기원설이라는 행위소와 동맹을 맺고 있다. 먼저 자연 기원설은 코로나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재난-피해자 관계로 재구축함으로써 코로나 관련 논쟁이 지속되었을 경우 형성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 담론을 따르면 중국 또한 자연에서 유래된 재난의 피해자로서, 코로나는 인재(人災) 또는 관재(官災)가 아닌 천재지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이 중국과 코로나 사이에 맺으려 했던 재난-숙주 관계로서의 의미는 상실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자연 기원설은 연구소 유출설이 요구하는 연구소 데이터 제공 문제, 나아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는 의무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연 기원설이 정상 과학이 될 경우 코로나 진원지 담론에서 연구소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며, 그 결과 연구소 유출설을 매개로 미국이 행한 번역 시도 또한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는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도 영향을 끼친다. 코로나 자연 기원설은 데이터 공개에 대한 논의를 주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을 구성하는 국내의 행위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던 미국의 번역 작업은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중국이 표방하는 내정 개입 불가지론의 블랙박스는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자연 기원설은 중국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친 재난에 대항하여 공공재 공급에 앞서는 강대국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주변국과의 관계 수립 전략에 더욱 탄력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미지를 음모론 신봉국으로 전략시킬 수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 미국이 구축 중인 쿼드와 같은 의무 통과 지점의 우회 및 돌파 가능성을 상승시킨다.

미·중 경쟁은 패권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두고 벌이는 번역 경쟁이며, 코로나 진원지 논쟁은 그러한 번역 과정에 유·불리를 초래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 유리한 담론과 동맹 관계를 수립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해석’은 정치적으로 동원된다.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의 동맹은 매혹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그 진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물적 지원을 촉발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이다. 퍼즐 풀이로서의 과학은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하고 연계될 때 현상을 호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과 정치 사이 동맹의 부패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양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기원설에는 모두 결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옹호나 배제는 과학적으로 볼 때 적절한 태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치가 이에 개입함으로써 두 개의 논리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과학이 정치에 희생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그림 5] 코로나 진원지 논쟁과 미·중 경쟁



V. 결론

인간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가치가 개입한다. 어떤 주장이나 논리에 과학적 근거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검토함으로써 획득된 객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두 진영의 논쟁은 분명히 과학적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지나는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과학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관찰을 통해 실재에 가까워지는 문제 풀이의 여정이며, 이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경우 해석과 관찰 결과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진원지 논쟁을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연구소 유출설은 그간 중국이 추진해 온 역내에서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억제하고, 내정 불간섭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의문을 가하기 위한 매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연 기원설과 상호지지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적대적인 번역 작업의 차단을 도모한다. 두 논리는 각각 바이러스의 기원을 자연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문제로 양분하고 있는바, 상호간의 공약 가능성(commensurability)은 매우 낮다. 이에 두 논리 사이의 관계는 정상 과학이 되기 위한 경쟁 관계가 되며,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치적 의도의 개입 가능성 또한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실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논리 관계를 무리하게 구축하다 보면 사실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학과 정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 문제는 이들 두 영역 중 한 영역이 다른 하나를 잠식하려 할 때 심각해진다. 이 경우 왜곡된 결과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실패’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의 진원에 대한 논쟁은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적 논쟁이 되어야 하며, 특정한 정치적 이익에 봉사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그 기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쟁에 연루된 당사자 및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지만, 논쟁에 내재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코로나의 기원을 탐색하기 위한 미·중 사이의 협력은 양국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이 국제 질서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현 시점에 그러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미·중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양국은 남중국해 해상 영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술 영역 분야에서 경쟁하는가 하면, 최근 백신의 생산과 공급을 두고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 경쟁의 구조 속에서 바이러스는 인류들 사이의 협력이 아닌 갈등의 매개가 되었으며 과학은 정치가 되었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35-61.
- 김상배. 2009.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7-33.
- 김상배 편. 2011.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화』. 파주: 한울.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파주: 한울.
- 김상배. 2021.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진화.” 『국제·지역연구』 제30권 1호: 41-76.
- 박병광. 2021.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이슈브리프』 제271호: 1-4.
- 박지영. 2021. “영국도 “우한연구소 코로나 유출설 개연성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022390001771>(검색일: 2021. 6. 12).
- 신정원. 2021. “美에 힘 싣는 EU... “코로나 기원 재조사 지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1_0001472835(검색일: 2021.06.12).
- 유철중. 2021. “러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유출 가능성 작아”... WHO 발표지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2041000080>(검색일: 2021.06.12).
- 은진석. 2019. “핵무기·사드·판문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핵문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5권 1호: 65-102.
- 은진석·이정태. 2020. “미·중 상징투쟁과 전략: 부르디외의 실천이론 적용.” 『대한정치학회보』 제28집 3호: 23-48.
- 은진석·이정태. 2021a. “백신은 공공재인가: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2호: 161-190.

- 은진석·이정태. 2021b.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재구성: 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1집 2호: 125-161.
- 임순현. 2020. “‘중국연구소가 코로나19 제조’ 논문 근거 충분?” <https://www.yona.co.kr/view/AKR202009180335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검색일: 2021.06.22).
- 조은정. 2021.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122호: 1-23.
- 홍민. 2013.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 북한연구』 제16권 1호: 106-170.
- 홍성욱. 2010.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15-36.
- Baker, N. 2021. “The Lab-Leak Hypothesis.” <https://nymag.com/intelligencer/article/coronavirus-lab-escape-theory.html>(검색일: 2021.06.10).
- Barry, A. 2013. “The Translation Zone: Between Actor-Network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ium* 41(3): 413-429.
- BBC. 2021a. “Covid-19 Pandemic: China ‘Refused to give Data’ to WHO Team.”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6054468>(검색일: 2021.06.22).
- BBC. 2021b. “Li Wenliang: ‘Wuhan Whistleblower’ Remembered One Year On.”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963896>(검색일: 2021.07.07).
- Bloom, J. D., Y. Chan, R. Baric, P. Bjorkman, S. Cobey, B. Devernaab, D. Fisman, R. Gupta, A. Iwasaki, M. Lipsitch, R. Medzhitov, R. Neher, R. Nielsen, N. Patterson, T. Stearns, E. Nimwegen, M. Worobey, and D. Relman. 2021.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COVID-19.” *Science* 372(6543): 694.
- Bueger, C. and F. Bethke. 2014. “Actor-Networking the ‘Failed State’:

- An Enquiry into the Life of Concept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17: 30-60.
- Calisher, C., D. Carroll, R. Colwell, R. Corley, P. Daszak, C. Drosten, L. Enjuanes, J. Farrar, H. Field, J. Golding, A. Gorbalenya, B. Haagmans, J. Hughes, W. Karesh, G. Keusch, S. K. Lam, J. Lubroth, J. Mackenzie, L. Madoff, J. Mazet, P. Palese, S. Perlman, L. Poon, B. Roizman, L. Saif, K. Subbarao, and M. Turner. 2020. “Statement in Support of the Scientists,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nd Medical Professionals of China Combatting COVID-19.” *Lancet* 395(10226): e42-e43.
- Callahan, W. 2018.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Post-hegemonic or a New Hegemon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0(4): 749-761.
- Callon, M. 1986. “The Sociology of Actor-Network: The Case of the Electric Vehicle.” in M. Callon et al.. 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Palgrave Macmillan, 19-34.
- Flanagan, J. 2009. *Imagining the Enemy: American Presidential War Rhetoric from Woodrow Wilson to George W. Bush*. Claremont: Regina Books.
- Harman, G. 2014.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Political*. London: Pluto Press.
- Ikenberry, G. J. 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s,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R. O. 1986.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hn, T. S. 저·김명자·홍성욱 역. 2013. 『과학 혁명의 구조, 4판』. 서울: 까치글방.
- Lake, D. 2009.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 University Press.
- Lakoff, G. 저·나익주 역. 2012. 『폴리티컬 마인드: 21세기 정치는 왜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파주: 한울.
- Latour, B. A. Sheridan et al.. trans. 1988.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저·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 Latour, B. 저·황희숙 역. 2016. 『젊은 과학의 전선: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파주: 아카넷.
- Latour, B. 저·장하원·홍성욱 역. 2018. 『판도라의 희망: 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서울: 휴머니스트.
- Law, J.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 Linklater, A. 2019. "Symbols and World Politics: Towards a Long-Term Perspective on Historical Trend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5(3): 931-954.
- Ma, J. and J. Mai. 2020. "Death of coronavirus doctor Li Wenliang becomes catalyst for 'freedom of speech' demands in China."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049606/coronavirus-doctors-death-becomes-catalyst-freedom-speech> (검색일: 2021.07.05).
- Mearsheimer, J. J.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Menachery, V., B. Yount Jr, K. Debbink, S. Agnihothram, L. Gralinski, J. Plante, R. Graham, T. Scobey, X. Ge, E. Donaldson, S. Randell, A. Lanzavecchia, W. Marasco, Z. Shi, and R. Baric. 2015. "A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t coronaviruses shows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Nature Medicine* 21(2015):

1508-151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Zhao Lijia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June 21, 2021,"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885442.shtml(검색일: 2021.06.22).
- Musgrave, P. and D. Nexon. 2018. "Defending Hierarchy from the Moon to the Indian Ocean: Symbolic Capital and Political Dominance in Early Modern China and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72(3): 591-626.
- Nexon, D. and I. Neumann. 2018. "Hegemonic-Order Theory: A Field-Theoretic Accoun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4(3): 662-686.
- Rahalkar, M. and R. Bahulikar. 2020. "Lethal Pneumonia Cases in Mojiang Miners (2012) and the Mineshaft could Provide Important Clues to the Origin of SARS-CoV-2." *Frontiers in Public Health* 8(581569): 1-5.
- Ray, S. 2021. "U.S. Federal Research Facility Reportedly Found Covid-19 Lab Leak Theory to be Plausible." <https://www.forbes.com/sites/siladityaray/2021/06/08/us-federal-research-facility-reportedly-found-covid-19-lab-leak-theory-to-be-plausible/?sh=4a76117a66d2>(검색일: 2021. 6. 10).
- Singh, M., H. Davidson, and J. Borger. 2020. "Trump Claims to have Evidence Coronavirus Started in Chinese Lab but Offers no Detail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apr/30/donald-trump-coronavirus-chinese-lab-claim>(검색일: 2021.06.21).
- The White House. 2021.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of COVID-19."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5/26/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investigation-into-the-origins-of-covid-19/(검색일: 2021.06.22).

Viala-Gaufrey, J. and Lindaman, D. 2021. "Donald Trump's 'Chinese Virus': The Politics of Naming." <https://theconversation.com/donald-trumps-chinese-virus-the-politics-of-naming-136796> (검색일: 2021.06.21).

Wade, N. 2021. "The Origin of COVID: Did People or Nature Open Pandora's Box at Wuhan," <https://thebulletin.org/2021/05/the-origin-of-covid-did-people-or-nature-open-pandoras-box-at-wuhan/>(검색일: 2021.06.16).

Walters, W. 2002. "The Power of Inscription: Beyond Social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in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1): 83-108.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WHO. 2021. "WHO-convened Global Study of Origins of SARS-CoV-2: China Par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convened-global-study-of-origins-of-sars-cov-2-china-part>(검색일: 2021.06.22.).

Wolfe, A. 저·김명진·이종민 역. 2017. 『냉전의 과학』. 파주: 궁리출판.

Yan, L., S. Kang, J. Guan, and S. Hu. 2020a. "Unusual Features of the SARS-CoV-2 Genome Suggesting Sophisticated Laboratory Modification Rather than Natural Evolution and Delineation of its Probable Synthetic Route." *Zenodo*: 1-26.

Yan, L., S. Kang, J. Guan, and S. Hu. 2020b. "SARS-Cov-2 is an Unrestricted Bioweapon: A Truth Revealed through Uncovering a Large-Scale, Organized Scientific Fraud." *Zenodo*: 1-33.

How does Science become Politics?: An Implication of COVID-19's Origin Controversy on US-China Relations

Jinseok Eun* · Jung Tae Lee**

6)

ABSTRACT

As cases in history suggest, political interest played a role in formulation of public belief. Controversy on the origin of COVID-19 has continued to date, between believers of natural origin and the 'lab-leak' hypothesis. The two groups promote their own realities but evidence to support them are weak. Scientific process is a journey to obtain the status of normal science which requires relations with human and non-human supporters, and such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es political process of hegemonic status-seeking in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We argue for the possibility of the U.S. and China engagement into the scientific process due to the political nature of COVID-19's origin controversy which may cause distortion of the scientific process. With concern for such, we explore an implication of COVID-19 controversy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Actor-Network Theory's Perspective.

Keywords : COVID-19 Origin, US-China Relations, Hegemony, Actor-Network Theory (ANT)

투고일: 2021.09.14.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03.

* Administrative Coordinator, Daegu Haany University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67>

【연구논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화상통화 심리도식치료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

권문선**·최성진***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 D대학교 대상으로 2020년 11월 SNS 및 대학홈페이지에 실험 참가 안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대상자 중, 무선 표집으로 44명을 선정해 통제집단 15명, 온라인집단 14명, 대면집단 15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온라인집단은 화상통화 방식으로, 대면집단은 면대면 방식으로 집단상담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무처리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1회, 회기 당 60~90분씩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울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추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각 종속 변인의 사전점수를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세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는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은 자아존중감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우울은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추수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제어: 심리도식치료, 대학생, 우울, 자아존중감, 화상통화

* 이 논문은 권문선(2021)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명대학교 석사, 주저자

***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사건 사고, 스트레스, 불면증 등 여러 자극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정신 기능도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eck 1967). 또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감정조절을 어렵게 하고 의욕·관심·정신활동 저하, 초조, 식욕 저하, 수면 증가 또는 저하를 겪게 한다(Beck 1967).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사회적인 문제 등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우울이 발생하기도 한다(Beck 1967).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양극단으로 평가하고, 이들은 삶 속에서 고통을 유발하거나 자기 패배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Beck 1967). 그래서 주관적 고통, 슬픔, 무망감 등의 증세가 생겨 우울장애로도 불리며,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김인용 외 2016). 우울 증후군은 일상생활과 삶에 영향을 주어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고 한다(권이정 2010). 그리고 우울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타인과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기질로 핵심적 정서 욕구가 좌절될 때 결핍된 욕구로도 생긴다(Young 1990). 그래서 결핍된 욕구 중심으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되고, 이는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인 가족과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준다(박미정 2019). 또한 부적응 심리도식은 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겪으면 우울, 긴장, 고립, 단절, 공격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조성호 2002; 강정은 2012). 이렇듯 현대인들의 부적응 심리도식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 및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도 생기며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Young et al. 2003). 그리고 우울로 인해 현대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심리 경험 또한 겪고 있다(선안남 2011).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함으로써 형성된다(Kwon et al. 2008).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느낌이다(Kwon et al. 2008).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원만한 사회생활과 더불어 활력있는 생활을 한다(Rosenberg 1965).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다(김금정 외 2018). 또한 자신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열등감을 가진다(Rosenberg 1965).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동기부터 형성된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인해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부적응적인 심리도식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부적응적 심리도식의 결과로 자신은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시, 거절,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다(Young 1990).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Min 2010). 삶의 질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in 2010),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 특히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 증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Choi et al. 2005).

초기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Erikson 1968). 하지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하고 있다(안하얀 외 2010). 전국대학생에 실시한 심리적 위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 적응 어려움 73.7%, 불안 41.2%, 섭식 문제 23.5%, 우울 18.8%, 자살충동 14.3%를 경험하고 있다(오해영 외 2016).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대인관계에서 예민함의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오해영 외 2016). 그리고 대학생들은 진로,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주은선 외 2016), 심리적 어려움의 결과로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의욕 상실, 대인관계 능력, 학업능력이 저하되고 있다(Park 2013). 이렇듯,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우울장애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업의 성취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조화진 외 2010). 그래서 대학생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 문제 조절, 양식을 인식하고 관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심리도식치료는 인지치료, 애착 이론, 계슈탈트 치료, 대상관계이론, 구성주의, 정신분석치료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인지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성격장애의 치료 방법을 의미 있게 확장 시킨 치료이다(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의 핵심은 제한된 재양육, 양식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 패턴을 변경하는 작업이다(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의 효과는 자신의 생활양식과 도식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며, 심리도식이 덜 빈번하게 활성화되어, 원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Young et al. 2003). 이는 심리도식치료가 자신의 심리도식을 발견하고, 심리도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이해하도록 심상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성숙하고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핵심적 정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들의 어려움인 우울, 불안, 학업 적응 등 어려움을 완화하여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온라인상담이 증가하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는 심리상담 영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상담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화상통화 상담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심리치료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화상통화 심리치료가 있다. 화상통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화면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며, 컴퓨터 웹을 통한 상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화상통화 상담의 장점은 첫째, 내담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어서 대면상담과 유사하다. 둘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편리성으로 인해 만족감을 충족한다. 셋째, 온라인상담은 실시간으로 내담자와 화상 대면으로 상담을 하므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넷째, 대면 심리치료보다 상담실 유지비, 인건비, 부대비용의 감소로 치료비를 낮출 수 있다(우정정 외 2021).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담은 공황장애, 사회 불안장애와 같이 공공장소를 기피하고, 집 안에만 있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임성진 외 2017; Knaevelsrud 2010). 이처럼 화상통화 심리치료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한계점이 사라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시대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을 두어 면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도식’이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며, 주로 인지발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한다. 그리고 도식은 어떤 사건의 특별하게 다른 측면을 추상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요소들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는 조직화 원리가 도식이다(Beck 1967). 그리고 도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와 여러 타인과 상호작용 안에서 형성되기도 한다(Young 1990). 형성된 도식은 자신의 기질과 핵심적 정서 욕구가 좌절될 때 결핍된 욕구 중심으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된다고 한다(Young 1990). 이처럼 부적응 심리도식 형성을 촉진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Young et al. 2003). 첫째, 아동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는 경우로, 초기 환경의 결핍으로 형성된다. 둘째,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생애 초기경험으로, 아동은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을 때 형성된다. 셋째, 아동의 욕구가 너무 많이 충족된 경우이다. 넷째, 중요한 타인을 내면화 혹은 동일시하는 경험에서도 생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도식은 전 생애에 걸쳐 정교화되어, 발전하며, 생애 후기의 경험 도식이 더 이상의 기존 도식에 적용될 수 없을 때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심리도식은 개인의 인지적 일관성 욕구로 인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도 유지한다. 그래서 심리도식은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 가족과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도 심리도식을 설명한다(박미정 2019). 또한 심리도식은 여러 타인과 관계 속에서 부적응 심리도식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고립, 단절, 몰락, 상실 우려, 긴장, 공격성, 우울이 나타난다(조성호 2002; 강정은 2012). 특히 공격성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더욱더 많이 보이게 되며, 이는 부적응 심리도식의 영향이다(김금정 외 2018). 이러한 부적응 심리도식은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울 증상의 발현과 유지요인이다(Young 1990).

우울은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그에 수반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이며, 개인의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한다(APA 2013).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가벼운 우울감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울함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우울은 기분 변화로 인하여 고독과 슬픔, 무관심과 자기 비난, 자기 자책 등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다(Beck 1967). 또 우울한 사람은 우울을 감추고 도피하며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식욕 저하, 불면증, 정신운동 지연, 초조함을 느낀다(Beck 1967). 이로 인해 우울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우울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권석만 2003).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권혁희 2002). 그리고 우울은 사고를 왜곡하게 하는 패턴의 인지적 성향이 주위와 관심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 애착 불안이 심할수록, 내적 작동모델이 부정적이어서 우울하다고 한다(이주영 외 2012). 특히, 우울한 상태에서는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우울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기분 상태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문현미 2005). 사람들의 부정적 사고는 우울한 기분의 결과이고, 정상적인 기분 변화부터 정신병적 상태에

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개인 차이는 있다(Beck 1967). 우울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지 형태로는 정상인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구성된다(Beck 1967). 첫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자기 자신을 결점이 많고, 부적절하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여긴다. 또한, 불쾌한 경험을 자신의 심리적·도덕적·신체적인 결함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자신을 평가 절하하고 비난을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에 필요한 자질들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믿고 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존재로 잘못 해석한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우울한 사람은 미래를 자신의 현재 어려움이나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곤경과 좌절, 박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어떤 과제를 생각하면 실패를 먼저 생각한다. 이로 인한 우울 증상은 정서적 증상과 수면장애 등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고, 고독감과 좌절감 등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 자살 등 죽음을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인과는 다른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로 인지 왜곡을 한다. 그리하여 우울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보다 앞으로 더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높은 우울증 빈도를 보이게 되며, 우울증을 겪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이경희 2011).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바람직하게 적응하고 건전한 성격 발달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자아존중감은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수용 및 관심으로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느낌이다(Kwon et al. 2008). 한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수연 2020).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활력 있는 생활을 한다(Rosenberg 1965).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김금정 외 2018). 그리고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열등감을 가진다(Rosenberg 1965),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이 높으며, 대인관계 문제 및 고립되어 있다(Rosenberg 1965). 이는 아동기부터 형성된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만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다(Young 1994). 이러한 부적응적인 패턴과 행동으로 자신은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취약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특히,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무시, 거절, 비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험한 부정적이고 강렬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Young 1994).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분노 감정을 부적응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작다(Kim et al. 2010).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응력도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서 가정과 학교, 개인 문제와 사회 등에 원만하게 적응한다(강희숙 외 2009).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김미란 2002). 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 학교생활 적응 또한 높다(차경애 2007). 이렇듯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로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Min 2010). 삶의 질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in 2010), 우울과 관련된 변인 중 특히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 증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Choi et al. 2005).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문제에 관심을 끌게 된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가정, 대인관계 등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력이 높고, 학업 성취감도 높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슬픔, 우울, 무기력함의 경험을 통해, 종종 우울로 진행될 수 있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증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우울이 유발되고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심리도식치료가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I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소재 D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선 표집으로 44명을 선정하였다. 그중 통제집단 15명, 온라인집단 14명, 대면집단 15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하지만 통제집단 5명, 온라인집단 1명, 대면집단 2명이 탈락하여, 통제집단 10명, 온라인집단 13명, 대면집단 13명, 최종적으로 3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Beck(1961)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신체-정신적요인을 포함한 21문항으로 자기 평가형 설문지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하 DSM-IV)이 발표되면서 우울 증상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게 2판으로 개정하였다. 이 검사는 최근 1주일 동안 느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점수는 0점에서 3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이다.

2)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가(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로 긍정적 문항에 대해(1=전혀 그렇지않다, 2=별로 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대부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 채점으로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이다.

3.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 IRB 승인을 받은 후, 부산소재의 D대학교 재학생에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신청을 받아 무선 표집으로 44명 선정해 통제 15명, 온라인 14명, 대면 15명을 무선 할당하여 배정하였다. 그 중 통제집단 5명, 온라인집단 1명, 대면집단 2명은 2회이상 불참, 집단활동 시간에 불성실한 집단원, 개인적인 사유로 집단에서 탈락하여 총 36명의 자료를 사용했다.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은 사전-사후-추수 검사인 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방법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대면집단은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대기집단으로 무 처치하였다. 측정 도구별로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 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수 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4주 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1회기씩 회기당 60~90분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집단은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했고, 대면집단은 부산 소재 D대학의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예비모임을 가졌고, 온라인집단의 심리도식치료 매뉴얼은 우편으로, 대면은 직접 전달하였다. 프로그램 매뉴얼에 있는 활동지에 따라 진행하였고, 연구자는 활동 전후 집단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난 후 느낀 감정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사후분석을 위해 집단원들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 동의서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작성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단체방을 통해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프로그램 진행 기록 및 연구 결과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4.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성격장애 및 우울장애 내담자의 효과 검증을 나타내기 위한 심리 도식치료 매뉴얼』(Farrell et al. 2013)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심리 도식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은 심리도식치료 창시자인 Young(1990)이 개발한 심리도식치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출판물이다. 이 매뉴얼은 누구나 심리도식치료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이론의 핵심을 소개하고,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심리도식치료는 급성 증상이 아닌 심리 장애의 만성적이고 성격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Young et al. 2003). 특히 성격장애 환자와 우울, 불안 및 섭식 문제, 부부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치료에 효과적이다(Young et al. 2003). 이는 심리도식치료가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핵심적인 심리적 주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자가 만성적이고 일반화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조직화하기 때문이다(Young et al. 2003). 특히,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아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리도식을 알아가게 된다(Young et al. 2003).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와 치료자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심리도식과 맞서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방략을 활용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도식을 역기능적인 패턴으로 반복할 때, 치료자는 변화를 위해 공감하고 직면시킨다. 그래서 치료자는 아동기에 미 충족된 내담자의 욕구를 ‘제한된 재양육’을 통해 채워준다(Young et al. 2003).

심리도식치료는 특정한 증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도식 중 양식에 개입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집단으로 구성된 심리도식치료는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훈련에 심상변화 작업과 양식 역할 연습을 적용하여 집단 상호작용과 지지의 힘을 이용한다. 심리도식치료는 각 양식이 떠오를 때 ‘제한된 재양육’을 개입하여 정서 집중 작업을 위한 ‘경험적 순간’을 머물러 심리도식치료의 핵심

요소들을 잃지 않는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양식은 부적응적 대처 양식, 역기능적 부모양식, 취약한 아동 양식, 화난 아동 양식, 행복한 아동 양식, 건강한 성인 양식이 있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서 집단 심리도식치료는 42회기로 구성되어있다 (Farrell et al. 2013).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4주나 6주,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적응적 대처 양식, 취약한 아동 양식, 화난 아동 양식, 행복한 아동 양식, 건강한 성인 양식 등, 양식작업이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소이다(Farrell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1주마다 양식을 다루어 나감으로써, 그들의 핵심 욕구를 알게 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8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식 전환 작업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60~90분씩 진행하였으며,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주제	내용
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 오리엔테이션 · 집단소개 및 별칭 짓기 · 나의 안전장소 찾기
2회기	어린 시절 나 만나기	· 아동기 심상 작업 · 나의 부적응적 대처 양식 알기
3회기	나의 아동기 경험 및 심상 평가	· 심상 통해 아동기 경험 탐색 · 심상 통해 아동기 경험 평가
4회기	나의 어린 시절 부모 만나기	· 역기능적 부모양식의 처벌실험 · 좋은 부모 메시지에 대해 알기
5회기	나의 취약한 아동 양식	· 취약한 아동 양식을 이해, 위로하기 · 좋은 부모 메시지에 대해 알기
6회기	나의 화난 어린 시절 기억	· 적응적 행동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 화난 아동 양식 유도한 행동에 건강한 성인 양식 접근
7회기	나의 행복한 어린 시절 만나기	· 행복한 아동 양식 불러오기 · 행복한 아동 양식 심상 작업
8회기	건강한 성인 만나기	· 건강한 성인 양식이 적응적인 방식으로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인식을 이용하는 계획, 발전 · 스스로 양식 인식 작업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요약하여 생각

5. 통계분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 25.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 통제집단의 동질성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 통제집단의 측정 시기별 종속변인의 사후 점수는 집단 간 시기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과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에 참여한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수준이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동질한 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온라인-대면집단 각 종속변인의 사전점수를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 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관련 변인	통제 <i>n</i> =10		온라인 <i>n</i> =13		대면 <i>n</i> =13		Levene의 등분산 검증	
	M	SD	M	SD	M	SD	F	P
인지적 요인	5.90	2.13	5.92	3.52	5.85	3.44	1.52	.24
신체/정신적 요인	6.60	2.59	5.62	3.82	5.46	2.18	1.83	.18
우울 전체	12.50	3.72	11.54	5.88	11.31	5.17	.73	.50

자아 긍정적	13.60	3.17	14.77	2.42	15.38	1.89	2.31	.12
자아 부정적	12.00	2.21	12.38	1.71	12.15	1.91	.43	.66
자아존중감 전체	25.60	2.46	27.15	3.76	27.54	2.63	1.08	.35

그 결과 우울($F=.73, p=.50$), 자아존중감($F=1.08, p=.35$)에서 변인의 분산성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세 집단 간 사전검사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2.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검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우울 척도를 측정하였다. 우울 척도의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한 결과,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우울 사전-사후-추수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 변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	SD	M	SD	M	SD
인지적 요인	통제	5.90	3.82	6.30	4.57	6.50	3.87
	온라인	5.92	3.52	4.23	2.59	3.85	3.34
	대면	5.85	3.44	2.46	2.26	1.46	2.54
신체-정신적 요인	통제	6.60	2.59	6.50	3.87	6.40	3.66
	온라인	5.62	3.82	2.08	2.14	3.38	3.40
	대면	5.46	2.18	2.46	2.33	1.46	2.33
우울 전체	통제	12.50	3.72	12.80	7.06	12.90	7.06
	온라인	11.54	5.88	6.08	4.05	7.23	5.96
	대면	11.31	5.17	4.92	4.17	3.0	3.72

〈표 4〉 우울 대응표본 *t*검증 및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관련 변인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시기
인지적 요인	통제	.000	-.688	-1.068	
	온라인	1.667	2.071	.416	4.147**
	대면	4.945***	5.802***	2.082	
신체-정신적 요인	통제	-.310	.246	.785	
	온라인	3.949**	2.098	-1.357	4.650**
	대면	4.837***	6.059***	1.515	
우울 전체	통제	-.151	-.254	-.104	
	온라인	4.068**	2.986*	-.891	6.953***
	대면	5.412***	6.890***	2.203*	

* $p < .05$, ** $p < .01$, *** $p < .001$

우울 전체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953, p < .001$).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전체에서 온라인집단은 사전-사후 ($F=4.068, p < .01$), 사전-추수 ($F=2.968, p < .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면집단은 사전-사후($F=5.412, p < .001$), 사전-추수 ($F=6.890, p < .001$), 사후-추수($F=2.203, p < .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화상통화 방식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대학생보다 우울이 감소했고, 대면집단은 추수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우울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은 우울 하위요인에서, 인지적 요인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 ($F=3.949, p < .01$)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대면집단 우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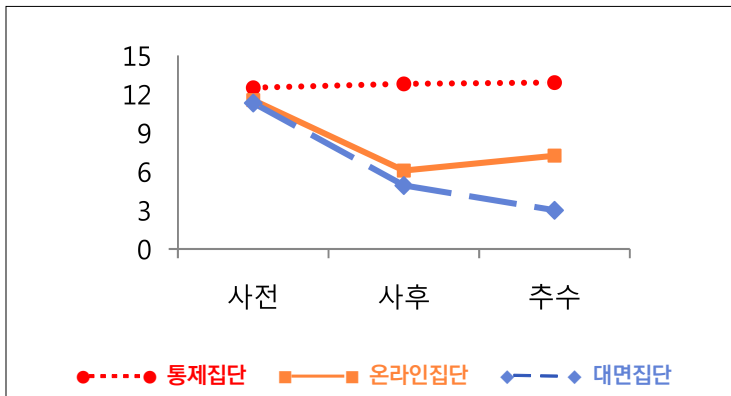
위요인에서 사전-사후($F=4,945, p<.001$), 사전-추수($F=5,802, p<.001$)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F=4,837, p<.001$), 사전-추수($F=6.059, p<.001$) 차이 값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시한 후, 그리고 한달 후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우울과 우울 하위요인들 점수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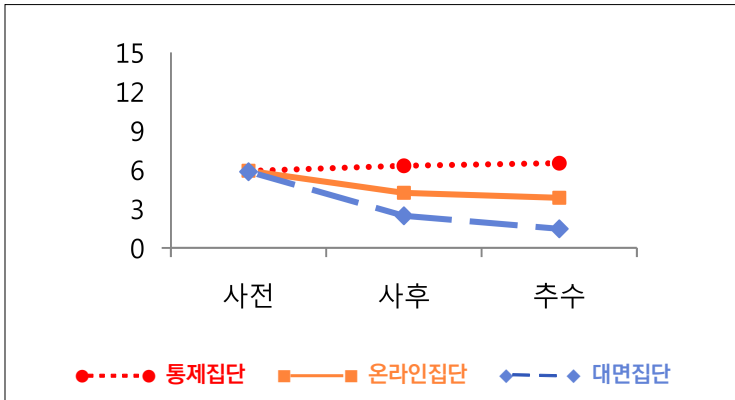
우울의 평균 변화량을 [그림 1], [그림 2], [그림 3]으로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집단,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면집단은 사후-추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 변화량으로, 인지적 요인 [그림 2]에서 통제집단, 온라인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정신적 요인으로 [그림 3]은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면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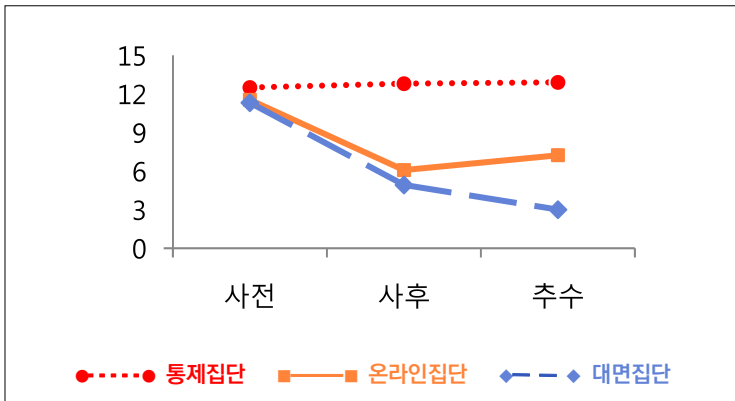
[그림 1] 우울 사전-사후-추수 점수



[그림 2] 인지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그림 3] 신체-정신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3.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통제, 온라인, 대면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자아존중감 척도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한 결과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그리고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수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 변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	SD	M	SD	M	SD
긍정적 요인	통제	13.60	3.17	13.90	2.96	13.80	2.90
	온라인	14.77	2.42	15.00	2.92	15.00	2.55
	대면	15.38	1.89	15.77	1.42	15.54	3.76
부정적 요인	통제	12.00	2.21	12.10	2.08	12.30	3.27
	온라인	12.38	1.71	12.92	1.18	11.23	2.62
	대면	12.15	1.91	14.23	2.86	13.77	2.52
자아존중감 전체	통제	25.45	2.38	27.09	5.34	27.09	6.35
	온라인	27.42	3.85	28.00	3.69	27.33	4.40
	대면	27.54	2.63	27.54	2.63	29.31	3.64

〈표 6〉 자아존중감 대응표본 t검증 및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관련 변인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시기
긍정적 요인	통제	-.339	-.310	.000	
	온라인	1.667	2.071	.416	.008
	대면	-.615	-.113	.238	
부정적 요인	통제	-.081	-.246	-.186	
	온라인	-1.023	1.402	1.794	1.491
	대면	-3.125**	-2.162	.665	
자아존중감 전체	통제	-1.059	-.778	.000	
	온라인	-.625	.047	.351	.508
	대면	-3.292**	-1.628	.662	

* $p < .05$, ** $p < .01$, *** $p < .001$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08, p > .05$).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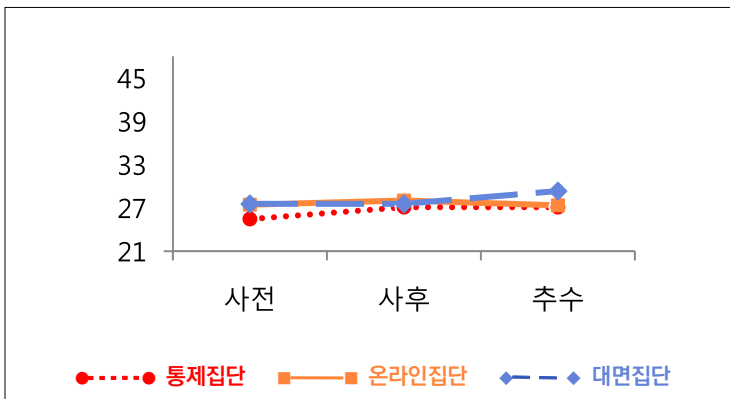
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온라인집단과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면집단은 사전-사후($F=3.292, p<.05$)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면집단은 부정적 요인의 사전-사후($F=3.125, p<.01$)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 온라인집단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은 성격장애, 우울, 섭식장애, 물질 장애에 효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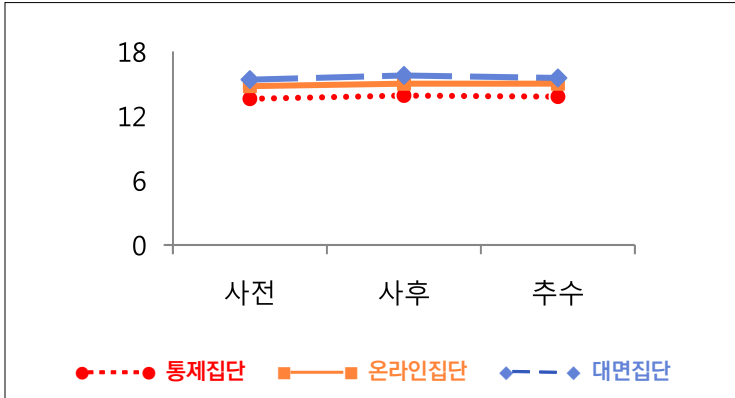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시한 후, 그리고 한달 후, 통제집단, 온라인집단, 대면집단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 점수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자아존중감 평균 변화량을 [그림 4], [그림 5], [그림 6]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 [그림 4]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 [그림 5], 부정적 요인 [그림 6]에서는 대면집단에서만 사전-사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통제집단, 온라인집단에서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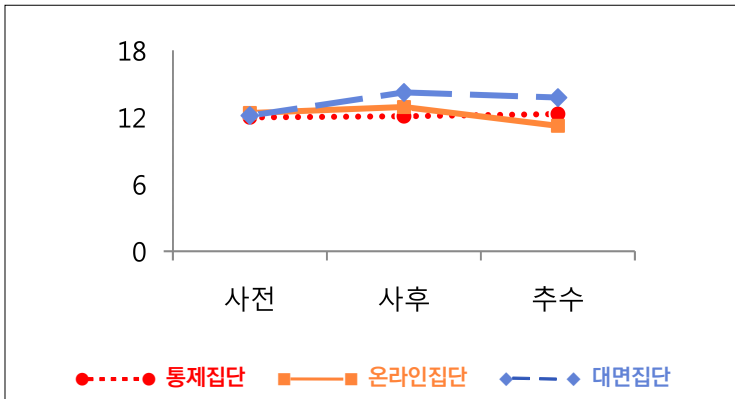
[그림 4]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추수 점수



[그림 5] 긍정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그림 6] 부정적 요인 사전-사후-추수 점수



V. 논 의

Beck(1967)은 도식에 관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는 조직화 원리가 도식이라고 하였고,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과 연관된 도식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Young et al. 2003). 이때 부적응 도식이 활성화되면 우울한 사람은 사고를 역기능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이들의 사고는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

받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 도식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우울, 취업,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공격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심리도식치료는 대학생들의 핵심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 기술을 가르쳐서 성격 변화와 양식이 정서와 행동 상태의 과소 또는 과도 변조를 촉발하는 부적응 도식의 강도를 낮추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심리도식치료는 기억의 강도, 정서의 강도, 신체의 강도, 신체감각의 강도, 인지의 강도 등 심리도식이 덜 빈번하게 활성화되어 원상태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집단을 두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나타난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면집단은 추수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시, 온라인집단과 대면집단은 3명에서 4명씩 소그룹을 만들어 소감 나누기 등으로 집단상담을 활용하였다.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에 '심상 작업'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작업하였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힘들 때는 안전장소를 떠올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회기에 '어린 시절 나 만나기'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아차렸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들과 대처 양식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알게 되었고, 미충족된 욕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 '나의 아동기 경험 및 심상 평가'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안전, 편안함, 안심, 보호 등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로서 좋은 부모가 필요했지만, 좋은 부모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욕구와 감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작업 후, 아동 시절 미충족된 욕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4회기 '나의 어린 시절 부모

만나기' 주제로 비난하는 부모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 신체감각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 패턴을 알아보는 긍정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5회기 '나의 취약한 아동 양식' 주제로 내담자에게 아동의 보호에 대한 욕구와 감정과 재양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그래서 집단에서 어린 시절 상처들을 공감받고, 위로받게 되는 집단 상호작용과 지지의 힘을 얻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6회기는 '나의 화난 어린 시절'을 주제로 내담자들에게 화난 감정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인 양식에 맞추어,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다. 작업 후, 내 감정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집단 내에서 안전과 안정, 보호, 인정, 공감을 받으면서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집단의 우울 효과는 대면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상담이 대면상담의 효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유사함을 밝힌 바라크(Barak et al. 2006)의 연구 결과와 같다.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킹(King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도 같다(오윤석 외 2020). 이처럼 온라인상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이 시작되었으며, 이메일, 채팅 상담과 같은 초기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현재 화상상담, 인공지능, 가상현실,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이 실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상담의 방법이 발전되고 있다(오윤석 외 2020). 그리고 화상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시간 영상과 목소리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온라인상담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화상상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 상담에 집중되어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화상상담은 대면상담과 비교해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고, 내담자의 만족도 높아서 대면상담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오윤석 외 2020).

둘째,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온라인, 대면집단의 대학생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의 긍정적 요인에서 온라인, 대면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

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에서 대면집단은 사전-사후에 차이는 있었으나 사전-추수, 사후-추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은 우울이 감소하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자아존중감 전체에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성격장애, 우울, 불안, 섭식장애, 물질남용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Young et al. 200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많지만,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적절한 개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효과성을 검증은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온라인 심리치료는 공황장애, 사회불안 장애와 같이 공공장소를 기피하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중에서 화상통신은 인터넷과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공간과 장비를 갖추어야 했던 한계도 사라졌다. 그래서 본 연구는 화상통화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하였고, 화상통화를 이용한 집단상담의 효과성 검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우울한 심리상태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통제집단과 온라인집단, 대면집단 간 사전-사후-추수에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서, 코로나19시대에 대학생 대상자로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프로그램 개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집단상담 치료자가 동일하여 연구자의 기대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수 연구에서는 기대 효과와 관련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상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상담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밀보장한계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고 치료자의 자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담 개입은 더 규범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 도식치료 프로그램이 회기당 90분, 주 1회기, 총 8회기로 8주간 시행되었다. 추수 연구에서는 좀 더 회기를 늘려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과 화상통화 방식으로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에 실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집단의 인원수가 경험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적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집단인원 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온라인집단상담의 내담자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후속 연구는 온라인상담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온라인 집단상담을 위한 상담자 훈련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상담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단상담에 관한 연구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은. 2012. “초기부적응 도식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이진현. 2009.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지각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2호: 43-58.
- 권석만. 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이정. 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마음챙김, 자기 비난의 매개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희. 2002. “우울에 있어서의 부정적,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균형 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3권 2호: 305-321.
- 김금정·최윤경. 2018. “비행청소년의 개인 및 집단 분노조절 훈련의 비교: 자아존중감과 초기부적응도식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제16권 1호: 65-77.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 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용·이상덕. 2016. “우울여성의 자아탄력성 회복을 위한 콜라주 미술치료사례 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제6권 1호: 39-59
- 문현미. 2005.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제17권 1호: 15-33
- 박미정. 2019. “성인전기 단절 및 거절도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연. 202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안남. 2011.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 자존감은 자존심이나 우월감과는 다르다』. 서울: 소울메이트.
- 안하얀·서영석. 2010.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 관계문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 847-865.
- 오윤석·조은숙. 2020. “화상회의방식을 활용한 이야기치료 온라인 집단상담의 효과와 특성 연구: 대면 집단상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제6권 4호: 401-409
- 오혜영·김성은. 2016. “대학생 정신건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17권 6호: 333-356
- 우정정·최성진. 2021. “화상통화를 이용한 마음챙김기반 인지치료(MBCT)프로그램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적 치료방법 화상통화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제26권 1호: 37-53.
- 이경희. 2011.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영·최희철.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상담학회』 제13권 2호: 810-838
- 임성진·이정은·한신. 2017.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도식치료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제25권 1호: 25-67
- 전병제. 1974. “자아개념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11권: 109-129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4호: 775-788.
- 조화진·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 2호: 385-411
- 주은선·김경하. 2016.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3권 4호: 69-89

- 차경애. 2007. “청소년의 긍정적 사고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ak, A., and M. Dolev-Cohen. 2006. “Does activity level in online support groups for distressed adolescents determine emotional relie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6(3): 186-190.
- Beck, AT, RA Steer, and GK Brown. 1996. *Manual for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1-82.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ck.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hoi, W. Y., C. K. Kim, and S. Y. Lee. 2005. “Effectivenes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and suicide though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 75-91.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 Dowling, M., and D. Rickwood. 2013. “Online counseling and therapy for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of individual synchronous interventions using chat.” *Technology Human Services* 31(1): 1-21.
- Erikson, E. H. 1968.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arrell, J., I. Shaw, and N. Reiss. 201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 Hong, J. Y. 2012. “Lig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2): 35-42

- Kim, E. H., and S. H. Kang. 2010.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veness: A case of convicts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Correction Review* 47: 119-143.
- King, V. L., K. B. Stoller, M. Kidorf, K. Kindbom, S. Hursh, T. Brady, and R. K. Brooner. 2009.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net-based videoconferencing platform for delivering intensified substance abuse counseling,"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36(3): 331-338.
- Knaevelsrud, C., and A. Maercker. 2010. "Long-term effects of an Internet-based Treatment for Posttraumatic Stres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9(1): 72-77.
- Kwon, H. J., Y. S. Kang, and J. E. Kim. 2008.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ling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kills of school bullying victim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 46-57.
- Lee, D. H., J. Kim, and J. J. Kim.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Online Psychotherapy." *Korean J Counseling Psychotherapy* 27(3): 543-582.
- Min, S. Y. 2010.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a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1-10.
- Park, H. M. 2013. "*The effect o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in regards to personal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Kwan dong University. Gangneung.
- Rosenberg, F. R., and M. Rosenberg. 1979.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6): 407-44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J. S. Klosko, and M. E. Weishaar.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The Effect of Schema Therapy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Video Conferencing Schema Therapy Program Group -

Mun Sun Kwon*·Seong 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id-19 era Schema therapy program through video conferencing. In november 2020, among the students of Busan D University, who saw the experiment notice on social network platforms and unoversity websbsite, and submitted an application, randomly sampled 44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control group of 15 people, an online group of 14 people and a face-to-face group of 15 people. The online group consulted in a video conferencing method, the face-to-face group consulted in a face-to-face manner, and the control group was untreated. The program consisted of eight sessions, and was held once a week for 60 to 90 minutes per session. Preliminary Pre-Post-F/U tests were performed using depression and self-esteem scales. For Test of Homogeneity of three groups, the pre-scores of each dependent variable were conduct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an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the scores of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using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Two-Way RM ANOVA). Also, Paired Samples t-test was performed on pre-post, pre-F/U, post-F/U measured values of control group, online group and face-to-face groups. As a result, there was no effect on self-esteem in online group, face-to-face group and control groups participating the program, but online group and face-to-face group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depression than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continued during the F/U phase. It can be seen that schema therapy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Keywords : Schema Therapy, College Student, Depression, Self-Esteem, Video Conferencing

투고일: 2021.09.29.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23.

* MA Graduate, Tongmyo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97>

【연구논문】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난미**·이명신***·홍은솔****

논문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남녀교사를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 성차별지각을 측정하였고, 412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차별지각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남성의 경우 그 관련성이 여성보다 강했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가 남성의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사의 우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 성별의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588)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4 Program 참여 교수, 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4 Program 참여대학원생(석사과정), 교신저자

I. 서론

우울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켄서앤서 2021). 우울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전교조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2016)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집단은 일반인구집단에 비교해서 더 높은 우울증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집단의 질병이나 사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건강근로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 역시, 교사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OECD 교사들과 비교하여 교직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국가의 교사들보다 교직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황현숙·이지연·장진이 2012).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른 직업집단 및 다른 나라 교사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교사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일상적인 일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증가하였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장기화된 코로나는 대구 지역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사가 경험하는 우울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최은숙·권민정·이해준·조교영 2017).

우울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며, 의미 있는 체중의 변화 및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나고, 정신운동이 초조해지거나 지연되며, 활력 상실 및 피로와 함께 무가치감 및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사고력 및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해지며,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및 시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APA 2015). 우울에 개입하기 위한 인지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김성민 2004), 인지행동적 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우울은 반추, 귀인, 인지삼제 등 개인적인 측면의 인지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김은하·김보라 2018; 권석만 2003), 최근에는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용·임란 2014).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각할 수 있는 불공정성의 측면이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김은하·김수용 2017), 이는 ‘수저론’, ‘삼포세대’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신혜진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심리적 변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을 고려할 수 있다. BJW는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Dalbert 1997).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개인 성격 특성이자 인지 양식인 BJW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유지된다(Dalbert 2001). Dalbert(1999)는 BJW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self)은 개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BJW-others)은 개인이 타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믿는 것을 의미한다. BJW-self는 삶의 만족, 자존감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JW-others는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고정관념, 편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전주원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JW는 통제소재, 인지적 유연성 등 인지관련 변인과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진로 적응성, 취업 스트레스 등 진로 및 취업 등과 같은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다(양남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특히, BJW는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데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 2019; 홍남영 2020). BJW와 우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홍남영 2020; Dalbert 2001). 첫 번째로 BJW는 개인이 공정하게 행동하게 한다.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BJW에 맞게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BJW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세상은 공정하고, 타인 또한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들의 노력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맡은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확신하며,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취 행동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부당한 경험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JW가 높은 개인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김으로써 부당한 경험을 적게 하게 되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BJW와 우울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BJW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선 성차별지각과 성별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교육부(2021)에 따르면, 교직 사회에서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그러나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편에 해당하였다. 조직 문화가 지도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이러한 양상이 교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김영옥·정바울·김현진, 2012), 교직 사회 역시 성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정란 2003).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설문조사에서

여성 교사들이 호소하는 피해가 여전하고, 이러한 양상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66%가 경험했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교사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교육부 2021). 한편, 최근 들어 여성 교사뿐만 아니라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살펴볼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관리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의 수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1). 또한, 이와 함께 여성 교사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남성 교사들도 상대적 불평등 등을 경험할 수 있다(손형국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두산백과 2010). 여러 차별 중에서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써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성차별적 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지만, 여성의 권리가 신장 됨에 따라 여성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시작되었다(박지현·탁진국 2008). 성차별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각하는 성차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홍성혜 2019).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적 및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반응과 이러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Blodorn, O'Brian와 Kordys(2012)은 여성은 남성보다 성차별지각이 더 높았고 개인적 성차별이 제도적 성차별보다 성별 격차가 현저하게 더 컸다. 유사하게 홍콩에 거주하는 사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지각, 성별 고정관념, 직장에 대한 헌신, 퇴직 의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Foley, Ngo와 Loi(2006)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차별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차별지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다수 진행되었다(김은하 2018; 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김은하·백혜영 2018; 강혜원·이정운 2020).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으며(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차별지각은 남녀의 성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차별은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차별 경험은 분노, 혐오, 우울,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을 일으키고(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Pascoe and Smart Richman 2009). 유사하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며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 국내연구에서도 성차별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는데 성차별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보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JW과 성차별지각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낮고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높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또한 BJW가 낮을수록 직업적 삶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유사하게 색맹에 대한 인종적 태도 역시 BJW와 강한 관련이 있었다(Neville, Lilly·Duran, Lee, and Browne 2000). 마지막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직접 연구한 결과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김은하 등(2017)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BJW-self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직장내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세상이 정당하다는 신념이 낮아지며 이는 높은 우울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에서 BJW의 수준이 높고 성차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은 낮아지며 성차별지각이 낮을수록 우울 역

시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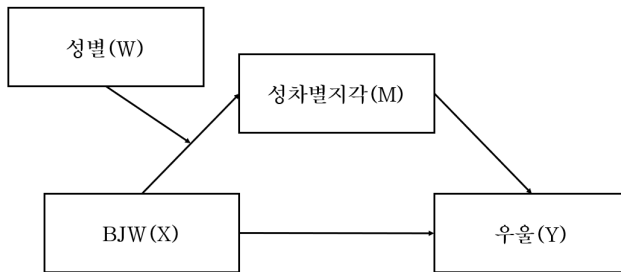
더하여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이러한 차별에 민감해지면서 성차별 문제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에 관한 입장에 차이가 커서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유주연·안현의 2020). 이러한 점에서 성별 역시 이들 변인 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예상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BJW 수준에는 성별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함께 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달베르트(Dalbert 2001)는 BJW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어린 시절 동안 발달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에는 성 고정관념, 성역할 등 성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들이 함께 형성되는데 이는 호르몬 등 생물학적 요인과 부모, 사회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erk 2013; 이종숙·신은수·안선희·이경옥 2015 재인용). 특히,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에 비해 사회적 규준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이에 동일시하거나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방희정·조혜자 2004). 여성의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성 고정관념은 완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성고정관념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2012 재인용). 이런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별에 따라 명확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해왔고 이는 BJW와 우울의 관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BJW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에 비교해서 남자가 더 높은 수준의 BJW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성차별지각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들의 성별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성차별적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이 매개하는가? 둘째,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가? 셋째, BJW이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1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4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144명(35%), 여자 268명(65%)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97명(23.5%), 30대 202명(49%), 40대 72명(17.5%), 50대 37명(9%), 60대 4명(1%)이었다. 재직 학교는 중학교 201명(48.8%), 고등학교 211명(51.2%)이었고, 재직

학교소재지는 부산·울산·대구·경상지역 241명(58.5%), 서울·인천·경기지역 115명(27.9%), 광주·전라지역 30명(7.3%), 대전·충청지역 21명(5.1%), 강원지역 5명(1.2%)이었다. 교직 경력은 10년 미만 281명(68.2%), 10년 이상 20년 미만 82명(19.9%), 20년 이상 30년 미만 25명(6.1%), 30년 이상 24명(5.8%)이었다. 설문 조사에 앞서 설문 결과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을 작성에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4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온프라인 설문조사는 각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교사 커뮤니티, 개별 중고등학교 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루카스, 알렉산더, 파이어스톤과 레프레톤(Lucas, Alexander, Firestone, and Lebreton, 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v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루카스, 주다노프와 알렉산더(Lucas, Zhdanova, and Alexander 2011)가 개정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J-self(예: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PJ-self(예: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한 방식으로 대한다.’), PJ-others(예: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DJ-others(예: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을 측정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혹은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90, PJ-self .84, PJ-others .88, DJ-self .83, DJ-others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4, PJ-self .83, PJ-others .86, DJ-self .90, DJ-others .86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6이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라들로프(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통합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 장면뿐만 아니라 비임상적 장면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우울 경험 중에서도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전경구·권기택·김상기, 1999). 우울 감정(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 감정(예: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신체/행동 둔화(예: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 대인관계(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를 측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7문항, 4문항, 7문항, 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극히 드물게(1일 이하)'는 0점, '가끔(1~2일)'은 1점, '자주(3~4일)'는 2점, '거의 대부분(5~7일)'은 3점으로 측정된다.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4문항은 역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숙희 2020).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서숙희(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1, 우울감정 .65, 긍정감정 .88, 신체 및 행동 둔화 .76, 대인관계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3, 우울감정 .90, 긍정감정 .77, 신체

및 행동 둔화 .85, 대인관계 .7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7로 나타났다.

3) 성차별지각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차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카머런(Cameron 2001)이 개발한 지각된 개인 차별(Per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 척도와 지각된 집단 차별(Perceived Group Discrimination) 척도를 유주연과 안현의(2020)가 변안하고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예: '나는 내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여성들은 집단으로써 차별받는다.'),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남성들은 집단으로써 차별받는다.').를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이 중 두 문항은 역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머런(2001)의 연구에서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각된 개인 차별 척도 .70, 지각된 집단 차별 .68로 나타났다. 유주연과 안현의(202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2,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85,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7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7,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8,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78,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0,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8,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6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념타당도 확인하였는데 .7이상일 때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6~.7 사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배병렬 2011)에 따랐다. 둘째,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절된 매개분석의 가정을 확인하였다. 제임스와 브렛(James & Brett, 1984)은 매개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이어지는 경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경로 중 하나 또는 모든 경로가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조절된 매개효과이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경로는 조절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정선호·서동기, 2016 재인용).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조절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uller, Judd, and Yzerbyt 2005).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Hayes, 2017). 이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시하였다(Shrout and Bolger 2002). 단순 매개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변수에 따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Simple Slope)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단순 매개 모형과 함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Macro PROCESS의 model 7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20)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수식으로 나타내었을 때는 수식 1, 수식 2와 같다. 수식 1의 경우 매개변수인 성차별지각(M)에 대하여 X는 BJW, W는 성별, XY는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내며, a_1 , a_2 , a_3 는 각각

의 회귀계수 즉,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i_M 은 회귀상수, e_m 은 추정오차를 의미한다. 수식 2의 경우 우울(Y)에 대하여 BJW가 성차별 지각을 매개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c' , b 는 효과크기, i_Y , e_Y 는 회귀상수와 추정오차를 의미한다.

$$M = i_M + a_1X + a_2W + a_3XW + e_M \quad (1)$$

$$Y = i_Y + c'M + bM + e_Y \quad (2)$$

III.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JW는 우울($r=-.42$, $p<.001$), 성차별지각($r=-.37$, $p<.001$)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우울은 성차별지각($r=.33$, $p<.001$)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412)

변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
BJW	-		
우울	-.42***	-	
성차별지각	-.37***	.33***	-
평균	4.24	.71	3.17
표준편차	.89	.53	.90
왜도	-.22	.98	-.27
첨도	.59	.46	-.24

주. *** $p < .001$, 점수 범위: BJW(1-7), 성차별 지각(1-6), 우울(0-3점)

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BJW가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지만,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BJW의 주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N=412)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2.04	.41	4.98	.00	1.23	2.84
BJW	-.33	.09	-3.59	.00	-.51	-.15
성별	-.18	.24	-.74	.46	-.66	.30
BJW×성별	.05	.06	.94	.35	-.06	.16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BJW는 성차별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37, p<.001$), 성차별지각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2, p<.001$). 또한 BJW와 우울 간의 총효과는 $B=-.25(p<.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성차별지각이 투입되면서 BJW와 우울 간의 직접효과가 $B=-.21(p<.001)$ 로 감소하여 성차별지각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74	.20	23.64	.00	4.35	5.14
BJW	-.37	.05	-8.02	.00	-.46	-.28
종속변인: 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주.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하였다.

〈표 4〉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25	.03	-.30	-.20
직접효과	-.21	.03	-.26	-.15
간접효과	-.04	.01	-.07	-.02

4.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B=.22, p<.05$), 상호작용 항을 통해 추가된 설명력은 유의하였다($\Delta R^2=.01, \Delta F=6.33, p<.05$). 이는 성차별지각에 대한 BJW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남자($B=-.44, p<.01$)와 여자($B=-.22, p<.01$)의 경우 모두 기울기 계수는 유의하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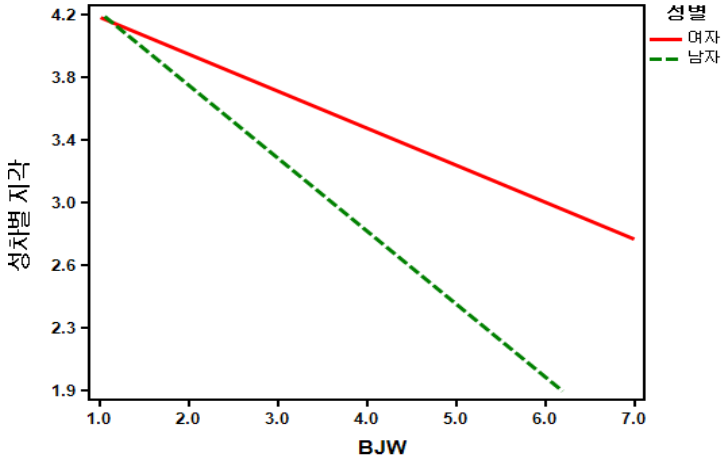
〈표 5〉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별	-.25	.38	-.65	.51	-1.00	.50
BJW×성별	.22	.09	2.52	.01	.05	.39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ΔR^2		ΔF		p	
	.01		6.33		.01	

〈표 6〉 성별에 따른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남자	-.44	.07	-6.69	.00	-.57	-.31
여자	-.22	.06	-3.98	.00	-.34	-.11

[그림 2]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5.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7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차별지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22, p<.05$), 성차별지각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12, p<.01$).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살펴본 결과,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CI=.005\sim.056$)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BJW와 우울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CI=-.09\sim-.03$)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적인 영향($B=-.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B=CI=-.05\sim-.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영향($B=-.0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에 제시한 수식 1, 수식 2를 적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수식 3,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M = 4.8702 - 0.6624X - 0.2501W + 0.2190XY \quad (3)$$

$$Y = 1.2099 - 0.2059X + 0.1183M \quad (4)$$

〈표 7〉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	-.25	.38	-.65	.51	-1.00	.50
BJW×성	.22	.09	2.52	.01	.05	.39
종속변인: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표 8〉 성별의 조절된 매개지수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3	.01	.005(.0046)	.06(.0555)

〈표 9〉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변인		<i>B</i>	<i>SE</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남성	-.05	.02	-.09	-.03
	여성	-.03	.01	-.05	-.01

IV.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개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성차별지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을 높이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 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Neville, Lilly, Duran, Lee, and Browne 2000)를 확인하는 결과이며 성차별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보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이 높아지고, 성차별지각이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며 동시에 BJW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우울을 이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BJW와 성차별지각 정도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낮을수록 성차별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성차별

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우울한 교사들의 세상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성차별경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탐색하는 것이 우울한 교사에 개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BJW가 여성의 BJW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교사의 BJW가 남성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교사의 높은 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우리사회의 다른 직업군에 비교하여 안정적인 공무원 직군이며 교육부(2021)에 따르면, 전체 교원 대비 여성교원 비율은 중학교는 71.0%, 고등학교는 56.0%로 전년 대비 각각 0.5%, 1.2% 상승하였다. 또한,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는 35.3%, 고등학교는 17.3%로 전년 대비 각각 1.8%, 1.5% 상승하였다. 이처럼 여성 교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위 관리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은 여성교사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직업집단에 비교하여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성혜 2019; Blodorn, O'Brian, and Kordys 2012; Foley, Ngo, and Loi 2006). 비록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향상되었다고 지각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의 남성이 20대 남성의 50.5%, 30대 남성의 38.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마경희 외 2018), 20~30대 남녀집단에서 남성의 53.5%

가 한국 사회의 역차별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주연·안현의 2020).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성차별지각의 수준은 남성교사보다는 여성교사에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한다면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여성교사의 성차별지각보다는 남성교사가 성차별지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교사의 경우에 BJW가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교사에 비교하여 강한 것을 의미한다. 즉, BJW가 낮은 경우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증가하여 높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성차별지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성차별 지각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또한, 교직 사회 내에서 남성중심적 교직 사회에서 여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오정란 2003), 다수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손형국 2015)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양상이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교사에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교사의 연령대가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남성 교사에게 더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유주연·안현의 2020). 상담 장면에서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BJW 수준이 낮은 경우 남녀교사 모두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내담자가 성차별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BJW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사에 비교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화될수록 남성교사의 성차별지각과 우울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지만(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2019; 홍남영 2020),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등과 같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구미영, 김종숙, 윤덕경, 천재영, 양승엽, 김근주, 2020),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교직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교육부 2021) 성차별지각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BJW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거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양남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초점을 두어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개입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20~30대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42.8세, 고등학교는 43.1세에 해당하였다(교육부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연령대별 시각차 및 세대별 특성이 다름에 대한 부분에 따라 연령별에 따른 관계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BJW와 성차별 경험(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성폭력 이차피해 태도(정지수 2018), 성매매 통념(박은화 2016)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관련 변인들을 활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 국외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경력, 보직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라는 특수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이정윤. 2020. “미묘한 성차별 (Gender Microaggression) 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권 3호: 63-92.
- 교육부. 20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09. 01)
- 교육부. 2021.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11. 12)
- 교육부.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09. 01)
- 구미영·김종숙·윤덕경·천재영·양승엽·김근주. 2020.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성민. 2004. 『우울과 상위인지 자각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권 4호: 593-614.
- 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증이론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3호: 409-429.
- 김은하·김보라. 2018.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3호: 335-354.
- 김은하·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권 1호: 1-22.
-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권 4호: 643-667.
- 김은하·박한솔. 2018. “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권 3호: 429-449.
- 김은하·백혜영. 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2호: 173-193.
- 김은하·전주원.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적주의 태도.” 『인간이해』 40권 1호: 1-21.
- 김재은·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권 1호: 187-205.
- 김형렬·이세영·이이령·김학한·이원영. 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실태조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김혜진·박효원·박희진·이동엽·이승호·최인희·길혜지·김정현·이호준. 2020. 『교원 및 교직원환경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II)』, 한국교육개발원.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두산백과. 2010. 차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5366&cid=40942&categoryId=31614> (검색일: 2021. 08. 30)
- 대구광역시교육청. 2020. 『대구시교육청, 학생 및 교사 대상 코로나19 재난정신건강평가 결과발표』, <http://www.dge.go.kr/>(검색일: 2021. 09. 01)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은화. 2016. 『성매매 통념과 성폭행 사건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지현·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조직 내 성차별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21권 2호: 245-263.
- 방희정·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권 1호: 83-106.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숙희. 2020. 『우울 대학생을 위한 마음챙김 도입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손형국. 2015. “초등학교 남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권 4호: 347-372.
- 신혜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5호: 413-437.
- 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동향.” 『인문사회 21』 12권 2호: 1823-1838.
- 양은정·심은정. 2020.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7권 1호: 225-247.
- 오정란. 2003. “전문직에서의 여성소의 현성과 대안 탐색: 교직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권 4호: 25-58.
- 유주연·안현의. 2020.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권 4호: 351-378.
- 윤소미.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과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캔서앤서. 2021. “코로나19시대, 국민 4명중 1명은 우울증.... OECD 1위.” <https://www.cancerans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검색일: 2021. 08. 01)
- 이용·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검증.” 『보건사회연구』 34권 4호: 93-122.
- 이현주. 2012.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6권 2호: 391-412.
- 전겸구·권기덕·김상기. 1999. “한국판 CES-D 개정연구: I.” 『사회과학연구』 6권

- 1호: 429-451.
- 전경구·최상진·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권 1호: 59-76.
- 정선호·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권 1호: 257-282.
- 정지수. 2018. 『남녀의 권위주의 성향, 공정세상 신념과 직장 내 성폭력 이차피해 태도와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은숙·권민정·이해준·조교영. 2017. “한국 교사의 심리·사회적 근로환경과 우울 위험의 관련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권 4호: 463-471.
-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권 3호: 33-62.
- 홍남영. 2020.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홍성혜. 2019. 『성 평등 의식이 능력주의와 성차에 따라 성차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현숙·이지연·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권 2호: 495-515.
- APA 저.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박원명, 신민섭, 유범희, 윤진상, 이상익, 이승환, 이영식, 이현정, 임효덕 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서울: 학지사.
- Berk, E 저.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역. 2013. 『아동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Bosson, J. K., E. C. Pinel, and J. A. Vandello.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 520-531.
- Blodorn, A., L. T. O'Brien, and J. Kordys. 2012. “Responding to

- sex-based discrim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implications for legal decision mak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3): 409-424.
- Cameron, J. E. 2001. “Social identity, modern sexism,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group discrimination by women and men.” *Sex Roles* 45(11): 743-766.
- Choma, B., C. Hafer, and F. Crosby, and M. Foster. 2012. “Perceptions of personal sex discrimination: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ituational ambigu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5): 568-585.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1997. “Coping with an unjust fate: The case of structural unemployment” *Social Justice Research* 10(2): 175-189.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albert, C., U. Fisch, and L. Montada. 1992. “Is inequality unjust? Evaluating women’s career chance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 Revue Européenne de Psychologie Appliquée* 42(1): 11-18.
- Foley, S., H. Y. Ngo, and R. Loi. 200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personal gender discrimination: A study of solicitors in Hong Kong. *Sex Roles* 55(3): 197-208.
- Hayes, A. F. 저. 이형권 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파주: 신영사.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Lucas, T., S. Alexander, I. Firestone, and J. M. LeBreton.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L. Zhdanova, and S. Alexander.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Neville, H. A., R. L. Lilly, G. Duran, R. M. Lee, L. Browne. 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lor-blind racial attitudes scale(CoBRA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59-70.
- Muller, D., C. M. Judd, V. Y. Yzerbyt.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Pascoe, E. A., and L. Smart Richman.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zrazi, A., and B. Gangloff. 2020. "Relations among gender, status and various dimensions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justice sensitivity." *Cognition, Brain, Behavior* 24(2): 93-121.
- Schmitt, M. T., N. R. Branscombe, T. Postmes, and A. Garci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Shrout, P. E.,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The Relations of Belief in a Just World, Depression among Teacher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Nanmee Yang**·Myungshin Lee***·Eunsol H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of teacher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gender of the 412 teachers working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Second, gender had moderation effect on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men, the tendency was stronger than that of women.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which could lead to more experience of depression, and this pattern was more pronounced in me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depression among teachers,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gender

투고일: 2021.09.29. 심사일: 2021.11.08. 게재확정일: 2021.11.16.

* This document is a research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First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rresponding Author, Master's Cour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229>**【연구논문】****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외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윤유라*·이은주**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가속화시킨 코로나19 상황의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의 서비스 전략과 함께 실제 적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사항과 미국의회도서관(LC)등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공공도서관은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도서관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국외 도서관계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의 수용이 필요함에 언급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서비스정책, 도서관서비스전략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21년 현재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중심축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된 기술은 우리 사회를 연결과 공유 중심의 수평적인(horizontal)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대면서비스를 주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들에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서비스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공공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도서관계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우편대출과 무인 스마트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북 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원 2020, 258).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선진 사례와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의 국외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도서관계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관련 기관과 국외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전략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체 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와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기반의 지능화(Intelligence)를 통한 자율화(Autonomisation)가 중심키워드라 할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17-18).

그러나 ‘연결되고 지능화된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이긴 하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별 기술의 진보와 적용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융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O2O 혁명’(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기술의 진보보다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분야들이 융합하여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부산도서관 2021, 11). 일상생활에서 O2O 혁명의 사례로 기술되는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상생활에서 O2O 서비스 사례

영역	사례 기업	서비스 내용
물류에서의 변화	아마존	주문과 물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주문이행센터(Fulfillment center)를 고안하고, 빅데이터와 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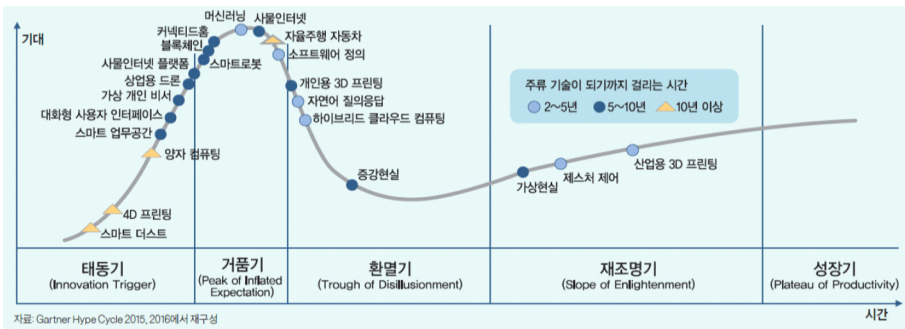
		<p>지능을 활용한 예상배송 서비스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의 예상배송 시스템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 패턴을 분석함. 이후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을 사전에 고객 주변의 물류창고에 배치하고 포장해두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즉각 배송이 가능
금융에서의 변화	핀테크	<p>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에서 알리페이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함. 고객들의 신용을 측정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의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 신용 부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나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함
헬스케어에서의 변화	핏빗 (Fitbit)	<p>핏빗(Fitbit)은 핏빗포스에 내장된 첨단 가속도계와 고도계를 활용해 걸음 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총 9가지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함. 수집한 개인의 고유 데이터는 바로 블루투스나 NFC를 통해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동기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핏빗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습관 개선이 가능해지고, 개인에게 적합한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등을 제시하며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함
가정에서의 변화	네스트 (Nest)	<p>네스트는 센싱을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동 스케줄링으로, 약 20%의 에너지 절약</p>
	세프 Waston	<p>전 세계 모든 음식의 조리방법을 학습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 가장 적합한 요리 방법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식자재에 적합한 요리방법 만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 식단 제안

* 이민화.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 시리즈, 14-107. 중 일부 요약

요컨대 <표 1>에서와 같이 O2O 혁명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춰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예측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기술을 활용한 일상의 건강한 발전은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핵심개념으로,

가트너(Gartner)는 [그림 1]과 같이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많은 기술이 10년 이내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국립중앙도서관 2017, 35 재인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과의 전환 및 공생 작업은 코로나19 촉발 이후로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된 거리두기는 국가 내에서도 가능한 물리적 비접촉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일상 곳곳에 비대면서비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O2O 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강조는 도서관계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248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박태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1%였으며¹⁾,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사서가 약 84%를 차지하는 등, 사서의 인식조사

1)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음. 먼저, 인공지능(AI)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는 전체의 67%를 차지하였으며, 사물인터넷(IoT)은 78%, 클라우드 컴퓨팅은 64%, 빅데이터는 88%, 모바일은 90%, 로봇은 41%의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음. 이처럼 정보기술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에 대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박태연 외 2018).

에서도 진보적인 정보기술의 적용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높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박태연 외 2018, 211-215). 이러한 긍정적 예측과 더불어 강조되는 점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의 필요성이다. 가령,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할』에 따르면 도서관 역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이용자와 지역사회에서 계속 필요한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해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 및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심원식 2017).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서비스 변화를 겪게 된 도서관을 둘러싼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체계적인 전략수립의 중요성을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서관서비스의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개별 도서관계에서 수행되어 온 다양한 노력을 확인해 보고 그 안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Ⅲ. 도서관의 서비스 전략과 정책 현황

1. 도서관 관련 전문 기관의 전략계획

먼저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 전문기관과 국외 국가도서관 등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략이나 계획들은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시의성 있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본 기관들은 도서관계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들을 수립·제안하는 대표성을 띤 기관으로, 이들의 사례를 통해 현 시대 도서관서비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① IFLA의 전략계획

IFLA에서는 2015년 12월, 변화하는 정보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IFLA가 이루어낼 전략계획」(「Strategic Directions for 2016-2021」)을 발표하였다. IFLA의 핵심 전략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되는데, ① 사회에서의 도서관(Libraries in Society), ② 정보와 지식(Information and Knowledge), ③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④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다.

〈표 2〉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전략계획 2017-2021

주요 방향	의미
사회에서의 도서관 (Libraries in Society)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 (Information and Knowledge)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인 ‘사회에서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를 위한 서비스 핵심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사회에서의 도서관’에서는

전략과 도구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인 '정보와 지식'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을 촉진하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수집했던 자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집 수집과 보존에 대한 역할은 세 번째 방향성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방향성인 '문화유산'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활동을 잘 조율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정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량구축'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IFLA의 전략을 살펴보면 CPOD(수집, 보존, 조직, 배포)라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춘 면밀한 전략개발 및 기술의 활용, 이를 위한 역량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LA의 전략계획

ALA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15년 처음으로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한 이후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2017년 최신업데이트를 완료하였다. ALA에서 제안한 전략계획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① 옹호(Advocacy), ②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③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④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Equity, Diversity & Inclu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용자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략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3〉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전략계획 v.2017

주요 역할	의미
<p>옹호(Advocacy)</p>	<p>ALA와 그 회원들은 도서관과 도서관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 및 일반인과 협력하여 도서관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역, 주, 지역의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 대한 공공 지원을 옹호한다.</p> <p>옹호 활동은 ALA의 핵심 가치를 지원하고, 혁신의 비전을 제공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의 미래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평생 정보발견 및 학습의 중심 기관으로 홍보한다.</p>
<p>정보정책 (Information Policy)</p>	<p>ALA의 정보정책과 관련한 노력은 사람들이 도서관과 자원을 사용하여 삶과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정책은 정보 생산, 저장, 접근, 보존, 커뮤니티케이션, 관련 법률, 규정, 법원 결정, 기타 의사 결정 및 관행으로 구성됩니다. ALA는 지적 자유, 프라이버시, 시민의 자유, 통신,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예산, 도서관 예산, 저작권 및 라이선스, 오픈 액세스, 정부 정보, 문해력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원받는다. 이러한 정책분야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은 고용, 교육, 기업가 정신, 형평성, 개인의 권리확보, 지역사회 참여, 새로운 지식 창출,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p>
<p>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Professional & Leadership Development)</p>	<p>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이 고품질의 전문적 업무능력과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미래에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p>
<p>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 (Equity, Diversity & Inclusion: EDI)</p>	<p>ALA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EDI)이 사서 업무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ALA는 그 업무적 활동과 사서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공평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ALA의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IFLA의 전략계획과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ALA의 전략은 ALA가 사서들의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미국의회도서관(LC)에서는 IFLA와 AL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LC는 「도서관 경험 강화를 위한 전략계획 2019-2023」(Enriching the Library Experience: The FY2019-2023 Strategic Plan of the Library of Congres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의 통합된 3대 역할을 “기억”(memory), “지식”(Knowledge), “상상”(Imagination)으로 두고, 이를 위한 전략을 “이용자 중심”(User Centered), “디지털 지원”(Digitally Enabled), “데이터 기반”(Data Driven)으로 삼고 있다. 3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참조).

〈표 4〉 미국의회도서관(LC)의 서비스 전략계획 2019-2023

주요 역할	의미
이용자 중심 (User Centered)	우리는 이용자가 미국의회도서관에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용자 경험향상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운영방식을 나타낸다.
디지털 지원 (Digitally Enabled)	모든 국민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디지털방식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이용자 기대치도 진화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면해 있는 문제를 설명(해결)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Data Driven)	우리는 방대한 컬렉션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이 제안하는 3대전략은 데이터를 적용하고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현재 및 미래의 도서관이용자와 평생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주요 동기 요인분석을 통한 광범위한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2016-2020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한 「거대 주요 전략」(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FY2016 through FY2020 Serv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이 바로 그것으로 총 7개의 전략 중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전략만을 언급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미국의회도서관(LC)의 전략계획 2016-2020

전략	의미
전략 2	방대한 자료 및 미국 창조활동의 기록을 획득 및 안전하게 보존하여 접근을 제공한다.
전략 4	직접적 대외활동 및 국내외 협력, 아웃리치서비스를 통해 연구, 혁신 및 평생교육을 장려, 지원한다.
전략 5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문화를 조성한다.
전략 6	선진사례와 표준을 따르는 역동적 첨단기술 인프라를 활용한다.
전략 7	변화를 촉진하고 도서관의 미션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채택하도록 도서관을 조직, 운영한다.

특히 전략 5,6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술 혁신에 대한 도서관의 태도를 적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국제적 권고와 국가적 전략 등을 참조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구현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도서관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브랜치 도서관(branch library)을 설치하여 이용자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톤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①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59년에 설립된 뉴욕공공도서관은 총 92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중 하나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과 지역사회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라는 3개의 사명을 바탕으로 2017-2021년까지 서비스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표 6〉 뉴욕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전략을 위한 사명(2017-2021)

목표	내용
평생학습에 대한 영감(inspire lifelong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유능한 학습자와 연구자를 양성하여 평생학습에 영감을 준다. • 학습 및 정보 탐색 기술을 가르침. • 도구, 리소스 및 작업하기 좋은 장소 제공 • 훌륭한 탐색적 대화에 참여 • 고객이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 • 창의성, 연구 및 문제 해결 지원 • 사람들을 모아 창의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지식의 발전(advance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의 글로벌 관점을 반영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발전시킨다. • 전문 분야를 향상시키는 항목을 식별, 획득 하고 보존. • 우리를 자료와 조직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조직과 연결 •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풍부하게 하도록 지원. • 전문분야에서도 지식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도구의 구축

<p>지역사회의 강화(strengthen our comm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한다. • 핵심 기술 및 능력 개발 촉진 • 고객이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리소스를 제공. •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즐기고, 존중하고,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자료 제공 • 다양한 공동체 구축 지원
---	---

뉴욕공공도서관이 향후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뉴욕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탐색 기술의 보급을 바탕으로 자료와 정보의 무료 오픈 액세스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체 지향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목표 아래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개발, 정보활용기술의 보급, 커뮤니티 자료의 수집과 제공, SNS를 통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강화 등을 통해 뉴욕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기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표 7〉 뉴욕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p>전자책, 전자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plyE : 300,000개의 전자책과 오디오 북, ■ PressReader :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7,000개 이상의 신문과 잡지. ■ Flipster: 최고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50개 이상의 인기 잡지 최신호를 보유 ■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오
<p>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뉴스레터(이용자별),이메일 , 팟캐스터
<p>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Connect : Microsoft Office skills, Google Series 등의 컴퓨터 기술 교육

이러한 노력은 현재 도서관에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19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도서관의 전자책 접근의 방법의 보급과 홍보에서부터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원격 연구 서비스, 온라인 프로그램, 가상 일대일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최근의 전자책 앱 가입자 통계자료와 온라인 프로그램의 출석률 등을 통해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특히 뉴욕공공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뉴욕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사명과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협동형 오리지널 디지털자료 개발하고 보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인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가 있다. 이는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술자의 인터뷰 내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텍스트화하고 이를 업로드하면 일반 시민들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컴퓨터가 만든 문장의 오류를 수정하고 완성해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도서관과 시민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완성한 ‘협동형 디지털자료’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와 관련된 역사를 디지털자료로 구축하는 작업인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가 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도시, 국가 및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뉴욕공공도서관은 팬데믹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Pandemic Diaries 프로젝트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삶에

2) 2020년 3월 도서관이 일시적으로 폐관하면서 2020년 Time Out New York에 도서관의 무료 전자책 앱을 소개하였는데 SimplyE에 대한 등록이 하루 227% 증가하였으며 3월 말까지 SimplyE의 일일 등록은 400% 증가하였다. Grab-and-Go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는데 온라인 프로그램 출석률이 240% 증가하였다. (2020년 5월 기준) <<https://www.timeout.com/newyork/news/the-best-free-new-york-public-library-books-to-check-out-right-now-032520> “The best free New York Public Library books to check out right now”> 2020-3-25.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녹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 작업을 통해 뉴욕의 역사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은 현재의 뉴욕지도 위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지도를 시민들이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PL Map Warper”와 역사적인 사진들이 뉴욕의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지도 위에 매칭하는 프로젝트인 “NYC SPACE/TIME DIRECTORY” 등이 있다.

〈표 8〉 뉴욕공공도서관의 시민 협동형 디지털자료 개발 사례

뉴욕공공도서관	History Now The Pandemic Diaries Project	일반시민들이 겪은 팬데믹 상황에 대해 녹음파일을 수집함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ommunity Oral History	뉴욕시 고유 커뮤니티와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문서화, 보존 및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함.
	NYPL Map Warper	시민들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거의 지도를 현재의 지도 위에 매칭해가는 프로그램
	NYC SPACE/TIME Warper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사진의 위치를 식별해가는 프로그램

②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공공도서관은 1873년에 설립된 이래 81개의 브랜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을 넘어 삶을 개선하고 지성을 키우거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특별한 제3의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0-2024년 전략계획

을 수립하였다. 전략계획을 통해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 ‘탐구의 정려와 학습 육성’,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 조성’, ‘도서관의 자부심과 목적 공유’, ‘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의 중요성 인지’, ‘도서관에 대한 인식확장’이라는 6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표 9〉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략(2020-2024)

목표	내용
정보와 경험에 대한 무료 오픈 액세스 제공	도서관 자료, 프로그램, 기술 및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모두에게 환영받는지 확인. 고객이 도서관 리소스에 더 잘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소스를 만들고 유지. 더 큰 자신감과 기술로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직원의 역량을 강화. 봉사하는 고유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과 지원.
탐구를 장려하고 학습을 육성	공간의 개선 및 확장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컬렉션의 개발 모든 연령의 이용자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 장려와 학습 지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습 및 개발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 공간 구성	완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 모든 이웃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의 유지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지원 제공. 파트너에 대한 일관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여 후원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고 실행.
자부심과 목적 공유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곳에서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후원자 경험을 홍보하고 제공. 조직적 우수성과 후원자 서비스의 문화를 육성하고 우리 업무의 영향에서 공유된 만족을 배양. 대중과 파트너로부터 얻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중을 확대.

<p>창의성과 기지(resourcefulness) 의 중요성 인지</p>	<p>핵심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도서관 우선순위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 사려 깊고 창의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 전역의 파트너와 함께 리더십을 보여 줄 것.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의 설계, 육성, 설계, 강화할 것.</p>
<p>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p>	<p>도서관 내부와 외부 모두에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후원자의 기대를 뛰어 넘을 것. 도서관 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의를 확장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작업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 할 것. 직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후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개선하면서 더 넓은 도서관 분야를 만들 것.</p>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목표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오픈엑세스의 개발과 제공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디지털리소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서비스를 증시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5개의 목표에서도 정보기술 강화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맞춘 도서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LA, LC, 뉴욕공공도서관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장,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뉴욕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카고공공도서관에서도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OverDrive, Hoopla, Flipster등과 같은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활용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표 10〉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Atlantic, Better Homes & Gardens, Bloomberg Businessweek, Entertainment Weekly, 부모님, Real Simple, Scientific American, Shape, Sports Illustrated 및 Time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거 호 .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Cybernavigator: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Maker Lab: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및 전자 절단기를 사용하여 고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디자인, 프로토타입 및 만들 수 있는 소그룹 워크샵과 "오픈 샵" YOUmedia: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공간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시카고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8-2019의 One Book One Chicago³⁾의 주제를 “Imagine The Future”로 하였으며, 이벤트 사업으로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동네 도보 여행, 미래를 위한 디자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Maker Lab 수업, 미래에 필요한 디자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동아리의 구성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현재 시카고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 및 학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서비스는 사서

3)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된 “One Book, One Chicago”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권의 책을 선정하여 봄과 가을에 시민들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권의 책 뿐 만 아니라 시카고 사람들을 위해 한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들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시카고공공도서관의 코로나전후 서비스변화 사례

코로나19 전(대면)	→	코로나19 전(비대면)
ScienceConnections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
Teacher in Library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
Summer Learning Challenge		가족 참여형 Summer Learning Challenge
Storytelling		Live from the Library

기존에 시카고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자연에 관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ScienceConnections”⁴⁾은 코로나 19상황에서 “Make It Mondays: STEAM Activities”라는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6-12세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STEAM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여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Grab and Go Kit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학동안 책을 읽고 요리, 만들기, 과학, 기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에 위치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학교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Teacher in Library”서비스⁵⁾는 “Homework Help: Virtual Teacher in the Library”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Zoom을 학교 숙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Brainfuse”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일대일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여름방학의 8주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 ScienceConnections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자연 및 STEA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어린이참여프로그램이다.

5) 학생들이 학업을 도움 뿐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학습도우미서비스이다.

구성하였던 “Summer Learning Challenge”는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가족모두가 여름동안 500분 이상 읽고(Read), 하나 이상의 실습 학습활동을 완료하고(Discover), 쓰기, 만들기, 그리기 등을 통해 창작물을 만든다(Create)라는 3가지 활동을 완성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Live from the Library”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가, 배우, 음악가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등의 유명인들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③ 보스턴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의 정책과 서비스 사례

1848년에 설립된 보스턴 공립 도서관은 25개의 브랜치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미국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연간 4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보스턴공공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은 뉴욕공공도서관과 시카고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다소 이른 시기인 2012년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최근(2021.8.현재)까지 갱신되지는 않았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정책은 총 8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있다.

〈표 12〉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전략적 계획(2012~현재)

원칙	의미
사용자 중심기관 (User-Centered Institution)	BPL은 이웃의 관심과 시와 영연방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기관이다.
커뮤니티 모임 (Community Gathering)	BPL은 매력적인 온라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며 환영받는 시설을 구축하고 발견, 읽기, 사고, 대화, 교육 및 학습을 촉진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별 컬렉션 (Special Collections)	BPL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공통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한다.
지식 센터 (Center of Knowledge)	BPL은 비교할 수 없는 컬렉션, 디지털 리소스 및 다른 학술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연구자, 평생 학습자 및 지적 호기심을 제공하는 지식 센터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Children and Teens)	BPL은 학문적 지원과 지적 성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읽기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초기 문해력에서 성숙한 독자층에) 이르기까지 촉진한다.
액세스 및 혁신 (Access and Innovation)	BPL은 더 넓은 지식의 세계에서 보유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전자 자원 및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교육을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조직 (Sustainable Organization)	BPL은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봉사 활동을 확장하고 (준업성과 존중의 환경에서 적극적인 직원 참여 및 전문성 개발), 민간 지원과 공공 투자를 활용하는 재정 및 파트너십의 신중한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재미 (Fun)	BPL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미디어, 활기찬 프로그램,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디지털기술을 언급한 원칙은 ‘지식센터’로써의 도서관의 역할과 ‘액세스 및 혁신’, ‘재미’의 영역으로 디지털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제작, 디지털리소스와 네트워크의 강화, 이를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아래 보스턴공공도서관은 E-book과 같은 전자자료는 OverDrive와 Hoopla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으며, 잡지류는 Flipster 영상자료를 위해 Kanopy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앞선 두 개의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수업에서부터 도서관전자자료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특히,

“Open Tech Lab”을 통해 사서와 일대일로 30분간 정보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 13〉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온라인컨텐츠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전자책, 전자자료	OverDrive : eBook, 오디오북, 잡지, 선택한 음악 및 비디오 Hoopla : 오디오북, 음악, 영화, 텔레비전, 전자책 및 만화 Flipster : 25개 이상의 가장 인기 있는 잡지의 현재 및 과거호.
SNS & 온라인 서비스 채널	Facebook,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메일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Open Tech Lab: 예약제로 운영되는 일대일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 digital readiness, 디지털기술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Computer & Technology Classes: (iOS El Capitan(Mac) 및 Windows 10 플랫폼의 초급 수준), 전자책이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방법, 도서관전자자료의 이용법,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 소개

보스턴공공도서관은 총 6가지의 프로그램을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6가지의 프로그램은 작가토크시리즈(Author Talk Series), 안뜰에서 진행되는 여름과 겨울 콘서트(Concerts in the Courtyard & Winter Concert Series), 전시회(Exhibitions), 지역 및 가족 역사시리즈(Local and Family History Series), 로웰 강의시리즈(Lowell Lecture Series), 노인 커뮤니티 지원 사업(Never Too Late Group)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거나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그룹인 Never Too late Group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60년 가까이 지속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활동으로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 라이브 음악 공연, 특히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역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작가나 강연으로 구성해 왔던 것이 특징으로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목요일 오후 2시에 대면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웰빙 특히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Zoom강의를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모습은 모든 연령에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스턴공공도서관의 이용자중심 서비스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거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외의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과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단위 도서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인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권고사항과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LC)이 수립한 서비스 전략을 검토해 보았다. 이들 기관이 수립한 도서관 서비스 발전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용자 중심적 사업 설계의 필요성과 사서의 전문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을 수집·구축·제공·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 교육, 연구, 문화, 사회적 참여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콘텐츠 제작과 재사용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환경, 가령, 문화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조용·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기여도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체험활동(문화, 기술) 향상을 통해 이용자 경험의 창출, 다섯째, 개인의 학습과 연구활동,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수용을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사서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 및 리더십 개발 등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6가지의 기본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현명하게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수행해 나가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단위 공공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고에서 사례를 조사한 뉴욕공공도서관, 시카고공공도서관, 보스턴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기술을 수용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 결합한 점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이 진보적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지역 사회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의 사서들 주도의 디지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외 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전략과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적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기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로 각각의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디지털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원. 2020. “감염병 상황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2호: 247-267.
- 국립중앙도서관.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전략 및 서비스 모형 구축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류영호.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미국 도서관의 대응.” 『국회도서관』 479: 24-27.
- 류영호.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미국 도서관의 대응Ⅱ.” 『국회도서관』 480: 24-27.
- 박태연·강주연·김용·김태경·오효정.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사서 인식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2권 1호: 203-229.
- 부산도서관. 2021. 『부산지역 도서관 미래서비스 연구』 부산: 부산도서관.
- 심원식. 2017.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②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역할. World Library.” [http://wl.nl.go.kr/user/0041/nd24524.do?](http://wl.nl.go.kr/user/0041/nd24524.do)
- 이민화.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대응전략.” 『선진화 정책시리즈』 14-104.
- ALA. 2021. “2021 STATE OF AMERICA’S LIBRARIES Special Report:COVID-19.” [http://www.ala.org/news/sites/ala.org.news/files/content/State-of-Americas-Libraries-Report-2021-4-21.pdf.](http://www.ala.org/news/sites/ala.org.news/files/content/State-of-Americas-Libraries-Report-2021-4-21.pdf)
- 시카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chipublib.org>
-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ypl.org>
- 보스턴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pl.org>
- 미국의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loc.gov>
- 미국도서관협회(ALA) 홈페이지. [http://www.ala.org.](http://www.ala.org)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홈페이지. <http://library.ifla.org>

Service Strategies and Policies of Librarie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Youra Youn*·Eun-Ju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cro-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nd to examine how overseas libraries are responding to these change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service strategies of overseas libraries, this study propose the countermeasur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recommendations proposed by IFLA and ALA and the service strategy of LC.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ies and services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Chicago Public Library, and Boston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cases saw the importance of actively accepting and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which is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comm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emphasized that the necessity of community-centered and user-centered design of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librarians expertise. These characteristics were also found in public library cases, which mentioned the need to accept digital technology as a way to supplement and expand existing services. To this end, it was found that systematic changes were being pursued, such as developing gradual services combined with existing services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users could use progressive technologies smoothly.

Keywords :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s, library service policy, library service strategy

투고일: 2021.10.01.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18.

* Associate Professor, Donggeu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onggeui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255>

【연구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조사연구*

박효은**·정난희***·조항****

논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우울 차이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이 지방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문제해결중심, 사회지지추구,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동시 투입한 결과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하게 불안과 우울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 이후 전염병 상황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 19, 전염병, 대학생, 정신건강, 불안, 우울, 스트레스 대처 전략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1년이 넘게

*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 결과임.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부졸업생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부생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신보건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태’라고 규정하였으며(조수선 외 2020),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등 정신건강 관련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위협, 가족이나 친척이 감염되거나 혹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한 개인 생활의 자유나 사회적 활동의 제한,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이 불안, 분노, 고립감, 애도, 무로함, 우울 등 상당한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최지옥 2021). 2020년 9월에 실시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에 따르면, 불안 위험군은 18.9%로 5월 조사 15%보다 높았으며, 우울 위험군은 22.1%로 5월 조사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0년 7월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우울은 대학대학원생(43.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조유빈 2020). 이러한 통계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인들의 불안,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학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 대부분의 수업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고, 이런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과도한 과제 부여, 스크린을 통한 학습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이윤정 2020), 생소한 수업환경 속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족으로 휴학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소정 2020). 또한,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이 넓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더 높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이동훈 외 2016; Mihashi et al 2009)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 더 민감하

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불안감, 답답함, 안타까움, 체념, 포기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노성동 2020), 또 다른 질적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고 외출 자체로 인해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강진호 외 2020). 전라북도의 한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장준혁 외 2020)에도, 대학생들의 공포 정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우울과 스트레스 정서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서는 유의한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 관련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성과, 수업만족도, 학습경험, 새로운 교수법 개발 등 제공된 교육의 평가,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연구들(강미선 외 2021; 권영문 외 2020; 김영희 2020; 조지수 외 2021; 최현실 2021) 위주로 수행되었을 뿐, 대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관련 소수의 연구도 질적으로 살펴본 연구나 특정 대학의 표본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감염병과 달리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은 대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대학생의 가정환경은 혼자 사는 경우가 배우자와 살거나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 점수가 낮았다(정애리 외 2020). 우울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심은정 2016; Grant et al 2002). 대학생의 가족관계는 우울관련 요인 중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장 크게 나타냈으며(곽현주 외 2013),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비취업 상태이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우울 증상을 가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용 2021). 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민기채 외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이전 대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특성을 보여주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지역, 거주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차이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비슷한 감염병 사태 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그들의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학생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활동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급격한 적응을 강요받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제약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송원익 외 2016) 코로나19로 인해 여가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평소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조애리 외 2011; Mantler et al 2005).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국내 대학생들이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문제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회피지향 대처전략과 정적 상관이, 문제해결중심 전략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gase et al 2009). 또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함경애 외 2011). 아울러 재난 상황 및 질병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추구 행동 및 개인의 대처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Labrague et al 2020; Turner 2015; Xiao et

al 2020; 유혜진 외 2020), 적절한 지원 시스템과 대처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gińska-Bulik et al 2020; Wu et al 2016). 이런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대처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나 주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대처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들에게도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위험요인으로, 문제해결중심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전략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선행이 없는 특수한 감염병 사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 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전략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심리적 문제에 작용하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등)에 따른 우울과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이 지각하는 우울과 불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추후 비슷한 전염병 상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 동거인 유무)에 따른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의 우울,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고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학생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주지하였다. 본 설문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1,034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332명(32.1%), 여자는 702명(67.9%)이며, 서울 및 경기도는 307명(29.7%), 광역시는 307명(29.7%), 지방은 420명(40.6%)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254명(24.6%), 2학년은 255명(24.7%), 3학년은 254명(24.6%), 4학년 이상은 271명(26.2%)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학생은 180명(17.4%), 동거인이 있는 학생은 854명(82.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N	%
성별	남자	332	32.1
	여자	702	67.9
지역	서울 및 경기	307	29.7
	광역시	307	29.7
	지방	420	40.6
학년	1학년	254	24.6
	2학년	255	24.7
	3학년	254	24.6
	4학년 이상	271	26.2
동거인 유무	없음	180	17.4
	있음	854	82.6

2. 측정도구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년, 동거인 유무 등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10문항과 정신건강(불안,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GAD-7)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K-CSI)를 사용하였다.

1)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PHQ-9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Nease, Maloin 2003). DSM-IV의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반응은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5점 이상이면 경미한 우울, 10점 이상이면 경도의 우울, 15점 이상이면 중등도의 우울, 20점 이상은 고도의 우울로 평가하고 있다(송대기 외 2016).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안제용(2013)이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의 표준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6으로 나타났다.

2) 범불안장애 7문항 척도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GAD-7)

GAD-7은 범불안장애 환자를 선별 및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불안 또는 걱정과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0점(전혀 없었다)에서 3점(거의 매일 괴로웠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체크하도록 한 자가보고형 측정도구이다(Spitzer et al 2006). 총점은 0-21점으로, 총점이 5점 이상이면 경미한 불안, 10점 이상이면 중도 불안, 15점 이상은 매우 심한 중증도 불안으로 구분되었다(황숙연 2015).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90으로 보고되었으며(김신향 외 2016; 김용 외 2017),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1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K-Coping Strategy Indicator, K-CSI)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

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전체 33문항이며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problem solving), 회피중심(avoidance),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각각 1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신혜진 외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질문지는 신혜진(2002)이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정은주 외 2012).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추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7, 문제해결중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9, 회피중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여성(M=5.40, SD=4.50)이 남성(M=5.36, SD=4.84)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95$). 우울은 여성(M=7.31, SD=5.45)이 남성(M=6.64, SD=5.76)보다 우울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72$).

2) 학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학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1학년($M=5.10$, $SD=4.47$), 2학년($M=5.72$, $SD=4.69$), 3학년($M=5.19$, $SD=4.47$), 4학년 이상($M=5.54$, $SD=4.78$)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78$). 우울은 1학년($M=6.76$, $SD=5.61$), 2학년 ($M=7.24$, $SD=5.61$), 3학년($M=6.89$, $SD=5.39$), 4학년 이상($M=7.47$, $SD=5.61$)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42$).

3) 지역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지역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서울 및 경기($M=5.62$, $SD=4.64$), 광역시 ($M=6.05$, $SD=4.82$), 지방($M=4.74$, $SD=4.35$)으로 광역시의 불안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789$, $p<.05$). 우울은 서울 및 경기($M=7.54$, $SD=5.75$), 광역시($M=7.71$, $SD=5.62$), 지방 ($M=6.31$, $SD=5.27$)으로 광역시의 우울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31)=7.189$, $p<.05$). 또한 Scheffe's test를 통해 지역별 정신건강(불안,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 모두 서울/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동거인 유무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결과는 표2와 같다. 동거인 유무에 따라 불안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M=5.42$, $SD=4.63$)이 동거인이 있는 학생($M=5.38$, $SD=4.61$)보다 불안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17$).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M=7.17$, $SD=5.60$)이 동거인이 없는 학생($M=6.74$, $SD=5.36$)보다 우울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355$).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변인	분류	불안		우울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별	남성	5.36±4.84	-.132	6.64±5.76	-1.798
	여성	5.40±4.50		7.31±5.45	
학년	1학년	5.10±4.47	1.032	6.76±5.61	.898
	2학년	5.72±4.69		7.24±5.61	
	3학년	5.19±4.47		6.89±5.39	
	4학년 이상	5.54±4.78		7.47±5.61	
지역	서울/경기 (a)	5.62±4.64	7.789***	7.54±5.75	7.189***
	광역시 (b)	6.05±4.82	(c<a.b)	7.71±5.62	(c<a.b)
	지방 (c)	4.74±4.35		6.31±5.27	
동거인 유무	없음	5.42±4.63	.104	6.74±5.36	-.926
	있음	5.38±4.61		7.17±5.60	

* $p<.05$. ** $p<.01$. *** $p<.001$.

2.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과는 표3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불안과 우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의 경우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5$, $p<.05$). 마찬가지로 우울의 경우에도 세 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64$, $p<.05$).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중심 대처전략만이 불안과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예측이 아니라 완화인 듯...?)이며,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p)	VIF
불안	(상수)	-3.217			
	사회적지지추구	-.027	-.031	-.906	1.409
	문제해결중심	.015	.016	.459	1.402
	회피중심	.443	.395	13.736***	1.006
우울	(상수)	-2.732			
	사회적지지추구	-.064	-.060	-1.825	1.409
	문제해결중심	-.063	-.054	-1.655	1.402
	회피중심	.629	.464	16.828***	1.006

*p<.05. **p<.01. ***p<.001.

IV. 논의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처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완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불안 및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을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이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 2021). 이렇게 높은 발생률로 인해 재난대응본부에서 빈번하게 발송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그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재난문자는 그들이 더욱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의 대학생들이 더 높은 불안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비말 감염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상황에서 서울 및 경기, 광역시와 같은 밀집 지역은 그 외 다른 지방보다 사람 간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이는 대학생이 더 높은 불안을 호소하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다.

우울의 경우에도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우울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심미경 외 2002)와 농촌 지역 여중생이 도시 지역 여중생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최혜정 2008)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과 광역시가 더 높은 단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실시했던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지방보다 많은 확진자로 인해 높은 단계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및 경기와 광역시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더 많이 발생한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적어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며(정순돌 외 2011),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10시 이후 가게 이용의 제한 등의 비일상적 경험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이동훈 외 2016).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에 따른 환경적 차이는 우울에 영향을 주며, 서울 및 경기, 광역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학년, 동거인 유무 모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불안을 높게 지각하며(심은정 2016; Gao et al. 2020; Marthoenis et al. 2018)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들(박용천 외 2020; 이동훈 외 2020; Özdin et al 2020)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승하여 여학생들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여가의 제약은 스트레스 대처에 부정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송원익 외 2016), 스포츠 활동이나 모임 참여와 같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남학생들(김동진 외 2001)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에 주로 했던 여가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된 요인들로 인해 그들의 불안과 우울에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재학생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김효정 외 2020),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년 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 불안과 우울 모두 1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보다 4학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소 2학년은 군대, 휴학, 복수전공, 어학연수 등 자신의 대학 생활을 확장시키는 시기에 활동의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1학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함을 유추할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전보다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및 진학 준비로 인한 진로 및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공운엽 외 2021; 박윤미 외 2021),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신이 감염되어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주변인을 감염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소외에 대한 걱정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거인 유무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불안은 동거인이 없는 학생이, 우울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의 각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 다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일한 일상의 정지 경험이지만 물리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지원이나 지지가 어려우므로(성미애 외 2016; 최현수 외 2016)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혼자 해결해야 함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갈등이 증가하므로, 가정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져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신예림 외 2021; 이동훈 외 2020; 이명준 외 2013). 코로나19로 집이 잃어버린 일상의 모든 환경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오인혜 2021) 집 안에서의 생활, 즉 혼자 살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등의 상황에서 각자가 주변과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관계맺음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질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가 요구된다.

둘째, 불안과 우울 모두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전략만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요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여 주관적 안녕감(노승훈 외 2020)과 심리적 안정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은숙 2016)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울의 경우 회피중심 전략의 경우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이은숙 2017)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Penland et al 2000)와도 일치한다. 회피중심 전략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고자 하는 방식이다(제주현 외 2018). 이러한 부적응 회피는 일반적인 기능을 손상시키고 만성 불안을 유지하게(Arnaudova et al 2017)하며,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등과 같이(김혜정 외 2006) 회피는 불안과 우울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회피중심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을 피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이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감소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은숙 2017).

또한, 이런 결과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피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들과 연결 지어 이해해볼 수 있겠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회피중심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중심 전략의 빈번한 사용은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킨다(유현주 외 2018; 서보경 외 2020).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회피적 전략으로는 술마시기, 수면, 게임 등이 있어(장형석 2000), 현재의 문제를 다른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회피중심 전략의 반복적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수면장애들로 대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과제 수행이나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SNS나 게임에만 집중하거나 과제나 시험 등 변화된 환경을 무시하고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은 대학생 혼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학상담서비스에 대한 최근 연구들(김지민 2021; 노성동 2020; 정원우 외 2020; 차남희 외 2020)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대면상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대학생 그룹인 인터넷, 게임, 알콜 중독 고위험군이나 수면장애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는 대학생들을 선별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안,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2020년 10월 말에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요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수준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지역 등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심리적인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군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 및 환경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이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에 대한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집단들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불릴 만큼의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 이외에 다양한 인구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전업주부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선·이예슬·김율리·손치현·김현경·백준상. 2021.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의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지원 연구 : 디지털 큐레이션 캘린더.”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909-916.
- 강진호·박아름·한승태. 20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4권 5호: 289-297.
- 공윤엽·최현성. 2021. “COVID-19에 따른 기업의 고용환경에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인문사회 21』 제12권 2호: 2857-2871.
- 곽현주·김현주. 2013.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7호: 75-98.
- 권영문·김승환.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6권 5호: 743-758.
- 김동진·김재운. 2001. “여가레크리에이션: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선호유형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1호: 787-796.
- 김신향·정수연·박기호·제갈은주·이승환·최윤영·이원혜·최기홍. 2016. “한국형 불안 선별도구 개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5권 3호: 630-644.
- 김영희. 2020. “대학생의 COVID - 19로 인한 온라인 학업 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12호: 278-290.
- 김용·박종일·박태원·정상근·양종철. 2017. “범불안장애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신체증상 지각에 대한 인지적 특성.” 『대한불안학회지』 제13권 2호: 100-107.
- 김지민. 2021. “우울 대학생의 인지행동치료 사례 연구.” 『아동가족치료연구』 제19권: 31-47.
- 김효정·오새내·조명실. 2020.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 수업 시기의 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및 분노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

- 육연구』 제14권 6호: 299-308.
- 김혜정·백용매.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권 3호: 683-699.
- 노성동. 202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영향과 극복요인.” 『신학과 실천』 제72권: 331-356.
- 노승훈·이기학. 2020. “주체성-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2권 1호: 315-338.
- 민기채·김주현·박혜빈·장하영·정보희·천태성. 202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32권 2호: 69-87.
- 박용천·박기호·김나은·이주희·조수린·장지희·정다운·장은진·최기홍. 2020. “COVID-19, 한국에서의 심리적 영향: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9권 4호: 355-367.
- 박윤미·전애은. 2021. “코로나-19상황에서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항공서비스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제35권 3호: 111-123.
- 박현용. 2021. “성별에 따른 우울 증상의 하위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4호: 2017-2030.
- 보건복지부. 시도별 발생동향.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3&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서보경·성명희. 2020.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인터넷게임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습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7호: 653-664.
- 성미애·진미정·장영은·손서희. 2020. “코로나19에 따른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3호: 3-20.

- 송대기·신상수·이소희·김석주·전진용. 2016.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제55권 3호: 194-201.
- 송원익·황재욱·오응수. 2016. “대학생들의 여가제약과 스트레스 대처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3호: 159-167.
- 신예림·정채운·윤수현·최은정·황지영·김민선.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가족유연성과 응집력 및 불안통제성의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제42권 2호: 5-33.
- 신혜진·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4호: 919-935.
- 심미경·박정모. 2002.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의 사회적지지, 우울,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4호: 689-698.
- 심은정. 201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3권 12호: 663-689.
- 안재용·서은란·임경희·신재현·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9권 1호: 47-56.
- 오인혜. 2021. “코로나 이후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식 변화: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80-80.
- 유현주·김호영. 2018.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7권 2호: 155-164.
- 유혜진·황보영. 2020. Effects of Community- 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on Depressive Symptoms and Blood Glucose Control for Older Individuals with Type 2 Diabete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스트레스 研究』 제 28권 1호: 1-9.
- 이동훈·김예진·이덕희·황희훈·남슬기·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2권

- 4호: 2119-2156.
- 이동훈·김지윤·강현숙. 2016.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5권 2호: 355-383.
- 이명준·조영채. 2013.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수준과 그의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6호: 2828-2838.
- 이소정. 2020. “대학들” 2학기도 비대면 수업"...학생들 "차라리 휴학하겠다." 동아일보(7월 16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6/101990952/1>
- 이윤정. 2020.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들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문사회 21』 제11권 6호: 2885-2900.
- 이은숙. 2017.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1호: 55-65.
- 이은숙.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0권 3호: 470-482.
- 장준혁·김종완.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대학생들의 정서적 삶의 변화.”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69-70.
- 장형석. 2000.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전략.” 『研究報』 제32권 1호: 101-115.
- 정순돌·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 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2권: 305-324.
- 정애리·홍은주. 2020. “일반 대중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예방 가능성, 감염예방행위 수행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8호: 87-98.
- 정원우·류석진. 2020.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이 대학생의 우울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7-147.
- 정은주·안창일. 2012.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관한 성차 연구.” 『여성연구』 제82권: 137-162.

- 제주현·김영근. 2018. “성인애착유형과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제18권 2호: 139-157.
- 조수선·주라헬. 2020. “전면적 원격수업 상황에서 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코로나 불안의 조절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6권 4호: 909-934
- 조애리·김계현. 2011.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제12권 1호: 283-300.
- 조유빈. 2020. “당신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가요?.” 시사저널(8월 11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340>.
- 조지수·배정인. 202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형태와 콘텐츠가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대학생의 관점에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3호: 643-650.
- 차남희·김희수. 2020.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비대면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제5권 2호: 41-61.
- 최지욱. 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신경정신의학』 제60권 1호: 2-10.
- 최현수·오미애·강은나·고제이·전진아·김혜승·길현종·박현용·천미경·김솔휘. 2016.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최현실.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5권 1호: 273-286.
- 최혜정. 2008. “도시 농촌 간 여중생의 우울, 피로, 체질량지수, 건강통제위 비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2권 2호: 224-236.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 2020. “2020년 9월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10월 3일). <http://kstss.kr/?p=1873>
- 함경애·변복희·천성문. 2011.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제 12권 6호: 2163-2176.

- 황숙연. 2015. “40대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위험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2호: 313-323.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rnaudova, I., M. Kindt, M. Fanselow, and T. Beckers. 2017. “Pathways towards the proliferation of avoidance in anxiety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6: 3-13.
- Gao, W., S. Ping, and X. Liu. 2020.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from Chin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3: 292-300.
- Grant, K., P. Marsh, G. Syniar, M. Williams, E. Addlesperger, M. H. Kinzler, and S. Cowman. 2002. “Gender differences in rates of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s: measurement matters.” *Journal of Adolescence* 25(6): 613-617.
- Labrague, L. J., J. A. A. De los Santos, and C. Falguera. 2020.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redictive role of coping behaviours, social support, and personal resilienc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10.1111/ppc.12721. Advance online publication.
- Mantler, J., A. Matejicek, K. Matheson, and H. Anisman. 2005. “Coping with employment uncertainty: a comparison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3): 200.
- Marthoenis, M., I. Meutia, L. Fathiariani, and H. Sofyan. 2018.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 living in a disaster-prone region.” *Alexandria Journal of Medicine* 54(4): 337-340.
- Mihashi, M., Y. Otsubo, X. Yinjuan, K. Nagatomi, M. Hoshiko, and T. Ishitake. 2009. “Predic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disorder development during recovery following SARS outbreak.” *Health Psychology : Official Journal of the Division of Health Psychology* 28(1): 91-100.
- Nagase, Y., M. Uchiyama, Y. Kaneita, L. Li, T. Kaji, S. Takahashi, M. Konno, K. Mishima, T. Nishikawa, and T. Ohida. 2009. “Coping strategies and their correlates with depression in the Japanese general population.” *Psychiatry research* 168(1): 57-66.
- Nease, D. E., Jr, and J. M. Maloin. 2003. “Depression screening: a practical strategy.”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52(2): 118-124.
- Ogińska-Bulik, N., and P. Michalska. 2020.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nurses working with terminally ill patients—The mediating role of job burnout.” *Psychological Services*, doi.org/10.1037/ser0000421
- Özdin, S., and Özdin, Ş. Bayrak. 2020. “Levels and predictors of anxiety, depression and health anxiety during COVID-19 pandemic in Turkish society: *The importance of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6(5): 504-511.
- Penland, E. A., W. G. Masten, P. Zelhart, G. P. Fournet, and T. A. Callahan. 2000. “Possible selves, depression and coping skills i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5): 963-969.
- Spitzer, R. L., K. Kroenke, J. B. Williams, and B. Löwe.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Turner, S. B.. 2015. "Resilience of nurses in the face of disaster."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9(6): 601-604.

Wu, D., I. R. Rockett, T. Yang, X. Feng, S. Jiang, L. Yu. 2016. Deliberate self-harm among Chinese medical students: a population-based study. *J. Affect. Disord.* 202: 137-144.

Xiao, H., Y. Zhang, D. Kong, S. Li, and N. Yang.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leep quality of medical staff treating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in China." *Medical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earch* 26: e923549-1.

A Survey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Hyoeun Park**·Nan Hee Jung***·Hang J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COVID-19 and to investigate how their stress coping strategies affect their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living with someone. For the region, both anxiety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Gyeonggi and city area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living in other local areas. Second, regarding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anxiety and depression, we found that only the avoidance-focused coping strategies significantly affected anxiety and depression.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se results.

Keywords : COVID-19, Infectious Disease, Korea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xiety, Depression, Stress Coping Strategies

투고일: 2021.10.01.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12.

*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BA Graduate, Inje University

*** BA Student, Inj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Inje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279>

【연구경향】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활용한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신창환**·박중규***

논문요약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중요한 조직의 관리수단으로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대상이었으며 경험적 연구들은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서비스 질과 안정적 조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과 변혁적 리더십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으며,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파일에 포함되었으며,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 중심의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이직의도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변화와 비전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강한 조직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 경쟁가치모형, 이직의도, 잠재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의 대표적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1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돌봄서비스로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업무강도, 낮은 임금수준, 사회적 인식과 처우의 문제 등으로 요양보호사는 높은 이직률과 이직의도를 보이고 있다(권현정 외 201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3).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공되어야 할 돌봄서비스의 지속성, 개별성과 유대관계에 기반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상곤·함영림 2014).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는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임금수준,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등의 요인들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주재 2010; 조선희·박현식 2012; 이태화·이창원 2013; 김진수 2013). 이들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근무조건과 같은 변수들에 주목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의 리더십,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수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Hartley and Allison 2000)으로서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리더십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성공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어떠한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리더

십 이론은 발전하고 있으며,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셸프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백기복 2014; Avolio et al 2009). 최근 리더십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조직의 성과가 향상됨을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경제적 교환관계에 근거한 거래적 리더십을 넘어서 조직의 비전, 가치, 규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의지를 고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Bass 1990).

조직문화의 개념 또한 리더십 못지않게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경영학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주된 연구의 흐름은 기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관리도구로서의 조직문화 관점이었다(박원우 2019). 조직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조직문화 연구는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가 조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경쟁적으로 추구한다는 경쟁가치모형(competitive value model) 관점에 기초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의 유형들이 존재하며, 이들 하위 유형간의 결합 정도 및 강도(strength)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Reilly 1988; Denison 1990; Kottener and Heskett 1992; 신창환 2016; 안경섭 외 2009).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초점을 두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와 서비스 질 관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 박진희·장윤정(2014)은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황환 외(2017)는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집단문화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제약점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특성과 직원들 간의 유대감 등을 고려할 때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추론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경쟁적인 하위문화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동시에 집단, 위계, 합리, 발전문화의 강도와 조합패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문화 특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조직문화 프로파일(조직문화의 유형별 강도와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변혁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양시설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를 하위집단(조직문화 프로파일)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잠재집단 변인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 및 이직의도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인과적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요양시설에서의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특정 목표를 지향하면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Stogdill 1974), 구성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창출하고 선포하는 것(Bass 1990)으로 정의된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리더십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조직목표의 제시와 달성을 위한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 및 기술을 의미한다(탁진국·손주영 2017).

1900년대 초 등장한 특성이론은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trait)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효과적인 리더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격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을 주목하였다. 특성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50~60년대 등장한 행동(behavior)이론적 관점은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의 특별한 행동 양식에서 기인하며 리더십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1970~80년대의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론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더의 자질, 조직구성원, 상황변수에 의해 조직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백기복 2014).

1980년대 이후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주도 행위로서 다루어졌고, 대표적 이론은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의 주창자는 Burns(1978)로서, 그는 정치와 사회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유형화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종사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rewards)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관점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중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높은 차원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이다. 이후 Bass(1990)와 Avolio 외(1999)는 Burns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경험적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역점을 두고 리더가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유지에 강요점을 두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현재 조직의 상황과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Bass et al 2003).

Burns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면, Bass(1990)는 Burns와 달리 양자는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Bass는 변혁적 리더도 구성원과의 거래적 상호작용 활동 즉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인식시킴

으로써 구성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으로서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화된 배려, 지적자극, 이상적 역할제시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변혁적 리더가 거래적 리더보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률, 직무스트레스 등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신구범 2009; 장석인 2009; 이강욱·손태원 2004; Avolio et al 2009; Walumbwa et al 2008; Rafferty and Griffin, 2004).

2. 조직문화 유형(경쟁가치모형을 중심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은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조직의 문화는 어떤 현상이 특정 조직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어떤 조직은 성공하지만 다른 조직은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는 조직 내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고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되는 것이다(Schein 1996).

조직문화 연구경향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바람직한 조직문화 유형을 갖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다는 특성론적 접근(traits approach), 둘째, 성과가 뛰어난 조직은 독특한 강안문화를 가진다는 문화강도론적 접근(strength approach), 셋째,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조직구조, 운영전략, 산업특성, 환경특성 등)이 적합해야 성과가 뛰어나다는 상황적응적 접근(contingency approach)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김영미·조상미 2011;한봉주 2011; 장용선·문형구 2008).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의 질적 연구방법에서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호정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적용한 조직문화 접근이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접근법에서는 조직문화를 두 가지 차원의 축을 기준으로 네 개의 문화유형을 구분하였다. 수직적 축은 안정·통제를 강조하는 관점과

유연성·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되고, 수평적 측은 조직의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환경에 대한 적응, 경쟁,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외부지향성이라면, 조직의 유지를 위한 통합과 조정을 강조하는 것이 내부지향성이다(Parker and Bradley 2000)

3. 이직의도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나 달성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조직효과성을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로 파악하고 이윤, 수입, 생산성 등을 측정기준으로 삼는 목표접근법과 달리 조직의 내부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내부과정접근법(인간관계론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 응집성, 사기, 조직몰입 등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신창환 2015; 오인수 외 2007). 내부과정접근법에서는 조직과정과 성과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인지와 평가에 의존하여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내부과정접근 관점에서는 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 직무태도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림 1] Cameron과 Quinn의 조직문화 유형과 유형별 특성

		운영의 유연성			
		집단문화(Clan) 집단의 사기, 응집성, 인간관계, 참여적 의사결정의 강조	발전문화(Adhocracy) 성장, 혁신. 외부지지, 카리스마적 권위, 직관적 의사결정의 강조		
내부 지향		-----		외부 지향	
			위계문화(Hierarchy) 안정, 통제, 규정, 신속한 의사결정의 강조	합리문화(Market) 생산성, 능률, 상위자 권위인정, 능력에 따른 권한 부여의 강조	
		운영의 통제			

돌봄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경우 내부과정접근법에 의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이직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Parsons et al 2003; Shields and Ward 2001; Collins et al 2000), 다수의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어려울 때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주재 2011; 이선호 2006; Price 2001; Currivan 1999).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돌봄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50%에 육박하며(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2011~2012년 한국의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4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재가노인복지복지협회 2013; 박진희·장운정 2014).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도 직무소진, 감정노동, 직무강도,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직무를 그만두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종결하는 개인의 조직이탈을 의미한다. 이직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직의도를 통해 이직을 측정하고 있다. 이직의도란 종사자가 조직구성원의 직위를 포기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려는 것으로 현재의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려는 의도이다(Bluedom 1982). 이직의도를 갖는 조직구성원이 모두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이직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Allen and Meyer 1990).

이직의도를 유발하는 요인(job stressor)으로는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대인관계, 조직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심리적 변인(우울,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강영식 2011; 김소정 2012; 조선희·박현식 2012; 이화윤·박경숙 2013). 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4. 변수간의 관계

1)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조직관리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어 왔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로 집약되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역으로 조직문화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리더십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리더이며, 조직문화의 형성에 있어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Schein 1983; Bass 1990). Schein(1983)은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리더십의 특별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조직문화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리더의 역할로서 조직문화의 창조와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은 리더의 영향에 따라 조직문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조직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다(Trice and Beyer 1991; Bass and Avolio 1993; Avolio et al 1999).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조직의 비전제시와 도덕적 목표설정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Klein and House 1995). 반면, 조직문화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조직문화가 성숙하면서 리더의 관여와 역할은 감소하고 오히려 조직문화가 리더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를 리더십의 제약요인으로 본다(전상길·김인수, 1997). 이에 대해 Schein(1996)은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숙기와 쇠퇴기는 조직문화가 리더십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양자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관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리더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김호정 2003; 류은영 2013).

최근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는 양자의 적합관계에 주목하여 특정한 리더십과 특정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ameron과 Quinn(2011)은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적응성을 강조하는 발전문화(adhocracy), 거래적 리더십과 경쟁·고객지향성에 초점을 두는 합리문화(market)의 적합관계를 주장하였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참여·배려를 중시하는 집단문화와 적합성이 높고, 거래적 리더십은 성취·능률을 중시하는 합리문화와 안정·통제를 중시하는 위계문화와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ss and Avolio 2003; Egri and Herman 2000).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문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특정한 조직문화 유형과 적합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와 유연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변혁적 리더십·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리더십 특성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낮은 직무스트레스, 높은 직무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ass and Avolio 1996).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문화변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arling et al 1996)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 훈련을 받은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관리자 간의 업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훈련을 받은 관리자들이 높은 업무성과를 보였다. Avolio et al(1999)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종사자의 만족과 직무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Walumbwa et al(2005)는 변혁적 리더가 구성원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준을 더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다수 연구들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류은영 2013; 최석봉 외 2010; 김호정 2003).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재가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김명숙·최수일 2010)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가치 구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발휘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혹은 문화강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며, 국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조직효과성이 높은 조직들은 서로 다른 경쟁가치를 내포한 네 가지 문화유형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약한 문화보다는 강한 문화적 성향을 보이는 조직일수록 조직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nison and Spreitzer 1991; Yeung et al 1991).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조직의 문화 강도나 문화유형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간호영역에서의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순정 2013; 연영란 2014; 최승혜 외 2014).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었다(박진희·장윤정 2014; 박연희 외 2009; 임혁 외 2008). 직원 간의 업무협조, 팀워크가 서비스 제공에서 강조되는 특성 상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조직도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반·보완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가치모형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조직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구성원의 평균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의적인 집단 분류가 아닌 통계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해, 최신 방법인 편향 보정 3단계 방법(bias adjusted 3-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분류된 하위 집단별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변수 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수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서비스(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며, 전국의 요양시설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시설에 설문조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114개 기관의 총 1,98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0월 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합리·집단·발전·위계문화로 이루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응답자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정분포(예: 정규분포)로 정의되는 하위집단을 찾는 통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모든 관찰치를 단순히 하나의 유형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찰치가 여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probability)로 제시하는 분할적 군집화(partitional cluster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군집분류를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의 경우,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고,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의 척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잠재프로파일을 포함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의 경우, 정해진 통계적 절차에 따라서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며, 응답 반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때문에 범주형이나 연속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방법은 가장 적절한 관찰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여 각 프로파일 별 고유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프로파일의 특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는 모형 선택(model selection)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1개에서 8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CAIC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등의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를 바탕으로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에 더해 프로파일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엔트로피(Entropy), 분류오류, 도출된 프로파일의 개념적 해석 가능성 등 양적, 질적인 준거를 고려하여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프로파일의 개수가 결정되면 잠재프로파일 변수와 관련된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직의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파악하고,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문화 프로파일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보조변수의 효과를

검증할 하는 경우, 분류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3단계 방법(3-step approach) 중 BCH 3단계 접근법(BCH 3-STEP approach)(Bolck et al 2004)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Latent GOLD 5.1(Vermunt and Magidson 2013)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3. 변수의 측정

리더십의 측정은 리더십의 측정수준에 따라 개인수준, 팀수준, 조직전체수준으로, 리더십의 위계에 따라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직속 상관으로 측정가능하다. 요양시설의 특성 상 중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장의 리더십 성향은 요양보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박진희·장윤정 2014),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지각한 시설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더십 설문 문항은 Bass와 Avoli(1996)가 개발한 MLQ-5X를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16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의 측정에서는 조직수준의 문화를 요양시설의 종사자 개인의 인식으로부터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의 조직문화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직문화 설문 문항은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Yeung et al(1991)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를 요인분석하여 재작성한 김호정(200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화 유형별로 각 5개의 문항으로서 총 20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직의도 척도로는 Abrams, Ando & Hinkel(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앞서 먼저 측정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네 종류의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개별 문항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요인 모형으

로 분석한 적합도는 $\chi^2=988.43$, $df=71$, $p < 0.01$, TLI=.886, CFI=.914, RMSEA=.079(90% C.I. =0.074 0.084), SRMR=.048으로 나타났다. 비록 0.01 수준에서 χ^2 검정 통계치가 기각되었지만,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으며 CF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4요인 모형이 해당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표준화 요인계수가 .39~.60 수준이고, 요인 간 상관계수가 .38~.71 수준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위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평균값이 집단문화와 합리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요양시설의 경우 발전문화가 위계문화의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각 변인별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lpha
집단문화	1958	5	25	16.29	3.07	0.80
합리문화	1958	5	25	16.22	3.17	0.81
발전문화	1958	5	25	17.66	2.92	0.72
위계문화	1958	5	25	17.23	2.69	0.70
이직의도	1958	3	20	11.16	2.26	0.64
변혁적 리더십	1958	16	144	64.66	15.72	0.92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2>는 프로파일의 수를 1개에서 7개까지 변화시킨 모형의 적합도를 다양한 정보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지수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가장 적절한 개수로 선택할 수 있다(Petras and Mayns, 2010). <표 2>에 따르면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정보지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프로파일의 개수가 4개일 때부터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관찰치가 각 프로파일에 오류없이 분류되었음

을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경우, 모형 4가 0.796로 가장 높았다. 네 개의 프로파일을 가정한 모형 4의 경우, 마지막 프로파일에 포함된 응답자가 73명 (3.65%)로 크지 않았으나 프로파일이 가지는 특성이 명확하여 포함시킬 경우,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분류의 질과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표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모형	프로파일 개수	LL	BIC	AIC	AIC3	CAIC	SABIC	분류오류	entropy
1	1	-19656.9	39442.8	39347.8	39364.8	39459.8	39388.8	0.000	1.000
2	2	-18906.8	38011.1	37865.7	37891.7	38037.1	37928.5	0.029	0.665
3	3	-18696.5	37658.7	37463.0	37498.0	37693.7	37547.5	0.088	0.745
4	4	-18174.0	36682.1	36436.0	36480.0	36726.1	36542.3	0.104	0.796
5	5	-18079.7	36561.8	36265.4	36318.4	36614.8	36393.4	0.137	0.746
6	6	-17946.8	36364.4	36017.7	36079.7	36426.4	36167.4	0.152	0.752
7	7	-17916.9	36372.8	35975.7	36046.7	36443.8	36147.2	0.173	0.746

각 프로파일 별로 도출된 네 개의 조직문화 점수의 패턴을 고려하여 각 프로파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3〉에 따르면 프로파일1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는 총 922명(46.5%)으로 가장 다수의 응답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1의 전체 평균점수가 프로파일2, 3보다 낮으나 프로파일 4보다는 높았으며, 다른 문화에 비해 위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중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835명(42.13%)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프로파일2는 전체적인 합산 점수의 평균이 프로파일1, 4보다는 높고 프로파일3보다는 낮았으며, 전체 문화 중 발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중강도·발전’이라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은 프로파일2와 마찬가지로 발전 문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전체 조직문화 합산 점수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아서 ‘고강도·발전’으로, 프로파일4는 합산 점수가 가장 낮고 위계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저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과 4는 각각 전체 응답자 중 153명(7.69%)과 73명(3.65%)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프로파일 별 조직문화 점수의 평균

조직문화	중강도·위계 (프로파일1)	중강도·발전 (프로파일2)	고강도·발전 (프로파일3)	저강도·위계 (프로파일4)	전체 평균
	46.50% (n=922)	42.13% (n=835)	7.69% (n=153)	3.65% (n=73)	100% (n=1983)
집단문화	14.63	17.64	20.72	10.18	15.79
합리문화	14.39	17.82	20.81	8.98	15.50
발전문화	15.96	18.98	22.39	11.53	17.22
위계문화	16.29	17.98	20.00	12.23	16.63
전체 평균	15.32	18.11	20.98	10.73	16.28

조직문화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변인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이는 해당 변수의 수준에 따라 응답자 프로파일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chi^2=44.26$, $df=3$, $p<.001$). 〈표 4〉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 점수가 낮은 응답자는 중강도·위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점수가 높은 경우는 발전문화가 우세한 중강도·발전과 고강도·발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저강도·위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점수가 중간 수준(35 ~ 38)인 응답자가 속할 가능성이 다른 점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관계

공변인 변수	점수 분포	중강도·위계	중강도·발전	고강도·발전	저강도·위계	χ^2
변혁적 리더십	1 ~ 27	0.273	0.090	0.051	0.109	44.26**
	28 ~ 34	0.246	0.164	0.113	0.134	
	35 ~ 38	0.210	0.206	0.186	0.323	
	39 ~ 44	0.158	0.214	0.195	0.191	
	45 ~ 65	0.113	0.326	0.454	0.243	
	평균	59.998	70.162	78.273	66.834	

** $p < 0.01$

리더십 변수가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직의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 검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beta = -0.137, p < 0.01$). 이는 응답자가 어떤 프로파일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아지면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5〉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직접효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χ^2
변혁적 리더십 → 이직의도	-0.137	0.011	1059.48**

** $p < 0.01$

잠재프로파일 변수가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변혁적리더십의 직접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 결과, 각 프로파일 별 이직의도 점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75.77, df=3, p < 0.001$). 구체적으로 4개 프로파일 중 중강도·위계에 속한 응답자의 이직의도 점수가 11.770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강도·발전의 점수는 9.317으로 가장 낮았다. 중강도·발전과 저강도·위계의 이직의도 점수는 각각 10.643와 10.135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전체적인 강도가 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문화가 우세한 조직의 이직의도가 낮았으며, 또한 조직문화의 강도가 약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계문화가 우세한 조직의 이직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6〉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결과 변수	중강도·위계	중강도·발전	고강도·발전	저강도·위계	df	χ^2
이직의도	11.770	10.643	9.317	9.835	3	375.77**

**p < 0.01

V. 결론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시설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관리하는 것은 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 이직의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다. 각 프로파일은 하위문화 유형의 강도와 수준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프로파일 1(중강도·위계)과 프로파일 2(중강도·발전)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자의 88.6%).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 다수는 하위문화 간의 경쟁 정도는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성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발전문화와 위계문화는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민감성

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발전 문화 가치가 요양시설에도 도입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전의 보조금 환경에서 강조되었던 통제와 규칙준수를 강조하는 위계문화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프로파일 2(중강도·발전), 프로파일3(고강도·발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혁적 리더십과 발전문화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적합성이 높다는 Cameron과 Quinn(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이직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장이 변화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극을 제공할 때, 비록 업무강도가 높은 환경이라 해도 이직의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프로파일3(고강도·발전)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낮았으며, 프로파일1(중강도·위계)과 프로파일2(중강도·발전)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이라고 평가하는 요양보호사일수록 이직의도가 낮고, 문화강도가 중간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조직의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에게 표준적 서비스와 동시에 개별화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때로는 상충되고 모순된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 유형 강도가 높은 조직의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조직효과성과 리더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 연구의 방법론에 기여하였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군 내에서도 다양한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리더십스타일과 조직효과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연구들이 주로 특정 문화유형이 리더십이나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 특성이 한 조직 내에 공존하고 있으며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경쟁가치모형이 강조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유형이 문화유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조직성고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 유형별 수준이 높은 문화프로파일에서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돌봄서비스 조직의 경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서비스 제공 상황 하에서 유연한 대처와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설장은 경쟁가치모형(CVM)이 제시하는 다양한 가치를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의 개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적절히 조직에서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설장의 조직전략과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제공인력의 협업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조직이다. 장기요양시설은 질이 담보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직업주의 윤리'와 시설의 경영을 위한 수익성 확보라는 '관리주의 관점'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상충되면서도 보완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미션, 가치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기술 향상을 위한 시설장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리더십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은 급격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조직의 인사 및 조직연구에 기여하였다는 학술적 의미와 조직 관리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로서 동일방법오류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개인들로부터 총합한 자료를 통해 리더십, 조직문화,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개인들에게 측정한 변수들을 가지고 교차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동일방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요양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형태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약점을 지닌다. 셋째,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횡단적 연구로는 특정 시점의 조직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직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홍구. 2001.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료사회 복지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호: 7-33.
- 김영미·조상미. 2011.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 연구경향 분석: 영리·행정 조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권: 55-90.
- 김영조·박상언. 1998. “조직문화유형, 조직문화강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6권: 195-238.
- 김호정. 2002. “행정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행정학보』 36권: 87-106.
- 류은영. 2013. “공·사조직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4-479.
- 문형구·장용선. 2001. “리더십과 조직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인사관리 연구』 24권: 41-70.
- 박상언·김영조. 1995. “조직문화 프로파일과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가치 모형의 경험적 검증.” 『경영학연구』 243 권: 213-238.
- 박원우. 2019. 『조직문화 변화관리』. 파주:생능.
- 박영준. 2006.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조직문화,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효과성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1권: 67-97.
- 박지혜·박은주·조상미. 200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 연구경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권: 33-55.
- 백기복. 2002. 『조직행동연구』. 서울: 법문사.
- 신구범. 2009.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61권: 87-102.
- 신창환. 2015. “장기요양시설의 리더십 스타일과 조직구조가 조직몰입과 직

-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4권: 25-55.
- 오인수·김광현·Darnold, T. C·황종오·유태용·박영아·박량희. 2007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인사·조직연구』 154권: 43-86.
- 이강옥·손태원. 2004.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경영학회지』 45권: 1571-1594.
- 이선영·손호중. 2013. “공공조직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지방정부연구』 173권: 223-244.
- 이선호. 2006. “호텔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에 관한 연구.”『관광정보연구』 22권: 87-108
- 이주재. 2011. “노인장기요양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년학』 312권: 277-290.
- 장용선·문형구. 2008. “조직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인사조직연구』 16권: 65-114.
- 장석인. 2009.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인적자원관리연구』 162권: 213-229.
- 전상길·김인수. 1997.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기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인사조직연구』 5권: 1-49.
- 조선희·박현식. 2012.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년학』 32권: 323-340.
- 최석봉·문계완·김경환. 2010.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검증.”『인적자원관리연구』 174권: 225-242.
- 최석봉·정미영·문재승. 2013.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갈등 및 과업갈등의 조절효과.”『인적자원관리연구』 202권: 193-214.
- 한봉주. 2011. “조직문화, 리더십과 구성원 태도 간의 변화 연구: 2007 년과

2010 년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조직학회보』 83권: 123-160.

- Abrams, D., K. Ando, and S. Hinkle. 1998.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group: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norms as predictors of workers' turnover inten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0): 1027-1039.
- Avolio, B. J., B. M. Bass, and D. I. Jung. 1999. “Re-examining the component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using the Multifactor Leadership.”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4): 441-462.
- Avolio, B. J., F. O. Walumbwa, and T. J. Weber. 2009. “Leadership: Current theories,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421-449.
- Bass, B. 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19-31.
- Bass, B. M., and B. J. Avolio. 1996.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 Bass, B. M., B. J. Avolio, D. I. Jung, and Y. Berson. 2003. “Predicting unit performance by assessing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2): 207-218.
- Barling, J., T. Weber, and E. K. Kelloway. 1996.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ining on attitudinal and financial outcomes: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827-832.
- Bluedorn, A. C. 1982. “A unified model of turnover from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35(2): 135-153.

- Bolck, A., M. Croon, and J. Hagenaars. 2004. "Estimating latent structure models with categorical variables: One-step versus three-step estimators." *Political Analysis* 121: 3-27.
- Burns, J.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 Cameron, K. S., and R. E. Quinn. 2011.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John Wiley & Sons.
- Collins, K., M. L. Jones, A. McDonnell, S. Read, R. Jones, and A. Cameron. 2000. "Do new roles contribute to job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staff in nursing and professions allied to medicin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81: 3-12.
- Currivan, D. B. 1999. "The causal order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odels of employee turnover."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94: 495-524.
- Denison, D. R. 1990.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hn Wiley & Sons.
- Egri, C. P., and S. Herman. 2000. "Leadership in the North American environmental sector: Values, leadership styles, and contexts of environmental leaders and their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4: 571-604.
- Hartley, J., and M. Allison. 2000. "The modernization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The role of leadership in the modernization and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Public Money and Management* 202: 35-40.
- Kimberly, J. R., and R. E. Quinn. 1984. *Managing Organizational Transitions*. McGraw-Hill/Irwin.
- Klein, K. J., and R. J. House. 1995. "On fire: Charismatic leadership and levels of analysis." *The Leadership Quarterly* 62: 183-198.

- Kotter, J. P., and J. L. Heskett. 1992. *Corporate Culture and Performance*. The Free Press
- Lawler, E. E. 2007. *Built to Change: How to Achieve Sustain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trategic Direction.
- McGrath J. E. *Stres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 Parker, D.F , and T. A. Decotiis. 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60-177
- Parsons, S. K., W. P. Simmons, K. Penn, and M. Furlough. 2003.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nursing assistants: The results of a statewide surve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 51-58
- Petras, H., and K. Masyn.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In A. R. Piquero and D. Weisburd.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New York, NY: Springer.
- Price, J. L. 2001. "Reflections on the determinants of voluntary turn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2: 600-624
- Quinn, R. E., and M. R. McGrath. 1985. *Th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s: A Competing Values Perspective*. In P. J. Frost, L. F. Moore, M. R. Louis, C. C. Lundberg, and J. Martin Eds. Organizational culture. Sage Publications, Inc.
- Rafferty, A. E., and M. A. Griffin. 2004. "Dimension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nceptual and Empirical Extensions." *The Leadership Quarterly* 153: 329-354.
- Schein, E. H. 1983. "The role of the founder in creat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Dynamics* 121: 13-28.

- Schein, E. H. 1996. "Culture: The missing concept in organization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229-240.
- Shields, M. A., and M. Ward. 2001. "Improving nurse retention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England: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intentions to qui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5: 677-701.
- Stogdill, R. M. 1974.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Free Press.
- Vermunt, J. K., and J. Magidson. 2013. *Technical Guide for Latent GOLD 5.0: Basic and Advanced*. Belmont, CA: Statistical Innovations.
- Walumbwa, F. O., B. J. Avolio, and W. Zhu. 2008. "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aves its influence on individual job performance: The role of identification and efficacy beliefs." *Personnel Psychology* 614: 793-825.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hom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hanghwan Shin** · Jungkyu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home. First, we identified the care-givers' organizational culture profi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Subsequ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profiles and several auxiliary variables, includ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showed that derived four distinct profiles were identified with different culture strength and orientation. Moreov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s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culture profiles, while the effect of the culture profiles on turnover intention was also significant. Final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ed out to reduce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Key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Competing Value Model,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2021.09.28.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1.09.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309>

【연구경향】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

-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을 중심으로

김준석**·구본상***·최준영****

논문요약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을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하는 모형이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불참할 경우) 당일투표에 다시 투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형이다. 셋째, 유권자가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의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이다. 위의 의사결정모형은 서로 연결된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 선택을 다루고 있어 이론모형에 따라 다른 설명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하기 어렵다. 선택방정식에서 자료 절삭의 문제와 결과 방정식에서 이산 종속변수의 문제도 모수 추정 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한 ‘배제제약이 없는 이분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량(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사전투표보다는 당일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모형을 달리해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불참, 투표방식에 대한 신뢰,
이분-결과변수선택모형 추정량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국대학교, 교수

*** 충북대학교, 조교수

**** 인하대학교(교신저자), 교수

I. 들어가며

우리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유권자는 선거 당일 외에 선거일 직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먼저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전의 선거에선 선거 당일 하루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¹⁾ 토요일 투표가 가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주말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투표율의 상승이 기대되었다. 이후 열한 번의 선거가 이 제도와 함께 치러졌다. 사전투표는 자연스럽게 우리 선거제도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거센 흥역을 치렀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는 격한 대립상태에 있었다. 연 초 국회에선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의사당의 물리적 점거와 끌개 등의 물리적 도구가 다시 등장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은 과거의 유산처럼 여겼었지만, 자신의 밥그릇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몸으로 영켰다. 선거에선 여당의 정권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줄속으로 만들어 유권자에 들이밀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묻히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당 폭력까지 감수하며 도입된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민기 힘든 결과에 좌절한 야당의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투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당일 선거의 개표함의 집계로는 앞서고 있던 수도권의 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역전된 여러

1) 부재자 투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전 등록은 물론 투표 방법에 있어 현재의 사전투표제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했다.

사례가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여당에 몰표가 쏟아진 것은 조작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이 벌어졌고, 현재 이 문제는 일단은 마무리 된 듯하다.²⁾ 하지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일부 유권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출하며, 이러한 논란 자체가 제도의 온전성(integrity)에 생채기를 남겼다.

이러한 논란 이전에도 사전투표가 그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냐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크게 두 개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사전투표제도가 이전 선거에서의 투표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자들은 기존 당일 투표자로부터의 분산효과와 투표불참자의 유인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발견하였으며,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에 대한 관련 연구도 이어졌다. 둘째,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데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선 사전투표자가 투표불참자 및 선거당일 투표자와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는 사전투표에의 결정요인에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 등의 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한다(가상준 2020). 하지만, 유권자가 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지, 이러한 결정에 있어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편의의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유권자가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우리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사후 유권자 설문조사(post-election survey)를 자료로 활용한다. 이 보궐 선거는 사전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던 21대 총선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정권에 대한 평가와 연결할 만큼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선거이기도 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요인은 유권자가 사전선거에 대해 갖는 신뢰의 차이이다. 21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일부에 있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러한 유권자 인식차이가 투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살핀다. 사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면,

2) 21대 총선에 나타난 사전투표의 부정 논란 및 통계적 분석은 민인식·유경준(2021)을 참조하라.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한다는 진술 (혹은 발견은) 얼핏 동어반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개인차원의 행위를 넘어서 집단의 패턴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정치 전반은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특히, (일부일 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유권자가 제도를 신뢰하지 않아 특정 형태의 투표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인될 경우 그 함의는 더욱 커진다.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제고와 개선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분석은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확인한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우리는 유권자가 투표와 투표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성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유권자는 먼저 선거 전주 금-토의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와 불참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독립적인 참여의 기회로 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유권자를 설정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모형으로, 연구가설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분석법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통해 통계 모형을 추정한다. 사르토리는 기존의 해크먼(Heckman) 분석법에서 ‘선택 모형의 구분자 (selection equation identifiers)’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모형의 추정치를 불편 (unbiased)하면서도 효율적 (efficient)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지적한다. 정치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없는 구분자를 찾는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모형의 적절한 구성(model specification)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오히려 상황을 고려해 두 방정식의 오차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하는 것이, 정치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할 수 있다. 사르토리의 추정법은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선택 방정식과 결과 방정식에서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 기반 한다. 사르토리의 새로운 추정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단계적 선택의 통계적 모형에 적합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선 사전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를 다룬 최근의 연구를 정리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구성한다. 3 장에서는 실증모형과 더불어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4장에선 추정한 모형의 결과를 논의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투표 여부 및 투표방식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의 제시

1. 기존 문헌의 분석

그간 사전투표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연구의 상당수는 ‘사전투표제도가 과연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다룬다. 사전투표는 시간과 공간의 편의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자들은 상호 충돌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았으며, 이는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도입 초기의 연구는 사전투표의 효과에 대한 당위적 논의를 통해 그 효과를 논리로 끌어내거나, 개별 선거 간 투표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에 시간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전투표제도는 당연히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 것

이라는 논지다. 먼저, 그간의 투표불참자 중에는 투표를 원해도 당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등록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달라서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이 상당하다. 사전투표제도는 이들에 편의를 제공 하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 효과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³⁾

선거구별로 수집된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상승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각 선거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치러지게 되며, 투표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사전투표제의 영향인지, 외부의 제3의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사실 사전투표제도에 따른 유권자의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선 유권자 개인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강신구 2016). 만약 사전투표자가 (제도의 부재 시) 투표불참자로부터 이동한 것이라고 하면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자로 단순한 수평이동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투표율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투표불참자에 대한 사전투표의 유인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신(2014)은 지방선거의 지역 별 투표율에 대한 사전투표제도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사전투표 등 편의투표의 참여율 증가는 전체적인 투표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편의 투표의 투표율이 1% 오를 경우, 전체 투표율은 1.6%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⁴⁾ 김찬송·유재승·이현우(2016)는 사전투표자를 잠재적 일반투표자와 순수사전 투표자로 구분하고, 사전투표의 효과가 '순수 사전투표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⁵⁾ 윤기쁨·엄기홍(2016) 역시 2016년 지방선거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투표의 투표율 상승 및 기존 투표불참자의 동원 효과를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선택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설문을 통해 응답자를

3) 사전투표 도입 초기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점도 사전투표제가 그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하는 이들의 근거로 제시된다.

4) 강신구(2016)는 이러한 투표율 상승의 효과는 편의 투표가 아닌 제3의 요인의 영향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표율에 대한 집합적 자료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투표불참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인지,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로 분산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5) 여기서 순수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한 비율(%)을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로 곱한 값을 말한다 (김찬송 외 2016, 7)

투표불참자,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로 구분하고, 집단 간 유사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투표불참자와 사전투표자, 당일 투표자의 특성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비교한다. 사전투표자와 A라는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고, B라는 집단과는 다르다면, 사전투표자와 A 두 집단은 (사전투표라는 처리가 주어지기 전) 하나의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론하며, 이는 분산효과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다항 로지스틱 분석법을 활용하고, 2013년 이후 여러 선거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범위는 대통령 선거(가상준 2017b)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강신구 2016; 가상준 2017a; 가상준 2021; 이재목 2020)와 지방의회 선거(가상준 2016, 가상준 2018)에 이르며, 이들은 사전투표자의 집단적 특성은 당일 투표자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가상준(2020)의 연구는 유권자가 선거참여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힌다. 투표참가자와 투표불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자 및 사전투표자의 전반적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요인에 주목한다. 유권자가 주요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차이가 크다면 그는 선거일 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재목(2020) 역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중의 상당수가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전투표의 선택과 정치적 요인과의 연결을 주장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선거의 집합자료를 활용한 두 개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인서·백영민(2020)은 생태학적 추론 접근법을 활용해 개별 투표구에서 사전투표의 비중과 그 변화를 추정한다. 생태학적 추론 연구법은 과거와 현재의 집합자료를 연결하여 각 단위의 조건 확률과 신뢰구간을 추정한다.⁶⁾ 사전투표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분산효과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기존 투표불참자 집단의 유인효

6) 예를 들어, 만약 연구자가 동일한 선거구에 대해 두 시기의 선거참여에 대한 집합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자. 해당 선거구에 대해 첫 시기의 투표참여율과 불참여율, 두 번째 시기의 투표참여율과 불참여율의 교차분석표를 만들고, 이 표 안의 값을 측정해야 할 변수로 정하게 된다. 각각의 칸(cells)의 값은 조건 확률로 표기될 수 있다. 각 관측치 만큼의 교차분석표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를 집산하여 각 칸(cells)의 조건 확률을 구한다. 베이즈 공리(Bayes Theorem)가 활용된다.

과도 확인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불참자의 유인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1,000명 내외의 설문조사의 소규모 표집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다.7) 임성학(2020)의 연구는 서울시 동별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율의 상호작용을 검증한다. 21대 총선 실제 투표율 자료를 공간적 자기 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관내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율의 상쇄 관계가 확인되었다. 관내의 사전투표율이 2% 정도 올라가면 본 투표율은 1% 낮아진다는 발견이다. 이 연구 역시 사전투표자의 상당수가 기존의 투표불참자가 아닌 당일 투표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8)

2.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의 선택 모형

우리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모형을 추정한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심한 경우 다음 단계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참여 방식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유권자가 투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 상황마다 투표 여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유권자는 적어도 두 번의 투표 기회를 갖게 된다. 선거 직전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며, 투표와 불참의 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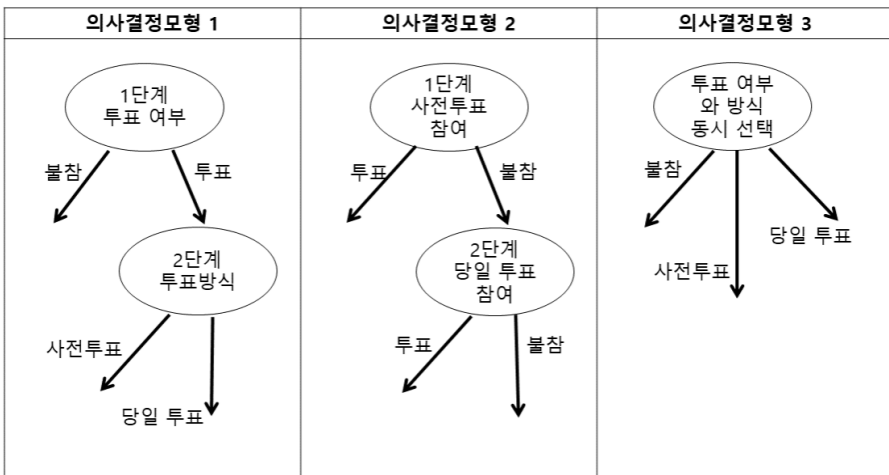
7) 박인서·백영민(2020)의 연구결과는 통계적 신뢰구간의 설정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구간을 90%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가 추정한 총선투표참여방식의 전이확률 점 추정치의 구분은 이러한 90% 신뢰구간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19대 총선에서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가 적용된)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로 유인되었다는 근거를 사전투표선택 전이확률로 설명하고, 신뢰구간 90%에서는 사전투표선택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구분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95%의 신뢰구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전투표 전이확률의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의 전이확률은 중첩된다. 즉, 95%의 신뢰수준에서는 사전투표 전이확률의 추정치와 당일투표선택 추정치는 구분될 수 없다. 또한 저자들은 신뢰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베이지안 방식으로 확률변수(a random variable)의 분포를 확인한 것임으로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이 적합하다.

8) 이 수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간 상쇄를 보여주는 것 보다 사전투표율이 전반적 투표율 향상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다. 오직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만 선거 당일 투표의 기회가 주어진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 결정을 하고, 이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만이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결정나무(a decision tree)의 형태를 띤다.

세 번째는 이전의 많은 문헌들을 통해 추정되었던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따른다. 이미 투표 여부와 투표 방식을 선택한 유권자의 자료를 토대로 사전투표자, 당일투표자, 투표불참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자를 기저집단(base group)으로 설정하고,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 사전투표자와 투표불참자를 구분한다. 다항 로지스틱 모형이 ‘선택(choice) 모형’이란 점을 상기하여, 유권자의 선택의 시각에서 재정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참여와 참여 방식을 단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 당일투표, 투표 불참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1]은 유권자가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형 세 가지를 의사결정나무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의사결정나무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방식에 대한 선택에 있어 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하나의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논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다양하며, 위 세 가지의 의사결정 모형 중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결심하게 되는지는 차라리 임의의 선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의사결정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는데 연구의 방점을 둔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투표 참여의 제 요인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및 후보자·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포함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 모형에 포함된 핵심 변수의 가설과 측정방법,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III. 모형과 가설

위에서 서술된 유권자 개인의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모두 6개의 통계 모형이 추정된다. 각 모형 집단 별로 하나의 기본모형과 유권자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정당 일체감의 유무 등 정치변수를 포함한 확장모형이 추정된다. [의사결정모형 1]은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의 단계별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에 참여할지 불참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할 경우 1의 값으로 입력되고, 불참할 경우 0의 값으로 입력된다.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절삭되어 결과방정식의 추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단계 선택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결과방정식에서 투표에 참여한 방식을 묻는다. 사전투표는 0의 값으로 입력되고, 당일투표는 1의 값으로 입력된다.

[의사결정모형 2]의 경우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2단계를 취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모형 1]과 유사하지만, 유권자에 주어진 선택지가 다르다. 유권자는 먼저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면 (혹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할 경우 0의 값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결과방정식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정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참여와 불참의 선택을 한다. 참여의 경우 1의 값을, 불참의 경우 0의 값으로 입력된다. [의사결정모형 1]과 [의사결정모형 2] 모두 두 개의 이산응답모형(binary response models)이 연속된 형태를 취하며, 선택방정식의 단계에서 응답에 따라 결과방정식에서의 자료가 절삭(censored)된다.⁹⁾

[의사결정모형 3]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다항로지스틱 분석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 사전투표자 집단을 기본그룹으로 설정하고, 투표불참자와 사전투표자, 당일투표자와 사전투표자의 차이와 개별 설명요인의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 모형의 공통 설명변수로서 크게 두 개의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응답자가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뢰의 차이를 변수로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한다. ‘응답자가 사전투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정도를 직접 묻은 문항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 변수가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지난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태도가 일부 보수진영에서 표출되었다. 특히, 여러 경합지역에서 나타난 사전투표에서의 여당의 우위는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음모론과 연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을 통해 유권자 일부에 대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정선거’ 논란의 진위가 아니다. 유권자중 일부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다르게 두고 있고, 그 차이에 따라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선택을 달리하는지의 여부다. 이번 서울 시장 재보선은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투표 형태의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일수록 당일 투표를 선택할

9) 사르토리(Sartori 2003)의 분석법에서는 각 집단은 0, 1, 2의 값을 갖도록 입력한다. [의사결정모형 1]의 경우 투표불참 0, 사전투표 1, 당일투표 2의 값을 갖게 된다. [의사결정모형 2]의 경우 사전투표 0, 투표불참 1, 당일투표 2의 값으로 입력된다. 다만, 이러한 종속변수의 코딩의 문제는 단순 자료의 입력 방식의 차이로, 위의 설명한 방식과 내용 상 동일하다.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과 동일하다.

얼핏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은 동어반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선택할 때 단순 편의에 따라 판단한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와 사전투표의 선택 간에는 어떠한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신뢰와 행동이 특정한 경향을 띠고 그 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적 함의는 크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사전투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선거 당일 투표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진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선호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유권자가 갖는 후보/정당에 대한 상대적 호감의 차이이다. 이 변수들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지 않는 (주요)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느끼는 호감(혹은 당선 시의 이익)의 차이가 크다면, 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¹⁰⁾ 이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자 당선 시의 혜택을 재조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시의 혜택은 다분히 상대적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보다 더 이익(혹은 더 큰 효용)이 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서울시장 재보선과 같은 대단위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10)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당선권에 유력한 후보자에 한한다. 유권자가 차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일 수도 있고, 당선권에는 근접해 있으나 유권자가 당선될 바라지 않는 후보일 수 있다. 통상 한 선거에서 두 명의 당선 유력 후보를 전제로 할 때 이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들에게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신의 표가 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면 해당 개인의 투표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보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높아서 일 수도 있고(열광적 지지자), 혹은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대단히 낮아서일 수도 있다.

낮다. 하지만, 내가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거나, 당선이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투표 참여에 대한 심리적 동인으로서 이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사전투표자와 당일 투표자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가상준 2021).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에게 이번 선거의 (당선권에 근접한) 두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정도를 0에서 10의 범위의 정수로 답하게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에 대한 호감 점수를 다른 후보의 호감 점수에 뺀 후 절댓값을 취한다.¹¹⁾ 이에 대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유권자의 주요 두 정당에 대한 호감의 차이 역시 같은 논리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주요 후보자에 대한 호감 차이]

유권자가 당선에 유력한 후보자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가설 2-2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 차이]

유권자가 유력 두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개인의 투표 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임성학(2020)의 연구 역시, 선거구 내 기초수급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통제변수로 포함되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중에서 개인의 소득과 개인의 직업 안정성을 주목한다. 특히,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개인의 정규직 여부가 투표에의 경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 참여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직업이 정규직에 속할 경우 그 직업적 안정성이 투표에 참여

11) 이 연구는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차이를 |박영선 후보에 대한 호감- 오세훈 후보에 대한 호감| 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하고자 하는 동인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윤회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1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 (소득 수준)]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3-2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

응답자가 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비정규직 및 자유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의 변수로 응답자의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과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의 유무 역시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교육 수준, 자가주택 소유 등이 포함된다. 거주지역은 응답자 중 강남 3구 거주자를 나타내는 가변수로 구성한다. 자가주택 미소유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입력되었다.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는 응답자가 특정정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이를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와 그 설명은 아래 <표 1>로 정리한다.

<표 1> 모형에 포함된 변수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 공통)

변 수		설 명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신뢰한다. ④ 매우 신뢰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요인	후보 선호차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 선호차	민주당과 국민의힘 호감 차이의 절대값
	정당일체감	특정 정당에 정당일체감 보유 여부 (있음 1, 없음 0)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여성 1, 남성 0)
	연령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 (강남지역 거주자 1, 그 외 지역 거주 0)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근무 1, 그 외의 경우 0
	소득수준	응답자의 소득 수준
	주택 미소유	응답자의 주택 소유 여부 (1 주택 미소유, 0 그 외의 경우)

통계적 모형의 추정에서 위의 두 개의 단계적 선택모형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 참여와 불참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선택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는 사전투표에의 참여와 불참의 결정을 한다. 만약 불참하는 경우 선거 당일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이때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아닌 경우는 선거불참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단계 별로 의사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의 두 개의 모형이 순차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선택 방정식에서 결과방정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관측치의 상당수가 절삭(censored)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 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방정식의 오차가 상관되어(correlated)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방정식은 물론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값이 모두 이산의 선택(binary choices)을 다루는 점도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삭 자료에 대한 Heckman 추정법(Heckman models)은 이른바 ‘구분자 변수(identifier variables)’를 찾고 이를 이론적으로는 물론 통계분석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 ‘구분자 변수’는 선택방정식에는 영향을 주지만, 결과방정식의 종속변수의 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모형의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자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동일 요인의 영향이 크고, 선택과 결과가 짧은 기간 동안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이 연구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 여부 및 투표 방식의 결정모형의 순서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모형으로 시도 하려는 경우 선택방정식에는 포함되지만, 결과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분자 변수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의 경우 제시된 의사결정모형에 따라 선택방정식과 결과방정식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차라리, 두 개의 방정식에 동일한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정과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한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을 채택해, 모형을 추정한다.¹²⁾ 사르토리는 기존의 해크먼 분석법이 자료의 절삭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선택모형에 대한 구분자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제시한 점을 상기시킨다. 굳이 선택모형에 필요 없는 구분자를 넣지 않고도, 오차의 분포에 대한 추가적 가정만으로 모형의 추정치를 불편(unbiased)하면서도 효율적(efficient)으로 계상할 수 있다.¹³⁾ 정치학의 여러 문제에 있어 연속되는 두 개의 결정은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굳이 이론이 유도하지 않지만 모형 추정의 필요 때문에) 없는 구분자를 찾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모형의 적절한 구성(model specification)의 문제에도 부딪치게 된다. 사르토리는 선택과 결과방정식의 개별 관측치의 오차가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설정한다.

사르토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연구문제가 부합될 경우 위와 같은 가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첫째, 모형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방정식이 비슷한 결정이나 목표를 포괄할 것, 둘째, 선택방정식과 결정방정식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 동일한 요인이 설정될 수 있을 것, 셋째, 두 개의 결정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 조건이다. 특히 이러한 조건은 게임이론의

12) 사르토리(Sartori 2003)는 해당 추정법에 대해 특별히 명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사르토리의 연구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사르토리의 추정법’ 등을 통해 이를 지칭한다.

13) 해크먼(Heckman 1979)의 연구는 자료 절삭에 따른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구분자를 포함하거나, 오차의 분포에 대해 가정을 더하는 (assumptions about distribution assumption of errors) 방식을 제시한다.

모형이나 다른 합리적 선택 모형을 통계로 검증할 경우 적합할 것이라 설명한다.

우리의 모형은 사르토리의 위 세 조건에 부합된다. 첫째, 우리의 모형은 사전투표-당일투표-투표불참의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 개인의 다양한 결정과정의 모형을 설정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모형화하든 두 방정식의 질문은 투표의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둘째, 핵심요인인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물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요인의 변수를 공통요인으로 전제한다. 셋째, 우리 모형은 유권자 개인의 연속된 선택을 다룬다. 투표를 결정하고 투표방식을 결정하든, 사전투표를 결정하고 당일투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든 동일한 개인이 연속된 선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르토리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IV. 분석결과와 해석

이 연구는 한국정당학회와 케이스탯(K-STAT) 리서치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의 사후 선거 여론조사(post-election survey)의 형태로, 서울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령/성별/지역별 할당을 맞추어 조사되었다. 설문의 응답자 중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92.2%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의 선거에서 나타난 최종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으며,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이 실제 선거 자료에 비해 대단히 높은 데 비해, 투표를 한 응답자 중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의 비중은 실제의 선거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표 2>는 설문 응답자의 투표와 투표 방식 선택의 비중과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실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자의 투표 방식 선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¹⁴⁾

14)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의 특성상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의 유권자가 설문에 포함될 수 없었다.

〈표 2〉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투표율과 설문 응답자의 투표율 비교

	투표율 전체	사전 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투표자 (응답자) 수 대비	
				사전투표율	선거일 투표율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¹⁵⁾	58.2%	21.9%	36.3%	37.7%	61.2%
연구의 설문조사	92.2%	37.2%	55.0%	40.3%	59.7%

〈표 3〉, 〈표 4〉, 〈표 5〉는 [의사결정모형 1, 2, 3]의 여섯 개 모형의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기본모형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변수만을 포함한다. 확장모형은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유무,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 차이, 유력 정당들에 대한 호감 차이의 변수가 포함된다. 핵심 변수인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변수의 영향이 모형이 확장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응답자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과 〈표 4〉의 [의사결정모형 2], 〈표 5〉의 [의사결정 모형 3]의 모든 모형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사전투표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가 적은 유권자일수록 선거 당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동어반복과 같은 이러한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없다면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전투표의 선택 문제가 단순한 편의의 제공에 대한 문제라면, 어떠한 패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사전투표제도에 갖는 신뢰의 차이는 그 사람이 투표를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4. 7. 재·보궐선거 투표분석.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6271>
 (검색일: 2021. 6. 3).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투표를 결심하면 투표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모형은 물론 정치변수가 포함된 확장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4>의 [의사결정모형 2]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사전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부여되는) 당일선거의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 응답자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선택하지 않고 당일 투표와 투표 불참의 선택지를 택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주어지는 투표불참과 당일투표 참여의 선택지에 대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신뢰 변수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¹⁶⁾ 이는 투표불참을 선택한 응답자들과 당일투표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표 5>의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¹⁷⁾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 상당수의 낮은 믿음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와 그 이후 진행된 보수 일각의 ‘부정선거’론에 상당수 기인한다.¹⁸⁾ 이 논란들은 그 진위와 관계없이 유권자 일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위의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당일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설문조사에서 당일투표자 중 17.5%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당일투표를 택했다고 답했다.¹⁹⁾ 우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응답자 일부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16)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는 부정적 태도(1)에서 긍정적 태도(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7)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변수가 기본모형에서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선택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우리의 가설과는 달랐다. 다만 확장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우리의 가설에 부합한 결과가 나타난다.

1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선거의 부정 의혹을 줄기차게 지적하였고, 이에 월터 메베인(Walter Mebane) 미시간대 교수의 분석, 민경욱 전 의원 등과 같은 보수정치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 등으로 확산되었다.

19) 우리는 당일투표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선거 당

은 학문은 물론, 정치 현실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에 대한 불신 자체를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는 [의사결정모형 1]과 [의사결정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95% 신뢰수준). 먼저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정규직일 경우 (정규직이 아닌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가 일단 투표를 결심하고 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선택하는 데에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다. <표 5>의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의 정규직 여부는 그 사람의 투표불참과 사전투표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신뢰수준 95%). 정규직 변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함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와 상당부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권자의 사전투표 선택을 연구한 일군의 학자는 사전투표가 제공하는 시간적-공간적 편의가 이미 투표를 결심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사전투표제도에 따른 분산효과가 유인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불참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결정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전투표가 투표 시간을 확대하고 장소의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불참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이러한 편의의 확대가 투표를 진작시키는 핵심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²⁰⁾

응답자의 투표 참여의 선택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중요했다. <표 3>의 [의사결정모형 1]과 <표 5>의 [의사결정모형 3]에서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갖고

일에 투표하는 것이 익숙해서 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를 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해서 (26.0%)가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17.5%), 사전투표 기간까지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아서(9.6%), 기타(1.8)의 순이었다.

20) [의사결정모형 2]를 추정한 <표 4>의 모형 1(기본모형)에서는 정규직 변수는 사전투표참여를 결정할 때 부(-)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규직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모형 2]의 확장형 모형인 [모형 2]에서 정규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있느냐의 여부와 박영선-오세훈 후보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변수 모두 우리가 제시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95% 신뢰수준).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후보 간 호감 차이를 크게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와 응답자의 후보 간 선호차이 변수는 투표불참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졌다면, 응답자가 갖는 후보 간 호감도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불참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²¹⁾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가 출마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에 수반되는 비용과는 별도로, 유권자는 당선되는 후보자가 주는 심리적(혹은 물리적)인 효용의 차이에 중요하게 반응하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도 있다. 이 변수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 대한 ‘단순’ 호감도의 차이일 뿐, 이 두 후보의 당선과 낙선이 응답자에게 주는 직접적인/물리적인 효용을 반영하진 않는다.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응답자의 투표방식의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변수가 결과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응답자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최근의 연구(가상준 2021; 이재묵 2020)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상준(2021)은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의 상승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졌음에 주목하며, 이를 유권자가 정당 간에 느끼는 호감도의 차이로 설명한다. 유권자가 주요 두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차이가 클수록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가 투표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는 확인하였으나, 정당 간 호감도의 차이의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²²⁾ 우리의

21) 이는 기준이 되는 집단을 사전투표자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일투표자로 설정하고 투표불참/당일투표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2)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는 <표 3>, <표 4>, <표 5>의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

결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의 차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특성 상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 변수만을 포함한 것과 달리, 우리의 연구는 정당 간의 호감도 차이와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 변수를 세분하여 모두 모형에 포함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성별 변수는 [의사결정모형 1, 2, 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성이 당일투표를 사전투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석되나,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의 투표 여부 선택 → 사전투표/당일투표의 선택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사전투표/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사전투표/당 일투표 결정 (결과방정식)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022 (0.12)	0.180** (0.08)	0.000 (0.13)	0.189** (0.08)	
	연령	0.005 (0.00)	-0.002 (0.00)	-0.001 (0.00)	-0.002 (0.00)	
	강남거주	0.254 (0.16)	0.142 (0.1)	0.203 (0.17)	0.134 (0.1)	
	교육수준	0.048 (0.03)	0.008 (0.02)	0.046 (0.03)	0.006 (0.02)	
	정규직	0.395** (0.13)	-0.008 (0.09)	0.361** (0.14)	-0.008 (0.09)	
	소득수준	0.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	
	주택 미소유	-0.091 (0.12)	-0.044 (0.09)	-0.064 (0.13)	0.04 (0.09)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0.028 (0.07)	-0.229*** (0.05)	-0.078 (0.08)	-0.236*** (0.05)
	후보/정당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5** (0.15)	0.122 (0.09)
		정당선호차			-0.535 (0.35)	-0.331 (0.21)
후보선호차				1.417** (0.36)	0.223 (0.21)	
	상수	0.677 (0.4)	0.483 (0.29)	0.795 (0.42)	0.491 (0.29)	
	관측치	1,000	922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78		78	
	log Likelihood		-861.5453		-841.2	
	χ^2		24.083***		52.806***	

1) 신뢰도의 표기 ** p < 0.01, * p < 0.05

2)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표 4〉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의 사전투표 결정 → 응답자의 당일투표 결정				
변수		모형1		모형2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사전투표/ 불참결정 (선택방정식)	당일투표/ 불참결정 (결과방정식)	
공통변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0.187* (0.09)	0.176* (0.08)	0.170* (0.09)	0.200* (0.09)	
	연령	-0.004 (0.00)	-0.002 (0.00)	-0.003 (0.00)	-0.002 (0.00)	
	강남거주	0.049 (0.1)	0.15 (0.1)	0.067 (0.10)	0.159 (0.1)	
	교육수준	0.001 (0.02)	0.009 (0.02)	-0.003 (0.02)	0.011 (0.02)	
	정규직	-0.188* (0.09)	-0.003 (0.09)	-0.129 (0.09)	-0.028 (0.09)	
	소득수준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주택 미소유	0.112 (0.09)	0.043 (0.09)	0.103 (0.09)	0.031 (0.09)	
	사전투표의 신뢰	사전투표	-0.252** (0.05)	-0.236** (0.05)	-0.225** (0.05)	-0.243** (0.05)
	후보/정당 선호도 차이 + 정당일체감유무	정당일체감			-0.033 (0.1)	0.14 (0.1)
정당선호차				-0.16 (0.22)	-0.317 (0.21)	
후보선호차				-0.167 (0.21)	0.257 (0.21)	
상수	0.975** (0.29)	0.492 (0.29)	1.01** (0.3)	0.439 (0.3)		
관측치	1000	628	1000	628		
절삭된 관측치		372		372		
log Likelihood		-861.569		-843.63		
χ^2		45.75***		45.67***		

1) 신뢰도의 표기 **p < 0.01, *p < 0.05

2)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표 5〉 응답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방식 선택의 회귀분석 결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본집단: 사전투표자)						
변수		모형1		모형2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투표불참/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공통변수 (사회경제 적 배경)	성별	0.236 (0.27)	0.318* (0.14)	0.106 (0.28)	0.310* (0.14)	
	연령	-0.015 (0.01)	-0.006 (0.01)	-0.005 (0.01)	-0.005 (0.01)	
	강남거주	-0.35 (0.36)	0.164 (0.17)	-0.289 (0.37)	0.168 (0.17)	
	교육수준	-0.092 (0.07)	0.001 (0.04)	-0.06 (0.07)	0.004 (0.04)	
	정규직	-0.957** (0.28)	-0.205 (0.15)	-0.941** (0.29)	-0.203 (0.15)	
	소득수준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주택 미소유	0.335 (0.27)	0.152 (0.15)	0.243 (0.28)	0.138 (0.15)	
	사전투표 의 신뢰	사전투표 신뢰정도	-0.351** (0.16)	-0.434** (0.09)	-0.239 (0.18)	-0.418** (0.09)
	후보/정당 선호도차 이 + 정당일체 감유무	정당일체감			-0.981** (0.33)	0.044 (0.16)
		정당선호차			0.549 (0.72)	-0.394 (0.36)
후보선호차				-2.971** (0.77)	-0.071 (0.35)	
	상수	0.732 (0.86)	1.423** (0.5)	1.005 (0.91)	1.475** (0.51)	
관측치		1000		1000		
절삭된 관측치						
log Likelihood		-861.1306		-839.1545		
χ^2		69.03567***		112.9878***		

1) 신뢰도의 표기 ** p < 0.01, *p < 0.05

2) 회귀계수, ()은 표준오차

V. 결론

이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유권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선택의 요인을 살펴본다. 이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의 논란이 되었던 사전투표 부정 시비와 관련하여 그 영향으로서의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차이와 행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정도는 다르며, 이러한 인식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행태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투표의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우리의 의사결정모형은 세 가지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할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차적 모형이다. 이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둘째, 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모형이다. 유권자는 먼저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유권자가 선거불참, 사전투표 참여, 당일투표 참여의 세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모형도 함께 추정된다. 이러한 모형은 이전의 연구에서 모형 구성을 가져왔으며, 연구가설 역시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설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방식의 결정 요인의 검증에 엄밀함을 기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추정방법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 사르토리(Sartori 2003)가 제시하는 ‘배제 제약이 없는 이분 결과변수 선택 모형의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사르토리의 접근법은 게임이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혹은 동일 행위자)의 단계적 선택을 통계 모형으로 변환하는데 적합하며, 우리의 모형에 부합한다. 넷째, 이 연구는 유권자 개인의 차원에서 ‘재보선 선거’에의 투표

참여를 분석한 많지 않은 연구이다. 향후 재보선 관련 투표 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하여, 우리의 연구는 투표의 결정에 있어 덜 주목받았던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 등의 변수는 그간의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않았던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당선 시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의 차이에 따라 투표에 대한 동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계를 통해 보여준다.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가 활용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의 자료라기보다는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선거 후 사후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투표 여부에 대한 응답이 과다 대표되었거나, 과대표집 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 관련 조사 대부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나, 과연 이 연구가 사용하는 설문조사가 보궐선거의 유권자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의 해석은 물론 향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끌어낸 연구 결과의 상당수가 이번 서울 시장 보선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기인한 바가 많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의 차이 등은 21대 총선 이후의 온라인상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 제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향후의 선거에서 사전선거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나타날지, 또한 투표행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지는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선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제고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1호: 5-28.
- 가상준. 2017a.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 분석.” 『동서연구』 제29권 2호: 1-26.
- 가상준. 2017b.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입법과 정책』 제9권 3호: 217-239.
- 가상준. 2018. “사전투표 유권자의 특징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4호: 99-120.
- 가상준. 2020.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 유권자의 특징과 투표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55권 2호: 89-108.
- 강신구. 2016. “사전투표제도와 투표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30권 1호: 225-251.
- 김찬송·유재승·이현우. 2016. “사전투표자 세부분석- 20대 총선과 순수사전투표자.”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권 4호: 1-23.
- 민인식·유경준. 2021. “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계량경제학적 관점.”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1호: 61-86.
- 이상신. 2014. “사전투표의 명과 암: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의 가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권 1호: 33-60.
- 이재묵. 20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분석.”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2호: 1-23.
- 임성학. 2020.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관내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율: 제21대 총선 서울시 동별 분석.” 『의정연구』 제60권: 113-140.
- 윤기쁨·엄기홍. 2016. “사전투표제가 새로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동원하였는가?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미래정치연구』 제6권 2호: 31-53.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

- 회보』 제40권 2호: 75-9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2021.4.7. 재·보궐선거 투표분석.”
<https://www.nec.go.kr/site/nec/> (검색일: 2021. 6. 3).
- 천승호·임요한·박민규. 2021. “출구조사를 이용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 수 예측결과 분석.” 『조사연구』 제22권 1호: 1-23.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25-42.
- Sartori, Anne E. 2003.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irctions.” *Political Analysis*. 11: 111-138.
- Shepsle, Kenneth. 2010. *Analyzing Politics*. 2nd edition. New York. Norton Co.
- Toomet, Ott, and Arne Henningsen. 2008. “Sample Selection Models in R: Package sampleSelection.”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27(7). 1-23.
- Toomet, Ott, and Arne Henningsen. 2020. “Sample Selection Models in R: Package sampleSelection.” Unpublished Manuscript.
- Toomet, Ott, and Arne Henningsen. 2020. *sampleSelection: R package version 1.2-12*, URL <http://CRAN.R-project.org/package==sampleSelection>.

Explaining Whether and How to Vote: Confidence in Early Voting and Voting Method Selection

Junseok Kim*·Bon Sang Koo**·Jun Young Choi***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voter turnout and the choice of voting method by paying attention to voters' confidence in the early voting method. It constructs three decision-making models. In the first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r not first, and if they vote, they subsequently decide how to vote (early voting or election day voting). In the second model, voters decide to vote on the early voting day. If they do not vote on the day, they get another chance to vote on the election day. In the third model, voters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participation in early voting, voting on the election day, and absence. Since all the theoretical models deal with voter turnout and voting method selection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statistical models face challenges in including different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models. Researchers should also consider the problems of censored data in the selection equation and binary choices in the outcome equation when estimating the parameters. To handle these problems, this paper adopts an estimator for some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without exclusion restrictions suggested by Sartori (2003).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en voters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early voting, they are likely to choose election-day voting over early voting. This find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ardless of decision-making models.

Key words: early voting, election-day voting, confidence in the method of voting, estimator for binary-outcome selection models

투고일: 2021.10.01.

심사일: 2021.10.16.

게재확정일: 2021.1.01.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in Seoul

**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Inha University